

제439회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의록
(정기회)

제 2 호

(임시회의록)

국회사무처

일시 2026년9월15일(화)

장소 재정경제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인사청문요청안
-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인사청문회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359)

상정된 안건

-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인사청문요청안 2
-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인사청문회 2
- 의사일정 상정의 건 114
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359) 114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조승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심사 및 의결 시점에 대해서는 간사님들과 협의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위원님들 일정도 있으니까 가능하면 예측할 수 있도록 일정을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녹화중계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공직후보자의 답변 그리고 공직후보자의 마무리발언을 듣는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은 경제정책 전반을 총괄하면서 물가와 민생의 안정, 경제성장과 일자리, 세제와 국제금융 등 주요 경제 현안을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우리 경제의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민생경제 회복의 체감이 더딘 상황에서 경제의

활력과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가 우리 경제가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고 경제정책을 이끌어 갈 자질과 능력이 있는지 공직자로서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일 후보자께서도 청문회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인사청문요청안

2.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인사청문회

(10시03분)

○위원장 조승래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인사청문요청안 및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인사청문회를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6년 9월 15일

공직후보자 이형일

○위원장 조승래 다음은 공직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일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존경하는 조승래 재정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로서 자질과 업무수행 능력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을 경청하고 성실하고 솔직한 자세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경제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AI 수요 확대에 기인한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수출과 투자를 비롯한 주요 경제지표가 개선되며 경기 회복의 흐름도 한층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소비와 고용도 시차를 두고 개선되면서 금년도 3% 성장이 가시화되고 1인당 국민소득도 4만 불대로 한 단계 올라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현재의 기회에 안주하기보다 앞으로의 위협에 대비해야 합니다. 확보된 정책 여력을 발판으로 기존 산업을 더욱 고도화하고 경쟁국의 추격을 따돌릴 수 있도록 새로운 성장엔진을 발굴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이어 나가야 합니다.

글로벌 통상 질서의 불확실성과 중동 전쟁 등 지정학적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경제 체질을 완성해야 합니다.

산업 간, 지역 간, 세대 간 양극화를 위시한 누적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여 성장의 온기가 모든 국민들에게 확산되고 더 높은 성장의 단계로 연결될 수 있도록 경제 구조를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의 경제 철학은 분명합니다. 창의와 활력을 존중하는 시장경제의 원칙을 지키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 정부가 필요한 적극적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부총리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전환점에 선 우리 경제 상황을 똑바로 직시하고 비상한 각오로 세 가지 과제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첫째, 경기 회복의 온기가 민생 곳곳에 고르게 퍼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물가 안정은 민생경제의 기본이자 양극화 해소의 출발점입니다. 장바구니 물가의 부담을 덜고 농축산물·석유류 가격 안정에 힘쓰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물가 안정의 구조적 요인을 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자리와 소득 기반 확충에도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지역이 수도권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산업과 투자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사회 전반의 이동성과 기회를 넓혀 출발점의 차이가 삶의 격차로 굳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년,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상대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부문을 과감하게 지원하여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경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거시경제의 안정을 지키고 경기 회복세를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반도체 업황 및 글로벌 금리의 변화와 자본 흐름 등 잠재적 위험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거시경제를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국가의 핵심 전략 자산이 될 미래 청정에너지,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등 7대 첨단기술, 일명 7-SEED를 완성해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글로벌 영향력이 커진 K-컬처가 방증하듯 성장의 또 다른 축으로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콘텐츠, 푸드 등 앞서 나가는 분야에 더해 관광, 모빌리티 등 다양한 분야를 함께 키워 나가겠습니다.

기업이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낡은 규제를 혁신하고 현장의 애로를 직접 들으며 경제의 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돕겠습니다.

셋째, 글로벌 역량 제고와 흔들리지 않는 대외정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WGBI 가입으로 제고된 글로벌 위상을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통해 이어 나가는 한편 원화 국제화를 위한 노력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지정학적 위험이 높아진 상황에서 공급망 확보는 생존을 위한 싸움입니다. 비축 확대, 대체 수입선 확보 등을 통해 경제의 아킬레스건을 없애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글로벌 신평사들이 우리나라를 지속적으로 투자에 매력적인 국가로 평가할 수 있도록 대외 신인도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에게 경제부총리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다면 지난 30여 년간 쌓아온 노하우와 위기 극복 경험을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기반을 만드는 데 온 힘을 쏟겠습니다.

경제부총리로서 각 부처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경제팀을 원팀으로 이끌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처 간 이해를 넘어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 결정에 책임을 지고 실천하는 경제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과 시장의 목소리를 가까이서 듣고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때까지 책임 있게 챙기는 경제팀이 되겠습니다.

청문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승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후보자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자료 요구……

○위원장 조승래 잠시만요. 안내 먼저 해 드리고요.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주질의시간은 여야 간사 간 협의에 따라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민국 위원님 자료 요구……

○배준영 위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조승래 그러면 배준영 간사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영 위원 배준영 국민의힘 간사입니다.

위원장님, 국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사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의 컨트롤타워인 경제부총리이자 재경부장관의 청문회는 그 어느 청문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부는 잘못된 부동산정책, 최악의 세제개편안, 실패한 물가대책, 원칙 없는 노동정책 등으로 국민들에게 좌절을 안기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에 책임이 있는 후보자 그리고 앞으로 이 혼란을 해결할 후보자가 과연 자격이 있는지 검증하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듣는 것이 이번 청문회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후보자와 민주당은 이런 요청을 모두 건어왔습니다. 우리 재경위는 정쟁 말고 오로지 정책에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핵심 경제참모이자 후보자와 긴밀한 정책 협의를 해 온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또 이번 청문회의 가장 핵심적인 세제개편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취지를 묻고자 현직 공무원인 세제실장도 증인으로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정책을 검증받기 싫은 것입니다.

또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부동산 전문가 한 분을 참인으로 요청했습니다. 그는 최근 대통령간담회, 총리간담회에도 초청받아 의견을 낸 중립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거절했습니다. 민심도 듣기 싫은 것입니다.

요청한 자료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정책적 자료 요청에도 핵심을 뺀 영혼 없는 답변이 대부분입니다. 후보자는 개인 관련해서는 본인이 과천 집을 갭투자했는지 여부 그리고 과

천 집에 실제 2개월씩 두 번 거주했는지를 밝히려는 자료 요청에 모두 제대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거짓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부실하게 하면서 국민에게는 철저히 하라는 게 국민주권정부의 태도 맞습니까?

정부·여당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입틀막한 통과의례 청문회로 잠깐 편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졸속 청문회를 통해 국민들에게 미치는 해악은 앞으로 정권 내내 지속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격을 검증받기 싫다면 장관을 맡지 않으면 됩니다. 위원장님께서 우리 위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제대로 된 내용으로 모두 응하도록 후보자에게 확실히 당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기형 위원 위원장님, 저도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조승래 그러면 증인과 관련된 의사진행발언인 것 같으니까 오기형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고 그다음에 강민국 위원님 자료제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기형 위원 저도 짧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형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특히 재경위에서 늘 정책적으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검증할 것은 다 검증해야 되지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서로 준비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현 공무원 세제실장에 대해서는 이후에 국정감사 과정에서 논쟁할 기회가 있다, 그리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다. 지금 논의하는 증인들에 대해서 원래 후보자 본인 스스로가 그런 것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김용범 증인 부르는 것 이것은 정쟁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발목 잡기 하는 것이다, 그 점은 아니었고.

그다음에 참고인들 같은 경우도 저희도 한 명씩 같이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합의가 안 돼서 안 된 겁니다. 과정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 됐든 이 재경위에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실제 국정 전반, 특히 경제 전반을 책임지는 사령탑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정책적인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논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 토론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검증이 될 걸로 기대하고 또 오늘 준비된 상황 속에서 함께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승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국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국 위원 후보께서 모두말씀에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드리겠다는 말씀인데, 사실 자료를 지금 제출한 걸 보면 과연 이 말을 지킬 수 있을지 좀 의구심이 갑니다. 제가 다서 여섯 분 정도의 인사청문회 했는데 이렇게 부실한 자료제출이 없어요. 후보가 직접 지시한 건가 모르겠는데 참 답답하더라고요.

제가 다시 한번 더 우리 위원장님께 자료제출 요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기재부 차관보와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시절 종교단체에 200만 원 그리고 2023년 통계청장 시절에 종교단체 외에 일반 기부금으로 무려 1300만 원을 기부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소액 공제 내역들도 있지만 이 2건은 고위공직자 신분으로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치

고는 결코 적지 않은 액수입니다. 그래서 자료 요구를 드렸고.

그런데 개인 신상 자료라고 답변이 왔어요. 대한민국 국가 재정과 경제를 총괄할 재정경제부·부총리 후보가 기부 어디 한 건지 못 밝힐 정도면 부총리 안 해야지. 그리고 통계청장, 대통령 선임행정관, 기획재정부 차관보 직무 관련이 있거나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가에 대해서 국회에서 당연히 그것은 들여다볼 수 있는 거고 검증하는 거예요. 무슨 이것을 가지고 장관 임명이 오고 가는 것도 아닌데 그런 하나의 태도가, 이 자료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오전 중에 자료 요구를,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승래 알겠습니다.

지금 아마 종교단체에 기부한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살펴보셔서 필요한 자료는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자료제출요구요?

○이종욱 위원 자료제출입니다.

○위원장 조승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위원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입니다.

후보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들에 대한 자료 요구에 대부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깜깜이와 철저한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는데, 후보자의 과천 보유 주택과 실거주 여부 그리고 자녀의 위장전입 여부, 재산 형성 과정 등에 대한 검증을 위해 자료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우선 후보자의 장녀·장남의 출신 초중고, 대학교에 대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후보자가 2009년에 과천 주공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 그 이후에 전입신고된 기간은 단 4개월뿐입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과천 중앙동·원문동, 안양, 대전 등 열한 번이나 이사를 했는데 실거주했다고 주장하는 과천 자택의 전력 소비량은 일반 평균의 4분의 1에 불과합니다. 실거주 여부 및 위장전입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자녀들의 출신 학교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후보자 가족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에 집중한 ETF를 언제 취득했는지도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후보자는 잔고 증명상 확인이 어렵다 이런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보면 후보자 가족이 지난 3월 정기 신고 때와 비교하면 8개월 만에 4억 1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또 후보자와 배우자, 장녀가 가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집중된 ETF가 4억 1000만 원이나 됩니다.

그리고 후보자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고요. 재정부1차관으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등 금융정책 전반에 관여할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해충돌 의혹도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경우에 별다른 소득이 없는데 후보자가 통계청장이 된 2024년에만 총 4200만 원의 이자소득이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또 장녀는 학생 신분인 2021년부터 5년간에 1684만 원의 기타소득이 발생했습니다, 학생인데.

그래서 ETF 매입 시기, 자금조달 방식, 증여세 납부 여부에 대해서 소상히 검증하기 위한 증여세 납부내역, 소득금액증명원 세부 자료 등에 대한 제출을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앞서 말씀드린 이런 자료가 오전 중에 제출될 수 있도록 후보자에게 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승래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실무자들과 상의하셔서 제출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없으시지요?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박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영 위원 부산 남구 출신 박수영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우선 경제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으로 지명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감사합니다.

○박수영 위원 경제가 매우 어려울 때인데 중책을 맡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답변 잘하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영 위원 후보자님, 후보자로 내정됐다, 지명됐다는 사실은 언제 통보받으셨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장관 통보나 그것과 관련된 내용은 제가 후보자로서 답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수영 위원 아니, 통보를 언제 받았는지도 답변하기 어렵습니까? 그것 왜 그래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그것도……

○박수영 위원 그것 누구로부터 통보받았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운 위치인 것 같습니다.

○박수영 위원 아니, 태도가 지금 뭘니까?

청와대의 인사수석한테 받았습니까, 김현지 부속실장한테 받았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부속실장으로부터 연락받은 적 없습니다.

○박수영 위원 그러면 인사수석으로부터 받은 겁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그 부분은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수영 위원 공식 루트가 인사수석이고 인사수석으로부터 받는 게 당연한 거고 그렇다고 답변하면 될 것 가지고 도대체 어느 비선으로 받았기 때문에 누구한테 받았는지, 언제 받았는지 그 얘기도 못 한다는 겁니까?

답변 태도가 뭐 그래요? 그러면 뭘 답변할 거예요, 지금 청문회 하러 나와 가지고?

김용범 실장한테 통보받았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아닙니다.

○박수영 위원 그러니까 누구한테 통보받았는지 얘기를 해야 의혹이 없어질 것 아닙니까, 국민적인 의혹이? 이해가 안 가네.

시작할 때, 임명받을 때는 누가 했는지 청와대로부터 통보를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만들 때가 문제인데……

슬라이드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구윤철 전임자지요. 현재 부총리가 그만둘 때에 공항에서 미국으로 출국하려고 하는데 연락을 받았다, 이렇게 언론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국을 취소했다가 다시 그대로 출국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겁니다. 관료 출신 장관들 쓸 때는 잔뜩 쓰고 그만둘 때는 이렇게 냉정하게 출국하는 사람한테 상의 전혀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도 정말 과거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제가 청와대에서 인사수석실에 근무했는데 그때는 부총리쯤 되는 분, 장관쯤 되는 분들은 미리 상의를 하고, 언제쯤 발표하겠다, 후임자는 누구로 하겠다라는 것을 상의를 다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일회용 밴드도 아니고 적어도 부총리 되는 사람이 그만둔다는 얘기를 공항에서 출국 전에 통보받고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보자님은?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제가 말씀드릴 위치에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수영 위원** 그렇지요. 후보자님, 늘 그런 태도를 유지하시면 구윤철 부총리처럼 돼요. 갑자기 공항에서 통보받아서 집에 가야 되는 수가 생기는 겁니다.

이분만 그런 게 아니고 이재명 정권에서 고위공직자들 보세요. 전부 일회용 밴드 취급 받고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님하고 이명구 관세청장, 귀국하는 비행기 타고 내렸더니 그 사이에 교체가 되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사무실도 못 가고 집에 갔다는 건데 이게 말이 됩니까? 국토부2차관 갑자기 교체됐지요, 유재성 경찰청차장 1년 3개월 열심히 했는데, 밤 12시에 경찰청 간부들 일시에 교체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정부에서 인사를 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후보자님도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하셔야 돼요.

다음, 이런 얘기 있지요. ‘집은 바이하는 게 아니고 리브하는 곳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후보자님 입장은 어떻게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저는 집이 거주 중심의 주택문화가 정착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수영 위원** 필요하다, 쉽지 않다 뭐……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수영 위원** 필요하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거주 중심의 주택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수영 위원** 거주 중심으로, 그러니까 바이는 하지 말고 리브해야 된다는 이 의견에 동의하시네요, 전임 부총리가 얘기했던?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이것은 유엔에도 나와 있는 주거문화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박수영 위원** 본인이 그런 생각을 하시면 소신 있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본인은 왜 그렇게 안 살았지요? 본인은 집 언제 샀어요, 과천 집?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2009년에 샀습니다.

○**박수영 위원** 2009년에. 17년 보유했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그렇습니다.

○박수영 위원 17년 보유하는 동안에 몇 개월 동안 살았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4개월가량 살았습니다.

○박수영 위원 주민등록상 4개월, 그렇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맞습니다.

○박수영 위원 2012년에 2개월, 2018년에 2개월. 어떤 집을 사는데 주민등록 옮겨 놓고 2개월 살다가 2개월 만에 빠지고 또 6년 뒤에 2개월 살다가 2개월…… 빠지고 이게 일반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주민등록만 옮겨 났지 실제로 안 산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실제 살았습니다.

○박수영 위원 실제 2개월 살았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2개월, 2개월 해서 4개월 실제 살았습니다.

○박수영 위원 장성한 자녀, 그것도 성이 다른 장녀와 장남이 있는데 이 18평 아파트에서 살 수가 있습니까? 실제로 살았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이 아파트……

○박수영 위원 처음에 2009년에 매입했을 때는 안 살았지요? 전세 끼고 산 거라고 보면 됩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맞습니다.

○박수영 위원 그렇지요?

자, 보세요. 본인은 지금 투 바이(to buy) 하는 게 아니고 투 리브(to live) 하는 거라면서요. 그런데 그게 소신이고 그게 정책인데 본인은 집을 어떻게 했습니까? 본인은 전세 끼고 사 가지고 17년 동안 바이 해 놓고 산 건 4개월이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먼저……

○박수영 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게 지금 본인 정책 소신이 바이 하는 게 아니고 리브 하는 거라면 본인의 삶도 그렇게 살아야 될 거예요. 분명히 뭐 이유가 있겠지요. 지금 설명하시려고 하시는 건데 국민들 모두도 다 그런 사정이 있는 겁니다. 집을 사서, 좀 더 큰 집 사고 싶지만 돈이 없으니까 작은 집 사서 놓고 또 전세를 살다가 돈을 모아서 그 집에 들어가고 이게 보통 국민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니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소신이 있어야지 경제부총리 자격이 있는 겁니다. 본인은 그게 정책적인 소신이고 그 말이 맞다고 그래 놓고 자신의 삶은 그렇게 안 사는 것 아닙니까?

저는 충분히 이해해요. 후보자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여기 위원님들이나 뒤의 보좌관들,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전세 끼고 사고 대출도 좀 끼고 사고 그래 가지고 나중에 돈 모아서 내고 들어가서 사는 것 아닙니까. 저도 그래 왔고 대부분 다 그럴 거예요. 현금 박치기해서 사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현금으로 다 사라면서요, 대출은 다 제한해 놓고. 전세 끼고 사는 건 갭투자라서 부동산 투기라면서요. 그게 아니고, 사는 게 아니고 살아야 되는, 리브 하는 거라면, 그게 소신이라면 본인의 삶도 그렇게 살았어야지 본인은 그렇게 안 살아 놓고 그게 정책이고 그것 따라가서 지금 각종 규제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지금 세제개편안 낸 것도 차별을 여전히 두고 있지 않습니까? 거주한 것하고 주민등록만 옮겨 놓은 것하고 그것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박수영 위원 본인 4개월 살았됐지요? 그것 어떻게 입증할 거예요? 입증 책임이 사는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돌아온 것 아닙니까? 실제 살았던 것 입증하라면서요. 본인은 4개월 산 것 어떻게 입증해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먼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제 주택 비거주로 인한 논란과 국민들의 눈높이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시 매입 과정에서, 잠깐 설명을 드린다면 2009년 1월쯤에 평촌에 살고 있을 때 BH에 근무하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곧 연락이 올 거다라고 해서 그래서 평촌에서……

○위원장 조승래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평촌에서 출퇴근하기에, 장기간 근무하기에 좀…… 새벽부터 출근하는 그 당시 분위기에 때문에 좀 가까운 데로 가야겠다 해서 2009년 2월에 과천으로 서둘러 전셋집을 먼저 구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정부청사가 있는 과천을 주거지로 정한 만큼 나중에 4월쯤에는 저의 형편에 맞고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다만 이미 제가 전셋집을 구해 놓고 살았기 때문에 그 집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당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수를 말씀 주셨는데 사실은 그 당시 아파트는 엘리베이터도 없고 지하주차장도 없는 지금과는 좀 다른 형태의 거주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16평, 18평이 아니고 지금 현재로 보면 한 22평 정도 되는 거고.

그 당시에 초등학생을 둔,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4인 가구가 주변에 많이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주할 목적으로 샀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실제 실거주 여부는, 제가 우리나라의 다른 곳에 주소가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곳에 옮긴 적도 없고요. 그러므로 거기에 살지 않았다면 살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실거주했다는 건 확실한 내용이고요.

실제로 다른 분들도 만약에 실거주 여부를 한다면 나중에 과세할 때도 보면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상으로 문제가 없으면 그건 거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승래 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시고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조승래 다음은 문진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문진석 위원 천안갑 문진석 위원입니다.

이형일 후보자님, 재경부장관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감사합니다.

○문진석 위원 아까 ‘집은 소유에서 거주로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최근에 생각이 바뀌신 거예요, 아니면 일관되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죽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문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갭투자를 얘기하고 이렇게 야당에서 공격을 하시는 것 같은데 갭투자를 하려면 원래 전세가하고 매매가가 차액이 별로 없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매매가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전세가와 차액이 있었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매매가가 한 4억 2000이고요. 전세 그 당시에 제가 미리 살고 있던 다음에, 그 당시에 세입자를 구했는데 한 1억 1000 정도 되는 전세를 얻었습니다.

○문진석 위원 글썄요, 이게 갭투자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방식인 것 같은데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저는 그 당시에 대출도 없이 구입을 했었습니다.

○문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살지 않았다는 것은 좀 그래도 국민들한테 민망한 일이지는 하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진석 위원 과천에 집이 있었는데 거기 살지 않고 다른 곳에 사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말씀드렸지만 제 비거주 문제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평생 1주택자로서 장기간 보유하고 있었고 계속적으로 살고 싶었지만 여건이 어려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진석 위원 좋습니다.

후보자님, 우리 경제가 숫자로 보이는 경제는 호황이지만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바닥에서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만큼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매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을 도입하는 이유도 반도체 호황을 경제 전반으로 성장을 확대시키겠다 이런 강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문제는 앞으로 균형성장은 미래대응기금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사회 경제적 불평등 문제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뚜렷한 그림을 보여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불평등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간 근로장려금을 비롯해 소득 불평등 완화를 추진했지만 조정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도리어 2년 연속 악화됐고 순자산 지니계수는 역대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한국의 지니계수 개선율은 17% 수준으로 선진국보다 월등히 낮은 정도로 대응체계가 부실합니다. 생각해 보면 황당한 일이기도 합니다. 불평등이라는 단어 하나만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기사부터 시작해서 논문들 사례가 수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례들이 이렇게 자료가 많이 있는데요. 정작 어떻게 불평등을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은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날 K-양극화, K-불평등까지 이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부에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 총괄하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담당 부처가 관계 기관이라든가 협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제도개선도 느리고 예산권을 틀어쥔 재정 당국을 설득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점점 불평등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누적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불평등은 악화되고 또한 새로운 유형의 불평등이 이렇게 발생하면서 다

충화된 불평등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불평등을 전담하는 총괄 컨트롤타워를 좀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도를 개선하고 예산도 이렇게 수정할 수 있는 막대한 권한을 주는 그런 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불평등 대응 특별법안에 후보님도 깊이 공감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불평등 해소를 위한 그 법안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의 구조적 불평등 완화와 관련된 정책 수립이나 이행 체계 구축을 위해서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문진석 위원** 그래서 저도 이제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후보자님한테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법을 사실상 관장하기에 가장 좋은 부처는 재경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성장의 최종 목적지는 불평등 해소다. 불평등 해소 없는 성장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후보자님과 재경부 당국이 명심하고 불평등 대응체계를 갖추는 데 좀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문진석 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관으로 근무하시면서 이번 세제개편안을 총괄하신 것으로 압니다. 맞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부총리를 보좌하고 실무적으로 총괄했습니다.

○**문진석 위원** 우리 정부도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겠지만 국내생산세액제도에 전기차를 배제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알고 있습니다.

○**문진석 위원** 그런데 2022년 미국이 IRA를 도입하면서 EU라든가 일본, 캐나다 등 선진국들도 국내생산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진즉 이런 제도를 도입해야지 맞는 건데 사실은 지난 3년 윤석열 정부에서 이걸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산업이 경쟁력을 많이 잃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주력산업이었던 완성차 시장이 사실은 테슬라라든가 BYD에 추월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황만 놓고 보면 전기차도 국내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재경부에서는 전기차 세액공제, 국내생산세액공제를 하게 되면 중복 지원이다 이런 논리로 전기차를 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중복 지원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한 게 국내 생산 기반이 취약한 부분을 주겠다라고 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차전지의 경우가 훨씬 더 취약하기 때문에 이차전지에 대한 생산세액공제 지원을 하면 그로 인한 혜택이 그다음 밸류체인을 따라서 전기차일 수도 로봇일 수도 있고 다른 분야까지, ESS까지 다 갈 수 있으니 이차전지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문진석 위원 그런데 그건 사실상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차전지를 지원하는 것이 전기차를 지원하는 것과 같이 연결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것이 이차전지를 지원하면 반드시 전기차로 지원이 흘러간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 같아요. 방금도 말씀하셨듯이 로봇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중복 지원이다라는 논리는 좀 설득력이 없으니, 사실상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스마트자동차 시장이 BYD라든가 그다음에 테슬라라든가 이런 자동차 회사에 우리가 밀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시장에서. 그래서 국내생산세액제도 전기차에도 반드시 도입을 해 주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토를 한번 해 주셔 가지고 반드시 도입될 수 있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전기차 지원 여부는 저희가 세제를 도입한 취지 그리고 통상 리스크 그리고 구매보조금이나 재정지원이 있으면 그 재정지원이나 정책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글로벌 환경 변화로 수입 전기차의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향후 이삼 년간이 전기차 산업에 중요한 시기다라는 업계의 절박한 목소리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는 나중에 부총리로 취임하게 되면 자동차산업의 고용과 거기에 미치는 영향과 현장 의견 그리고 이 제도의 세제상의 원칙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한번 다각도로 의견을 수렴해 나가 보겠습니다.

○문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승래 문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의힘의 안상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안상훈 위원 후보자님, 1993년에 입직하셔서 공직 생활 34년째시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그렇습니다.

○안상훈 위원 가장 존경하는 경제부총리가 누구입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저희들이 모셨던 부총리한테 제가 각각 다 조금씩 장점을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안상훈 위원 후보자님 특징이신 것 같습니다. 모두에게 잘 보이고 싶은 분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경제 수장이라면 본인만의 철학이 있어야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PPT에 나오는데 김대중 정부 시절에 진념 부총리, 당시 청와대가 세계 경기침체 상황에서 경기부양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의향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에 아주 단호하게 반대를 했고 우리나라 건전재정 지키는 데 일조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후배들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홍남기 부총리, 당시에 정치인 출신이지요, 이낙연 총리가 맞춤형 지원, 전국민 지원, 포폴리즘성 정책을 제안하니까 정부는 결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님도 사실 좀 유한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도 경제수장으로서 기본은 지켰다 이 말입니다.

이분들처럼 철학 있는, 기본을 지키는 그런 경제부총리 역할 하실 자신 있으세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면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안상훈 위원** 그러려면 엄청 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차관 때까지 보여 주신 여러 가지, 특히 고위직에서 보여 주신 모습들을 보면 단일 레버리지 ETF나 연금 국장 무리한 투입 등등 대통령이 뜬금포로 던졌던 반시장적인 지시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정책화하는 데 앞장서신 것 같아요.

먼저 국내 주식시장 도박판 만든 그런 판단 책임 관련해서 좀 물어 보겠습니다.

레버리지 ETF 도입,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 국내 주식 비중 확대, 자본시장을 엄청나게 뒤흔든 이런 결정마다 후보자께서 빠지지 않고 다 관여하셨습니다. 먼저 단일 레버리지 ETF 입법예고 직전에 김용범 전 정책실장이 정부 부처 그리고 업계를 불러서 비공개회의를 개최합니다. 여기 가셨지요? 제가 업계 등등 확인했습니다. 그때 차관 한 분밖에 안 계셨고 참석하셨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말씀 주신 그 간담회는 청와대 주관의 간담회입니다. 관련해서 참석자와 주요 내용을 현재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관 기관에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상훈 위원** 그래도 말로 다 퍼져서 다 알고 있고요. 거기서 여기에 대해서 반대의견 밝히셨나 그거 묻는 겁니다. 본인 소신.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이 회의와 관련해서는 참석과 주요 내용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회의는 업계……

○**안상훈 위원** 당시에 업제도 반대의견 제시를 했고, 그런 얘기 다 지금 퍼져 있고요.

두 번째, 그러면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 그리고 목표 비중 상향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여기서는 특히 국내 주식 목표 비중 상향한 게 제가 보기에 불 붙은 데 기름 붓는 역할을 한 건데 차관 시절에 열린 이 기금운용위 열 번 중에 딱 한 번 참석하신 게 이거거든요. 여기서 뭐라고 반대의견 내셨어요? 복지부장관이 대통령 말 듣고 그대로 14%에서 20% 이상으로 올리는 회의였는데 경제부처 대표로 가서 가지고 반대의견 내셨나 이걸 묻는 겁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이 회의는 금융시장 안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당시의 회의 상황으로 인해서 그날 4년간 비공개하기로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안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그날 회의의 결과가 이미 보도자료로 나가 있습니다.

○**안상훈 위원** 후보자님 죄송한데요. 제가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모든 게 비밀이고, 이재명 정부는 그냥 그 자체로 무슨 국정원입니까? 어떻게 정부의 중요한 정책 결정, 국민 세금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을 국회에서 묻는데도 전부 비공개라고 에둘러 가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이날 이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4년간 회의록을 비공개하기로 의결이 되어 있습니다.

○**안상훈 위원** 그건 비공개했는데 지금 부총리 될 분이 연기금을…… 지금 PPT 보시면 16년부터 계속 줄여옵니다. 그 이유는 거대 연기금은 거시경제 왜곡효과가 있기 때문에 들어갈 때는 기름 붓고 나올 때는 또 엄청난 얼음, 찬물 붓기 때문에 이렇게 줄여온 거거든요. 이번에 갑자기 올랐어요. 저거 대통령 말 한마디, 정은경 장관이 갖고 와 가지고 기금운용위에서 그대로 받아서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정책적 판단이 있길래 이거를 경제수장으로서, 저는 경제부처 대표로 참석해서 가지고 최소한 반대는 하셨을 거라는 답을 하실 것 같은데 반대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계시다 오셨나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이날 회의에서는 이미 그 전에 전문가 의견을 다 듣고 전체적인 시장 상황과 기금의 건전성을 감안해서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상훈 위원** 아니, 어떤 전문가들이 저걸…… 제가 확인해 본 경제학회 등등 저거 잘못했다는 사람이 백이면 백이지 찬성하는 사람 한 명도 없거든요. 어떤 전문가인지 저한테 나중에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개인정보 때문에 안 내셨는데 가족분들 보면 지난 한 6개월, 8개월 동안에 국장이 엄청나게 뛰면서, 세상이 다 압니다. 이런 식의 비상식적 결정이 될 거라는 것을 아무도 몰라 가지고 초기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개미들은. 거의 외인하고 기관만, 정보 빠른 외인하고 기관만 들어왔다가 거의 먹튀 수준으로 빠져나갑니다.

부총리후보자님 가족분들 보면 이 기간에 3억 5000 버셨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참석하셨던 레버리지 ETF, 특히 상향 조정할 때 참석하신 이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 보고 어떤 생각들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겠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저런 증권에 대한 투자는 개별 주식 종목이 기본적으로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지수 추종을 하는 ETF인 거고요. 그리고 저는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었던 사항이고 제가 정말 양심껏 말씀드리지만 기금위에 했던 그런 거랑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안상훈 위원** 아니, 자료제출해 갖고 그것을 소명하시면 되지요. 지난번에 복지부장관 정은경 후보자도 비슷한 일이 있어 가지고 했는데 자료 다 냈거든요. 후보자님, 이것 왜 안 내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금위의 결정이 아니라 전체 거시적인 이야기인 거고요. 그에 따라서 개별 주식을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이해상충 문제가 없는 겁니다.

○**안상훈 위원** 아니, 이 시점 관련해 가지고 그러면 본인 가족분들 ETF라도 해외 ETF에서 국장으로 왔는지 등등 의혹을 명확하게 자료로 소명을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자료 못 내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승래 안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영석 위원 우선 후보 지명 축하드리고요.

그동안에 대미투자 협상에 관한 부분도 관여를 해 오셨는데 지금 대미투자 협상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노출되고 있다.

최근에 1호 투자사업으로 NCR 발전소 거론이 되고 있지요. 이런 문제를 보더라도 당초에 계획된 투자액보다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고 또 45영업일 문제라든지 또 리스크 풀링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다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결국은 한미 간의 동맹 문제라든지 또 신뢰 문제 이런 부분들이 다 흔들리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호르무즈 사태 발발 당시에 우리 선박이 한 20척 이상이 페르시아만에 묶여 있었지요. 그리고 우리 선원도 100명 이상이 묶여 있었는데 당시에 직접적인 어떤 개입이 아닌, 전투병 파병이나 이런 것이 아니어도 해상 초계기라든지 또 선박 호송이라든지 기뢰 탐색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 군수지원함이라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충분히 있었는데 왜 그렇게 소극적으로 대응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그때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잘, 확인을 한 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영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대미협상 이런 부분에 한미동맹이라든지 안보 부분이 다 직결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파악조차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한미동맹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한미 간의 신뢰가 다 흔들리다 보니까 지금 대미투자 협상에 대한 부분도 당초에 정부가 성과라고 홍보했던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NCR 발전소만 해도 연 200억 달러 이하로 투자를 한다는 게 원래 돼 있었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저희 전체적으로 한도가 연간 200억 불……

○윤영석 위원 그런데 지금 보도된 걸 보니까 NCR 발전소 1호 사업도 한 220억이 넘는 것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그 구체적인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현재 기본적으로 협상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나중에 국회에서 법률에 따라 상임위가 열리면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영석 위원 아니, 9월 7일 날 더불어민주당 당정 협의할 때, 지금 그게 보도 난 것으로는 223억으로 나오는데 이런 것도 당초의 그런 기준이나 어떤 상한을 초과하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아닙니다. 저희는 대미투자 연간 200억 불, 총 2000억 불 넘지 않도록 범위 내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석 위원 확실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그것을 기준으로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

○윤영석 위원 기준으로?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MOU상에 나와 있는 한도를 지키는 범위 내에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석 위원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윤영석 위원 그리고 지금 보도가 나오는 것을 보면 이게 200억 달러를 초과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정부가 대미 투자 협상에서 핵심적인 안전장치라고 홍보한 게 최소한 45영업일 이후에 투자금을 투자한다 하는 그런 부분하고 여러 가지 다수의 프로젝트의 손익을 합쳐서 원리금을 해소하는 리스크 풀링 제도를 성과로 홍보했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지금 그런 부분도 같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윤영석 위원 협의 중에 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윤영석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보도가 나오는 걸 보면 당초에 계획했던 그런 부분들 상당히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최근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호르무즈 사태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에 상당히 불만을 많이 표시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한미연합훈련 같은 경우에도 일방적으로 미국이 대폭 축소 발표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있다 또 한미 간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지금 대미 투자 협상의 제1호 투자부터 뭔가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동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 200억 달러 투자 상한을 지키겠다, 그리고 또 상업적 합리성이 없는 그런 사업은 배제하겠다 그리고 리스크 풀링 제도를 확실하게 담보하겠다 이런 약속을 할 수 있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말씀 주신 MOU의 정신에 따라서 지금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재경위 상임위에 따로 별도로 법률에 따라서 보고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영석 위원 차후에 만약에 임명이 되면 오늘 말씀하신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정부측에서 확보를, 담보를 해 주셔야 한다고 제가 강조를 드리고.

정부가 당초에 국민한테 설명한 게 3500억 달러 투자인데 이런 부분도 지금 여러 가지, 규모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상당히 설왕설래가 많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미국 정부가 삼성이나 SK하이닉스에 대해서도 미국 반도체에 대한 현지 투자를, 직접투자를 지금 압박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또 수출입은행이나 산업은행 등의 정책금융도 최근에 700억 달러로 올라갔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영석 위원 지금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무역보험 한도가 700조로 상한이 됐다 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파악해서 가지고 상당히, 3500억

불에 대한 그 부분 그런 기준을 국민한테 다 그렇게 홍보를 했지 않습니까, 성과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경제가 또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서 확실한 기준을 잡고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엔시날 발전소 사업 투자 결정 과정에 있는데, 협상 과정에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상당히 우리한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이런 것이 결국은 한미 간의 불신의 비용이 아닌지 하는 우려가 없지 않다.

그래서 만약에 임명을 받으시면 오늘 약속하신 또 밝히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익이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3500억 불은 대미투자 2000억 불하고 조선 협력 투자 마스가(MASGA) 1500억 불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윤영석 위원 한미 간의 신뢰를 위해서 줄 것은 주더라도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확실히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끌려 가서는 안 된다 하는 이런 것을 강조합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한미동맹은 굳건한 가운데 전략적 이익까지 같이 고민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승래 수고하셨습니다.

자꾸 위원님들의 지적이 마이크……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제가 더 가까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승래 가능하면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위원장 조승래 윤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안도걸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안도걸 위원 먼저 장관 내정을 축하드립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감사합니다.

○안도걸 위원 후보자님은 34년 경제관료 길을 걸어오셨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맞습니다.

○안도걸 위원 고위관료의 삶은 어떻게 보면 유리병 안의, 어항 속의 금붕어라고 저는 봅니다. 수없는 승진 과정에서 검증 그리고 매년 재산 공개 등등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기관리가 없으면 아마 이 자리에 계시지 못할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제가 보니까 이번에 도덕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흠잡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자기관리를 철저히 해 오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형일 후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정책역량이겠지요. 부총리의 역할을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알고 있습니다.

○안도걸 위원 한마디로 뭐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우리 경제가 성장을 지

속적으로 이어 갈 수 있고 양극화를 극복하는 그런 기틀이 되고자 합니다.

○**안도걸 위원** 그렇습니다. 안정적으로 우리 경제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키면서 모든 국민들이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경제를 만들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핵심적인 정책수단이 통화정책하고 재정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후보자의 새로운 정책 기조, 그러니까 거시정책 기조에 대한, 정책 조합에 대한 철학과 기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쭙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통화금융정책 보면 유동성이 많이 풀렸다, 지금 그래서 유동성 관리를 좀 줘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 또 한국은행에서는 기준금리를 두 차례 연속 인상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긴축적인 기조를 가지고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물론 제가 통화 당국의 금리 결정에 대해서 일일이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이미 대외적으로 공개된 긴축, 그러니까 금리인상 기조에 대해서는, 저희는 현재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막대한 유동성이 해외로부터 경상수지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방향성에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안도걸 위원** 그렇지요.

지금 우리 통화량을 보면 통화량의 절대적 수준이 GDP 대비 M2 비율을 보면 조금 높아 보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코로나 위기 때 유동성 공급이 크게 늘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걸 조금 줄였어야 되는데 그게 원활치 못했지요.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대출, 금융을 좀 늘리고 하면서 그 유동성 관리가 조금 안 됐습니다. 우리 정부 들어서서 본격적으로 유동성 관리를 하면서 또 GDP 대비 수준도 좀 다운을 시키고, 지금 통화량 증가율도 한 6% 정도 되지요? 그래서 지난 10년 평균치에 비해서는 조금 아래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향후에 보니까 약간의 복병이 좀 있어요. 유동성 관리에 있어서 복병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가계·기업 대출이 좀 늘고 있는 부분이 있지요. 특히 가계대출 부분과 관련해서 이번에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우리가 선별적으로 대출을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있고 또 기업대출, 우리가 본격적으로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미래성장 분야에 기업대출, 투자를 좀 늘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대출이 좀 늘고 있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가계나 기업대출 관리에 대해서 좀 더 유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 주시겠어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기본적으로는 가계부채의 관리 기조, 큰 틀에서는 유지가 되는 게 전체적인 거시경제 관리에도 좋고 또 실질적인 리스크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이나 신혼부부들, 실수요자의 경우에는 그로 인한 금융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난 7~8월 동안 토론회를 하고 많이 들으면서 필요한 부분은 타기팅해서 좀 완화하자라고 해서 그 부분은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안도걸 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유동성 총량 관리하면서도 선별적으로 긴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편셋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신 거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맞습니다.

○**안도걸 위원** 하여튼 유동성 관리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십시오라는 거고.

또 유동성 관련 복병이 대외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경상수지 흑자가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늘고 있지요? 역대급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많이 늘고 있습니다.

○**안도걸 위원** 예를 들어서 금년 재정·경상수지 흑자 얼마로 전망하셨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정부 전망은 현재 2900억 불인데요, 그것보다 더 늘어날 소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안도걸 위원** 그렇지요. 한국은행에서 4500억 불 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대비, 1230억 불도 굉장히 컸다고 하는데 그 4배 아니겠습니까? 이것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경상수지 분야에서 흑자가 들어오는 거고 유동성 확대 요인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보면 자본거래 쪽에서는 적자 요인이 조금 있었지요. 특히 외국인 주식투자자들이 국내 리밸런싱을 하면서 순매도가 좀 있었고 한테 그 규모도 지금 줄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내국인의 해외 순투자 이것은 계속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대외 부분에서는 약간 유동성 공급 확대 압력이 지금 늘고 있다라는 부분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동감합니다.

○**안도걸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좀 관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가상승 압력이 있지요. 아직 중동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 계속 새로운 상황들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니까 7월 생산자물가가 7.7% 상승했어요. 그리고 또 수요 측면에서도, 우리가 지금 역대급으로 명목성장률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상당히 수요발 인플레이션 압력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통화금융정책 측면에 있어서 긴축적인 기조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너무 유동성을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성장의 정상적인 증가와 또 지금 중요한 게 전 세계의 산업구조 대변혁 시대에 우리가 과감하게 미래 대비 투자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봤을 때 재정정책이 상당히 보완적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말씀하신 것처럼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폴리시믹스를 잘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통화정책에서 금리를 올려서 전반적인 유동성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취약 차주의 어려움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재정에서 취약 차주를 도와주는 정책이 마이크로(micro)하게 들어가면 두 정책이 서로 보완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내년도 예산안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재정정책에서 또한 중장기적으로 보면 어차피 총수요 관리보다 총공급을 늘리는 것도 물가관리나 그런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재정정책에서 성장능력을 확충하는 부분이 많이 들어가면 그럴수록 폴리시믹스가 더 잘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도걸 위원** 저도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되고요. 여하튼 전략적인 재정정책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고.

그러면서 자칫 우리가 재정건전성을 놓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관리를 하고 있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지금 현재 내년의 경우에는 관리재정수지가 -0.1로 대폭 줄었고요. 그리고 국가채무비율도 5년 뒤에 저희가 59% 보던 걸 49%까지 10%p가 내려가는 걸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안도걸 위원** 그렇습니다.

여하튼 이번에 재정수지 적자 있잖아요, 관리재정수지가 균형 상태로 가는 거거든요. 이것은 20년 만에 아마 처음 있는 일일 겁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맞습니다.

○**안도걸 위원** 그래서 이러한 재정건전성을 확고하게 지키면서도 우리 성장잠재력 3% 달성에 필요한 그러한 공격적인 투자는 계속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분명하게 재정정책과 통화금융정책에 대한 기조를, 말씀하신 기조를 잘 유지해서 가동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승래** 안도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춘석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춘석 위원** 이춘석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먼저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로 추천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감사합니다.

○**이춘석 위원** 후보자에 대한 주요 평가를 들어 보니까 엘리트 경제관료 중에서도 에이스 중의 에이스다, 조직 내에서는 실력과 인품을 겸비해서 위아래로부터 신망이 두텁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그래요. 이러한 평가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나름 노력은 했지만 그렇게 좋게 평가해 준 것은 좀 과한 평가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춘석 위원**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경제정책국장과 경제정책비서관을 역임했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차관보와 통계청장을 역임했고 이재명 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제1차관을 거쳐서 지금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추천되었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맞습니다.

○**이춘석 위원** 경제부처관료 중에서는 전부 꿈꾸는 자리를 다 갖췄어요.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는 경제라든가 부동산·조세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는데

요, 후보자께서는 두 정부에서 모두 경제 분야의 주요 보직을 맡았어요. 그만큼 경제관료로서 능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았다고 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후보자가 맡으려는 자리는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하는 관료 자리가 아니라 주요 정책을 본인의 판단과 책임으로 결정하는 경제부총리의 자리입니다.

약력을 죽 보면 본 위원이 느끼기에 후보자께서는 기대 반 우려 반이 같이 공존해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경제관료가 아니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자기 분명한 소신을 밝혀 줘야 제가 생각하는 우려도 좀 희석시킬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후보자에게 필요한 것은 저는 관료의 중립성보다는 자신의 경제철학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후보자가 생각하는 경제정책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제가 생각하는 철학은 아까 전에 제가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지만 창의와 활력을 존중하는 시장경제원칙을 지키되 정부가 필요한 부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든지 민생 안정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제 소신입니다.

○이춘석 위원 그러니까 딱 요약하자면 경제성장을 중시하고 또 느끼는 양극화를 극복하는 게 중요한 역할이다 하는 취지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그렇습니다.

○이춘석 위원 이 2개는 다 공존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엄격한 의미로 따지면 충돌될 수 있는 분야예요.

제가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죽 들어 보니까 경제정책에서 우선시할 중요 요소로서 성장, 물가, 재정건전성, 분배, 자산시장의 안정 등 여러 정책적 목표가 있더라고요. 이러한 목표는 실행 과정 속에서 저는 다분히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후보자가 어떠한 부분을 강조해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정책 방향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후보자가 경제부총리가 된 후에 대통령의 지시 여부와 관계없이 ‘이것은 내가 반드시 지켜 가겠다’ 하는 경제정책이 있다고 하면 한 가지만 딱 말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지속가능한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춘석 위원 지속가능한 성장?

그래서 제가 후보자에게 시장경제체제와 국가의 적극개입에 대한 원칙을 물어보니까, 국가성장을 묻는 질문에 경제의 기본은 민간의 자율참여를 통해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것이고 상생을 저해하는 시장실패와 양극화에 대해서는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보자가 말씀하시는 것은 두 가지를 병렬적으로 썼는데 성장에 방점을 두는 건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앞에 지속가능한이라고 넣은 이유는 단순한 성장만으로 가서는 지속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결국에는 사회의 전반적인 양극화 문제나 취약계층을 보듬어 줘야 그게 지속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춘석 위원 제가 하나 예를 드는 경우가, 이게 적합하냐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논리 비약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의 생각을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동탄과 수원, 용인 등 경기남부 주택시장의 부동산값이 폭등하자 이

른바 삼성전자 직원들의 대규모 성과급을 반영해서 집값이 상승했고 더욱이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최대 5억 원까지 1.5% 금리로 사내 대출이 시행되어서 이로 인해 부동산 매수세가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다 하는 내용을 발표했더라고요.

만일 이런 식으로 주택시장이 돌아가면 우리 당국은 집값을 억제하겠단, 그래서 일반 국민들에게는 대출이나 이것들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규제하고 있지요, DSR이라든가 LTV를 해서. 그렇게 되면 일반 국민들은 대출받기가 어려워서 집을 사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동산값이 올라가면 사실은 더 구하기 어려워지는 현상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1.5%로 5억을 대출해 주는 것은 기업의 자율성입니다. 이 부분은 또 존중받아야 할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이 그렇게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해 주면 거꾸로 그 혜택을 못 받는 일반 국민의 경우에는 집값이 폭등해서 집을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국이 DSR이라든가 LTV를 제한해 가지고 대출도 못 받아요. 이 2개는 공존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서로 충돌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에 부총리는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우선 제가 알기로는 회사에서 대출을 할 때 이것을 근거당으로 잡도록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출의 여력이 감소되는 형태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계대출을 과도하게 늘리지 않게끔 하는 선제적인 조치를 미리 취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의 가격이 굉장히 많이 급등했기 때문에 저희 정부로서는 그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을 해서 실거주가 되는 경우에만 집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지금 조화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춘석 위원** 아니, 그 얘기는 맞는 말씀이신데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실은 집을 사고 싶어도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못 사는 것 아닙니까, 집값이 폭등하고 대출도 못 받고. 이런 경우에 2개가 충돌할 수도 있을 텐데 이게 사실은 아까 말한 성장, 기업의 자율성과 양극화의 해소 부분의 충돌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 조화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 하는 것들을 제가 후보자님께 물어본 겁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기업에서 대출을 줄 때 그걸 근거당으로 잡게 되면 대출 모수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가계대출을 관리함으로써 집을 살 때 좀 제어가 되는 효과가 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이춘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승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성호 위원** 후보자님, 경제부총리로 지명된 거 축하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감사합니다.

○**정성호 위원**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후보자에 대한 경제부처 내부

의 평가라든가 또 외부의 평가가 다 좋은 것 같아요. 직원들이 뽑는 님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 선정되었지요, 여기에?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성호 위원 명예의 전당에도 오르고 조직 내부에서 소통과 조정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다, 업무도 빠르고 업무 지시도 굉장히 신속하게 해 준다 이런 평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직 안에서 지금까지는 위에 상사가 있고 장관이 있고 총리가 있고 대통령이 있고, 그 조직 안에서 후보자가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이제 본인이 그거를 조정하고 지휘하는 그런 위치에 올라가는 겁니다.

경제부총리의 정부 경제부처 안에서의 위상이 아까 본인은 경제 컨트롤타워라고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정성호 위원 경제 컨트롤타워가 분명히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이제는 누구를 따라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분명한 원칙과 소신 이걸 갖고 하셔야 됩니다.

혹시 2018년도 이때쯤, 8월 이후에 후보자 어디에 근무하고 계셨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2018년 8월 말씀이십니까?

○정성호 위원 예.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제가 그때 해외에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정성호 위원 여기 이력을 보면 그때 경제수석실 선임행정관으로 있었던 걸로 돼 있는데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2018년 말에 제가 귀국한 걸로……

○정성호 위원 2018년도 말에 귀국했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그래서 2019년……

○정성호 위원 그러면 외국에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 당시 경제부총리가 누군지 기억나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김동연 부총리……

○정성호 위원 김동연 부총리였고 청와대 정책실장이 누구였습니까, 그 당시에?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장하성 실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호 위원 두 분 사이가 그 당시에 어땠습니까? 언론에서, 외국에 나가 있어도 언론 관계를……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제가 기사로만 접해 봤습니다.

○정성호 위원 그러니까 기사로 봤을 때 어떤 기사들이 주로 나왔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조화보다는 약간의 의견이 좀 달랐던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성호 위원 그러니까 대통령의 핵심적인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경제부총리와 정책실장의 갈등이 있다, 소통이 잘 안 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많은 언론이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의 경제사령탑이 누구냐, 원톱이나 투톱이나, 장하성이 원톱이나 김동연 원톱이나 아니면 장하성·김동연 투톱이나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거 기억나시지요, 그 사

실은?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그런 기사를 본 것 같습니다.

○정성호 위원 그 당시 제가 기재위원장이어서 잘 압니다, 사실은. 그 당시 제가 언론 인터뷰에서도 분명히 그랬어요, 경제사령탑은 경제부총리다. 정책실장은 대통령의 참모로서 그림자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 때문에 사실은 당내에서 약간의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경제사령탑이 경제부총리가 돼야 된다는 제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성호 위원 그런 입장을 가지셔야 돼요. 지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도 주관하시고 국무회의 석상에서 많은 지시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지금 아직은 현직에 있지만 구윤철 장관과 관련해서도 과연 경제부총리가 정책실장에 대해서 주도권을 갖고 있느냐, 행시 선후배이기 때문에 주도권이 있지 못하다. 또 경제부처 내부에서는 정책의 최고 결정 컨트롤타워는 청와대이고 경제부처는 책임만 진다 이런 볼멘소리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얘기 들어 보셨어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제가 답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정성호 위원 사실 그런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그렇고.

이제 그래서는 안 됩니다. 가장 전문가가 부총리예요. 대통령께서 많이 알고 계시고 굉장히 공부 많이 하시고 보고서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정책과 관련해서는 재정경제부에 있는 공직자들이 가장 전문가이고 가장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정책실과 관련해서 또 대통령에게도 경제의 현실과 관련해서는 정확한 해법들을 부총리가 분명하게 제시를 해 줘야 돼요, 사실은요. 공개 석상에서 약간 다툼이 보여서는 안 되겠지만 내부적으로 잘 소통을 해 가지고 부총리가 갖고 있는 그런 경제 철학들 또 부 내에서 취합된 그런 의견들을 정확하게 대통령한테 전달하고 또 정책 실장과의 사전에 조율하면서 주도권을 갖고 가기를 꼭 기대하겠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부총리로 취임하게 되면 말씀 주신 대로 경제팀의 수장으로서 각 부처의 역량을 최대로 모아서 저희 팀을 원팀으로 하고 그것을 위해서 미리 조율도 다 하고 그와 관련해서도 책임도 지는 그런 모습을 갖겠습니다.

○정성호 위원 그것을 잘 하셔야 돼요. 전에는 경제부총리가 예산은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물론 세제도 있고 전체적인 중장기 전략도 짜야 되고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위상은 경제부총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획예산처장관, 기획예산처장관은 정치인 출신입니다. 그리고 산자부나 중기부나 예산의 집행 부서 또 금감원·금융위 또 통화정책들 여기에 대해 다 전반적으로, 그걸 다 컨트롤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본인이 확고하게 하지 않게 되면 중구난방되고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도 직접적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이니까 혼선을 빚을 수가 있다, 다시 한번 지적하고.

부처들 간에 어쨌든…… 경제부처 장관들 회의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있습니다.

○정성호 위원 그것만 그냥 형식적으로 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주도권을 갖고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한은 총재라든가 금융위원장, 옛날의 F4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하고 있습니다.

○정성호 위원 제대로 좀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되지 그렇지 않게 되면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사말에서 창 의와 활력을 존중하는 시장경제 원칙을 지킨다고 얘기했는데 창 의와 활력 정말 중요합니다. 앞의 얘기하고 제가 같이 맥락이 이어지고 있는데 부처가 좀 창 의로워야 돼요, 창 의로워야 돼.

정말 후보자가 이제는 됐기 때문에, 이 창 의와 활력은 재정경제부 내부에서부터 시작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선의 진짜 사무관부터 실제 차관보들까지 적극적으로 소통해 갖고 그들이 장관한테 의견 제시하고 그런 의견들을 모아 갖고서 어떤 정책들이 입안될 수 있게 소통해야 된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관련해 갖고 시장과의 소통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지금까지, 후보 되기 전까지 차관 때 왔다 갔다 했던 걸 보니까 좀 적극적이지 않아요. 좀 더 시장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해야 됩니다. 가서 들으셔야 돼요, 사실은요.

최근의 부동산 정책, 세제 관련해서도 저는 소통 부족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밖에만 나가면 충분히 들을 수 있었던 얘기들을 갖다가 그냥…… 그 전에 그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고, 그런 위험성들이 고려되지 않고 발표되다 보니까 많은 불만이 있고 그것이 결국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가 떨어지는 원인도 되는 거거든요.

관련해 갖고 야당과도 굉장히 많은 소통을 해야 됩니다. 국민과 소통의 핵심은 탄 게 아니에요. 야당과의 소통입니다. 적극적으로 장관이 우리 기재위원들뿐만 아니라 야당의 지도부, 야당의 정책 하시는 분들하고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야 돼요. 왜냐, 야당도 많은 수의 국민들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꼭 그런 자세로 좀 해 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부 내에서도 창 의와 그게 샘솟을 수 있도록 밑에 있는 직원들하고 같이 논의도 많이 하고 토론도 많이 하고 소통도 할 거고요. 현장의 목소리 또 국민의 의견 그리고 기업, 전문가 그리고 국회에서도 여야 같이 의견을 많이 소통하면서, 많이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정책을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승래 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의힘 이종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감사합니다.

○이종욱 위원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이어서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후보자님, 비거주 1주택자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맞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러면 주택 투기한 겁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비거주 자체로 투기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

습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비거주했다고 다 투기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종욱 위원 그런데 이 정부는 그렇게 취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후보자님, 지금 과천에 아파트 한 채 있지요, 18평짜리?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이종욱 위원 사실은 대단한 게 아닌 걸로도 볼 수도 있는데 이게 이슈가 되고 있어요. 정부가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PPT 한번 띄워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2009년 2월 달에 4억 2000에 샀어요. 지금 한 20억 내외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23억 이런 것도 있기는 있던데 어쨌든 한 20억 내외로 보더라도 16억 정도 시세 차익이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재명 정부 기준에 의하면 후보자는 아주 전형적인 투기 세력이 다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일단 시세 차익이 16억이나 있었지요. 실제로 살았느냐? 아까 4개월이라고 하시다가 이제 2개월이라고 바꾸신 거지요, 실거주?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아닙니다. 2개월, 2개월 해서 4개월이라고 제가 답변드렸습니다.

○이종욱 위원 첫 2개월은 세입자가 있었잖아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아닙니다. 제가 살았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래요? 아까 1억 1000 전세 끼고 샀다는 것 아니에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그거는 2009년 4월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종욱 위원 2009년 4월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2009년 4월에 집을 샀을 때 그때 세입자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12년 연말에 있는 2개월, 18년에 있는 2개월 해서 4개월을 했다고……

○이종욱 위원 예, 제가 잘못……

그런데 저는 이 4개월도 의심스러워요. 실제 이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2개월 사이에 이사를 하고…… 실제 이사를 했습니까, 그러면?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이종욱 위원 이사를 하고 이사짐 풀자마자 다른 집을 구해요? 그런 경우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저희들 여러 가지 공공요금 봐도 그런 통계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그런 것 말하기 그런데, 저는 4개월도 의심스럽다는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이것 보시면 대전에 있었던 것은 이해합니다, 기재부가 세종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 외에, 밑에 보시면 중앙동, 과천에 있었지요. 그다음에 안양, 서울의 상도동까지 나머지 기간은 한 10년 정도 되는데 실제 살 기회가 있었는데 한 번도 안 살았거든요. 그래 놓고 실거주 목적으로 샀다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시간을 주시면 제가 건별로 다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러면 조금 뒤에 답변하시지요, 말미에.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것을 보면 그냥 보통 사람들이예요. 살다가 집은 한 채가 필요한 것 같은데 평은 작지만 당장 사 놓고 실제로는 들어갈 여건도 안 되고 그리고 들어가기에는 집도 작고……

지금 보시면 앞뒤에 살았던 집들을 제가 보니까 대부분 다 30평에서 40평 정도 살았어요, 본인이 실제 사는 집들은. 그 정도 평형이 필요했는데 작은 평은 나중을 위해서 사 놓은 겁니다. 이 평형 배정받으셨지요, 과천 9단지? 몇 평 신청했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그것은 제가 기억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것도 답변 못 해요? 제 생각으로는 삼사십 평은 신청했을 것으로 압니다. 그것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부총리는 평생…… 아, 후보지요. 평생 한 주택에 살고 있었고 실제로 실거주하고 싶었지만 여건이 안 됐다 이런 말씀 하셨지요. 그렇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이종욱 위원 간략하게 어떤 여건입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말씀드린 것처럼 2009년에는 제가 청와대 출입을 위해서 전셋집을 먼저 구했고 그다음에 집을 샀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 살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 이후에는 세종시로 이전이 결정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2011년 11월에 전세가 만기가 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전세가 만기가 되기 때문에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11월 달에 당장 대전으로 내려가기에는 아직 자녀 학교 문제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방학 때 내려가기 위해서 두 달간 제가 살던 집으로 들어가서…… 내려간 상황입니다.

○이종욱 위원 억울한 거지요? 여러 가지 여건들 있고 여러 가지 사유들로 억울하다는 거지요, 투기 세력은 아니다? 국민들도 똑같아요. 오히려 후보자보다 더 많은 사정으로 더 많이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에서 거주로 인정해 주는 그런 사유들이 있지요, 부득이한 사유라고 하는 것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다음 한번 보시지요.

부총리후보자님, 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해당이 안 됩니다.

○이종욱 위원 해당이 안 되지요? 이 부득이한 사유도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에 1년 이상은 살아야 학교 문제, 직장 문제 이런 것 됩니다.

그러니까 부총리후보는 정부가 인정하는 기준으로 해도 인정이 안 돼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예요. 그런데 어떻게 국민들한테 부득이한 사유로 충분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저희가 부득이한 사유를 시행령으로 더 나중에, 이번에 세법에서 같이 국회에서 저희가 논의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이에 준하는 사유를……

○이종욱 위원 그러니까요. 이제 부총리도 예외 사유가 될 수 있도록 확대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아닙니다. 국회에서 저희는 심도 있게 이 부분을 토론하고 또 구체적인 사례를 봐서 필요하다면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 신청하지 않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러니까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경계선 때문에 억울한 국민이 나올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밑에 한번 보시지요.

재개발·재건축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공사기간 중 2분의 1 인정받지만 이것도 1년 이상 거주해야 돼요. 이것도 후보자는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런 예외 사유도 인정받지 못하는 후보자는 전형적인 투기성 보유자, 이 정부 기준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지요.

그래서 이런 막대한 세제상 불이익을 주고 있지요. 후보자가 가지고 있던 17년 장기보유 혜택 2년 뒤에 없어집니다. 맞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이종욱 위원 그러니까 이 정부는 그렇게 안 하려면 빨리 집을 팔거나 아니면 들어가 살라는 거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저는 재건축이 완료되면 실입주할 계획입니다.

○이종욱 위원 그렇지만 현재는 회피할 방법이 없지요? 재건축 중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도 없고 팔 수도 없습니다. 조합 지위 양도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외통수로 몰아넣고 정부가 거주·비거주라는 잣대로 국민들을 몰아세우는 게 맞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기본적으로 거주 중심의 주택 문화로 가야 된다는 취지에 맞춰서 지금 세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1주택자들은, 실거주용 주택자는 최대한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런 정책 방향은 옳지만 이것을 세법상 틀로 해 가지고 완전히 국민들을 일률적인 잣대로 세법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저는 정책 수단으로 부적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이 부분은 계속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승래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 아까 부동산 관련해서 앞부분은 설명을 하셨는데 뒷부분 추가 설명할 게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갑시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처음에 아마 2개월씩 거주하는 게 가능하나 여쭙보셔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건데 앞부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으로 이사를 가는 사이에서 2개월이, 전세에서 나가야 되고 대전에 입주할 바로 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굉장히 특이한 경우라고 저도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해외에서 들어왔을 때는 처음에 해외에서 들어올 때 자녀 교육을 어디로 할지를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과천으로 일단 들어왔고 거기서 볼 때 안양으로 가는 것이 자녀 교육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 과천에 살면서 전셋집을 구해서 나갔다 이렇게 하고 신학기에 맞춰서 바로 이사를 갔기 때문에 2개월 정도 입주하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조승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천의 그 아파트가 언제 멸실이 됐습니까, 몇 년도에?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작년 하반기부터 철거가 진행됐고요.

○위원장 조승래 작년 하반기부터.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이번에 완전히 다 현재……

○위원장 조승래 퇴거는 몇 년도에 하신 거예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저는 비거주 상태고 현재 거기 살던 세입자분은 작년 초에 아마 마지막 퇴거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승래 작년 초에 퇴거돼 있고.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위원장 조승래 작년 초부터 비어 있는 상태다 이 말씀인 건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승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윤후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경기도 파주갑의 윤후덕 위원입니다.

저는 접경지역의 국회의원입니다. 염두에 두고, 발언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감사합니다.

○윤후덕 위원 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덕담을 해 드려야 되는데 덕담만 할 수는 없고 정책적으로는 날카로운 감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정성호 위원님이 대통령님께 직언을 잘 해 달라라는 고언을 했지요? 그리고 또 야당 위원님들하고도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또 정책에 반영하라 그런 고언을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똑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리고 인사말씀 6페이지에 보니까 경제부총리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다면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써 놔어요. 그런데 경제부총리라는 직책이 없어요. 헌법에도 이런 직책이 없고 정부조직법에도 경제부총리라는 직책이 없어요. 내가 체크해 봤어요. 부총리는 있어도 경제부총리는 없어요. 국무총리는 두 명의 부총리를 선임할 수 있다 이렇

게 돼 있지요. 그래서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서 경제정책을 하는 재경부장관을 부총리로 선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제부총리는 헌법상의 용어나 정부조직상의 용어는 아니고 언론 용어예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위원님 말씀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부총리가 둘이니까 경제부총리, 과기부총리 이렇게 통용되고 있고 예전에는 부총리 한 분이더라도 경제부총리라고 통상적으로 불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래도 저는 경제부총리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경제부총리라는 그 무게감이, 경제정책에 관한 총괄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자리잖아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맞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래서 현안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중책을 맡게 되면 잘 살펴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유념하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런 것 중에서 몇 가지를 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과천에 있는 아파트를 2009년에 매입했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윤후덕 위원** 그때는 리먼 브라더스 사태 등등으로 인해서 한국에서도 부동산이 계속 떨어지고 이래서 매기가 없고 그런 상황이었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윤후덕 위원** 그때 싸게 샀네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그 당시에 주택시장이 굉장히 침체되는 위기였고요. 그래서 미분양 사태가 많이 나서 미분양에 대해서 세제지원까지 하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윤후덕 위원** 아니, 그래서요 지방에 있는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도 면제한다고 하면서 어떻게든 팔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때 샀네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그때 과천도 주택가격이 하락했던 시기로 생각합니다.

○**윤후덕 위원** 그런데 그것은 알아요. 이것 한 20년 정도 됐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번 8월 3일 날 세제개편안을 내면서 1가구 1……

평생 1가구 1주택이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윤후덕 위원** 그것에 대한 자부심이나 도덕성도 가지고 있었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맞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런데 문제는 자가냐 비거주자냐 이런 세제개편을 만드니까 이게 거주하고 있으면 착한 1가구 1주택이고 비거주자면 나쁜 1가구자 이렇게 돼 버렸어요. 그랬더니……

지금 후보자는 비거주자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맞습니다.

○**윤후덕 위원** 20년 동안 4개월밖에 거주하지 않고 대부분 거의 다 비거주자로 그렇게

했네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재건축이 완료되면 실거주할 생각입니다.

○윤후덕 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거예요. 이런 정책을 8월 3일 날 발표하고……

제가 걱정이 되는 게 그러면 1세대 1주택인데 비거주자가 전국적으로 몇 명이나 되고 몇 %나 돼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저희가 그것 관련해서 지난번에 한번 통계도 여쭙보셔 가지고, 제가 전체 거주·비거주를 데이터로 직접적으로 신고받는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다만 데이터처에서 조사를 하는 경우에 관외지역에 사는 것에 관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걸 봤을 때 전체 한 5만 가구 정도가 비거주 1주택자고요.

○윤후덕 위원 아니요, 이게 전국적으로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14억 이상 보유자 중에 그렇습니다.

○윤후덕 위원 전국적으로는 30% 정도가 비거주자예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공시가격 14억 이상 기준으로 뽑았을 때 전국 단위로 보면 한 5만 명, 5만 호 정도가 비거주자로 통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제가 비거주자라는 것만 얘기를 했지요. 전국적으로는 1706만 명의 주택소유자가 있는데 그중에서 비거주자는 24%예요, 서울은 30.4%고.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위원님 말씀은 모든 주택을, 가격과 무관한……

○윤후덕 위원 모든 주택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맞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런데 문제는 세제개편안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공시지가로 9억 원 이든지 12억 원이든지 이런 사람들이 대상이 되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14억 이상으로 됩니다.

○윤후덕 위원 그래서 그런 숫자하고 퍼센티지를 내놓으라고, 자료를 내놓으라고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계속 보내 주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세제개편을 분석하고 결정할 때 이런 데이터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분석하고 결정한 건지에 대해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더 들여다봐서 국회에서 관련 세제개편안에 대해서 심의하고 또 정부 측 의견을 더 받으면서 우리 이 상임위에서 좀 더 국민의 여론을 더 수렴하면서 개정을 할게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공시가격으로 14억 초과하는 주택이 전국에 한 19만 호 정도 되는데 그중에 비거주는 말씀하신 비율에 따라 25% 정도 해서 4만 7000호로 현재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토론하고 소통하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리고 금년 1월 30일 날 문제가 된 게 주식시장에서 단일 종목에 대해서 플러스마이너스 2배로 레버리지 ETF를 출시했잖아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출시는 5월 달로 알고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출시한 것, 그러니까 그것은 1월 말부터 입법예고를 하고 부처 간의 의견 제출을 하라고 하는 기간이 20일 동안 있었어요. 그때 재경부가 금융위원회에 재경부

의 의견서를 제출했어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의견은 특별히 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윤후덕 위원 안 됐어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번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러면 그렇게 위험한 상품에 대해서 재경부가 의견도 안 낸 거네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그것도 제가 체크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어떤 상품 자체와 함께 정책의 변화나 가계대출 규제를 받거나 이런 경우에는 미리 대화도 하는데 상품 인가와 관련해서는 제가 대체로 의견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오후에 또 질의할게요.

.....
○위원장 조승래 윤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광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광재 위원 재정경제부장관은 경제 컨트롤타워이자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사람입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맞습니다.

○이광재 위원 그러면 컨트롤할 때 측정하지 못하면 관리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으면 목표에 도달할 수 없는 게 경영학의 기본원리인데 측정하고 통계를 내는 게 중요하겠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굉장히 중요한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이광재 위원 그러면 표를 하나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왜 국가는 세계 12위 국가인데 국민의 삶은 33위일까요? 국민의 삶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광재 위원 행복하려면 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일자리, 주거, 아니면 여러 가지 복지제도.....

○이광재 위원 결국 일자리, 그렇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이광재 위원 집, 보육, 교육, 의료, 노후연금, 문화생활, 이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니에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광재 위원 그러면 현행 지표로 12개 분야 234개를 가지고 국민들의 생활을 평가하는데 적어도 핵심적인 지표 일곱 가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국가가 관리를 해야, 이것을

목표로 해야 국민들의 정책 목표가 생기는 것 아닌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그런 방향성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재 위원 그러면 적어도 일곱 가지 부분에서는 삶의 질을 만드는 데, 이것은 법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통계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되는 거예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사실 지표와 관련해서는 다른 나라들도 다양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광재 위원 우리가 경제학에서 유령 GDP와의 싸움이 전 세계 정치인에게서 시작되었다. GDP는 상승하는데 일자리가 없잖아요. 고용이 없는 성장이 되잖아요. 해외에 공장을 짓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의 삶에 무엇이 가장 필요한 건지 핵심 지표에 대한 관리를 안 하면 경제정책의 방향이 없는 것과 동일한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표 관리가 필요한데……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공감합니다.

○이광재 위원 나중에 보고를 해 주세요.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기획예산처 기능이 없어졌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분리돼 있습니다.

○이광재 위원 분리됐지요. 그러면 지금 주택 예산을 대폭 늘려야 되면 재정경제부장관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주택정책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필요한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세제나 금융이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관계부처 간에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광재 위원 그러면 예산을 쓸 때 예산편성지침에 관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그것은 제가 볼 때는 협의할 수는 있지만 고유의 권한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광재 위원 그러면 뭔가 정책에 관여할 수 있는 권리를 어떻게 가질 거냐.

두 번째는 평가를 보게 되면 예산을 편성한 데하고 평가를 한 데 보면 너무 성공률이 높잖아요, 97.1%. 이제는 예산을 편성한 것하고 평가하는 것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부처 평가 자체가 좀 관대한 경향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위해서는 아마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좀 더 관리를 타이트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광재 위원 외부 전문가가 중요한 게…… 기획예산처가 만들면 재정경제부에서 예산을 평가하는 시스템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야 목표 관리가 될 것 아니에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그 부분은 좀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광재 위원 검토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국고국을 가지고 있지요, 재정경제부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국고실이 있습니다.

○이광재 위원 국고실이 있지요.

국유재산하고 공유재산하고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재산을 보면 3800조 원이에요. 그렇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이광재 위원 그러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재산을 쉽게 볼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국고 갖고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쉽지 않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광재 위원 안 되게 돼 있지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하나를 지으면 그게 교육부 땅이든 행안부 땅이든 언제든지 쓸 수 있어야 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국유재산에 대한 근본적인 국가 시스템이 필요한데, 법적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국가자산기본법을 저희들이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의견을 많이 들어서 최대한 서둘러서 법안을 마련해 볼까 하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국가나 지방정부,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자산을 총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광재 위원 자기의 자산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지금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라 고쳐 주시고.

다음 페이지.

이게 부산 대학교에 있는 연합기숙사예요. 우리가 청년주택을 그렇게 얘기하는데 학교 땅은, 국유지는 땅값이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연합기숙사를 지으니까 청년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그런 기숙사가 있습니다.

○이광재 위원 이 사례를 전국적으로 만들면 청년주택에 들어가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말씀 주신 취지에 제가 공감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몰라서 저희가 한번 검토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광재 위원 아니, 지금 행복기숙사는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는 사례예요. 이것을 대대적으로 해서, 대학생들 1000원 밥값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바깥에 나오면 60만 원, 80만 원 하는 것 아니에요, 대학생이? 청년 주거를 실질적으로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광재 위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재정경제부장관인데 금융정책에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결국 F4 등을 통해서 금융정책에 대해서 같이 협의하고 같이 조율해 나가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광재 위원 그러면 우리가 벤처기업을 키우는 데는 기술신보, 신용보증기금 그다음

에 국민성장펀드, 국부펀드, 한미전략투자공사 이게 다 하나의 국가 전략으로 움직이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그렇게 돼야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광재 위원 그렇지요? 이게 한눈에 볼 수 있어야 이 단계는 국부펀드가 들어가는구나, 이때는 시드로 벤처를 키워야 되겠구나, 이것을 한미의 전략적인 투자산업으로 하면 한국의 미래가 열리겠구나 이런 관점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관점은 도대체 누가 대한민국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재경부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광재 위원 지금 현재는 시스템이 없는 것 아니에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국부펀드는 현재 법안을 저희가 제출해서 이제 국회랑 상의드릴 계획이고요. 나머지는 뚜렷하게 딱히, 개별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재 위원 이 부분에 국가적인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건지, 법이 필요하면 법률, 이게 바로 재정경제부가 자기 위상을 저는 정확히 가지는 거라고 보는데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광재 위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퇴직연금은 결국 퇴직할 때 인간이 살아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데 퇴직연금 이것 자체가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처럼, 401K처럼 주식을 장기 보유하게 되면 이게 나중에 퇴직할 때 안정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뭔가 국가적 시스템이 새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말씀 주신 것처럼 퇴직연금 적립금이 이제 500조까지 올라갔는데 수익률이 저조하다 보니 이게 노후소득 보장 기능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라는 부분에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올해 노사정이 합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현재 저희가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광재 위원 이것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가구 1주택은 확실히 보호돼야 되는 게 맞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1가구 1주택.

○이광재 위원 1가구 1주택을 확실히 보호하고 우리가 실거주·비거주를 구분해서 현실적인 정책을 할 때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것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승래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질의는 강민국 위원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임이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감사합니다.

○임이자 위원 후보자님, 1971년생으로서 만 55세, 대구 출신 맞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맞습니다.

○임이자 위원 대구 경상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서울대 경제학과에 입학해서 소년급제 하셨지요, 재학 중에?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재학 중에 했습니다.

○임이자 위원 재학 중에 고시 패스했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맞습니다.

○임이자 위원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거시경제라든가 경제정책, 물가 대응, 성장전략, 금융·자금시장 분석 및 정책 조정을 하는, 두루두루 거친 경제전문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관으로 계시면서 오락가락하는 세제개편이라든가 고물가·고금리 그리고 기울어진 균형발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상당히 좀 실망을 많이 하고 있었고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 답변하는 내용들을 보면서 약간 좀 소신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걱정도 많이 됩니다.

그 속에서 후보자께서는 정성호 위원님께서 야당과도 소통을 많이 해야 되고, 특히 야당에서 정책을 하고 있는 사람들하고도 소통을 많이 하라라고 했는데 제가 국민의힘 야당 정책위의장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알고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 저랑 소통을 할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꼭 부디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 얘기를 좀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발언에서 경제수장으로서 성장과 또 더 나아가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말씀하셨지요. 그러면서 양극화를 해결해야 된다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후보자님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기울어진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26년도 6월 30일 날 국무회의 겸 비상점검회의에서 호남 차별론에 대해서 언급하신 적 있지요. 그리고 8월 26일 날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라는 말씀도 있으셨지요.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지역균형발전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그간에 저희가 우리나라 성장 활동에서 수도권 중심으로 성장을 하면서 생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노정됐다. 그런 점에서 현재로서는 계속 우리나라가 성장을 하려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려면 지역균형발전이 없이는 어려운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 좋습니다.

지속가능한 성장이 지방이 골고루 성장해야 되겠지요? 맞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지방 주도로 성장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이자 위원 그러니까 지방이 골고루, 지방 주도는 맞는데 지방에 주도권을 줘야 지방 주도로 성장을 하든가 말든가 하지요. TK 행정통합 할 때도 우리가 하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나 민주당이 안 해 줘서 지금 못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지방 주도 성장이라고…… 경제 컨트롤타워를 관리하시는 수장 입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저기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TK 지역에서 보게 되면 신공항은 외면당하고 있고 행정통합은 뒷전이고 반도체는 패싱당하고 있고 공공기관 통폐합에 대해서도 감감하단 말입니다. 여기에 관련돼서 홀대론이 확산되면서 민심이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경청하고 있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경청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임이자 위원 지금 그러면 TK 신공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도심공항을 갖다가 이전하려고 TK가 10년 동안 노력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임이자 위원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알고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 왜 그 군공항을 이전하려고 할까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거기에 새로운 산업단지나 새로운 것을 활용……

○임이자 위원 새로운 산업단지, 오로지 그냥 우리가 신공항을 경제권 조성하기 위해서만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 이전에 국민들의 고통이 있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그렇습니다.

○임이자 위원 소음, 소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옆에 있었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러니까 잘 아시겠네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임이자 위원 그러면 그 소음이 대단하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알고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 소음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한 24만 명 정도 돼요.

그다음에 또 재산권 피해도 받고 있지요, 고도 제한으로. 그렇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임이자 위원 거기가 한 3458만 평 정도가 고도 제한으로 피해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신공항을 통해 가지고 경제권도 조성하고.

그다음 K2 현대화도 우리 국가에 큰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국토 방위·안보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루두루 좋은 것 아닙니까? 맞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이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TK 신공항 관련해서는 재원 조달 방식이 군공항 이전이 전부 다 대부분 기부 대 양여금 맞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기부 대 양여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런데 기부 대 양여인데 지금 특별법상에 보면 제20조 1항에 보게 되면 예산 범위 내에서는 필요한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하고 용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임이자 위원 그래서 김부겸 대구시장후보는 4월 23일 날 공자기금 5000억 그다음에 정부 특별지원금 5000억 해 가지고 1조 원을 확보하겠다고 공약으로 얘기를 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말씀 주셔서 방금 들었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리고 대통령도 5월 15일 날 현지를 직접 방문해서 경청을 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27년도에 예산이 1원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0원입니다, 0원. 여기서 재경부는 무슨 얘기를 하나면 형평성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차관도 여기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그것은 2차관실 업무였는데 제가 가면 챙겨 보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챙겨 볼 거지요?

그런데 광주 군공항은 올해에 이전부지가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갖다가 1조 원 플러스알파로 지원을 구체화하고 있고 대통령실에서 TF를 꾸려서 챙기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임이자 위원 후보자님, 이 정도 되면 TK 신공항에 있는 대구경북 사람들이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소외감을 느끼면서 부글부글 끓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고 경제부총리가 되신다라고 한다면 TK 신공항 관련 해서도 대통령실이 주도적으로 이걸 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경부, 국방부, 기획예산처, 국토부 다 같이 여기도 TF를 구성해서 똑같이 여기에 대해서도 국가가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취임하게 되면 대구 군공항 이전 사업도 관계 기관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노력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 부분은 분명히 같이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후보자께서 모두발언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속가능한 성장이 되려고 한다면…… 이것도 지역균형발전 중의 하나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맞습니다.

○임이자 위원 특히 광주공항 이전 관련해서는 지금 소음은 또 예천, 서산, 충주 보고 책임지라고 그러고 여기는 반도체가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TK 신공항 부지 이전에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싱시켰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TK에서는 분노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장관후보자에게서 장관이 되시면 반드시 이전에 대해서 책임 지고 TF를 구성해서 검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승래 임이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태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태호 위원 우선 경제부총리 내정되신 것 축하드리고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감사드립니다.

○정태호 위원 아까 인사말씀도 그렇고 답변 중에서 지속가능성장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UN에서 한국에 대한 지속가능성장 평가지수를 보면 올해 몇 위인지 아세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정확하게 확인은 못했습니다.

○정태호 위원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34위인가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 그중에는 기후대응과 불평등 문제에 대한 대응 이런 것들이 중심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는 잘 성장했는데 중요한 사회적 지표에서 바닥인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부총리로서 경제정책의 핵심과제를 뭐로 설정하느냐는 대단히 저는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물론 인사말씀에서 얘기하셨지만 제1과제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취약계층을 잘 성장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보는 양극화는 지역 간 양극화도 있고 세대 간 양극화도 있고 산업 간 양극화도 있고 계층 간 양극화도 있고 다양하게 스펙트럼이 있는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이 중에서 어떤 것을 더 우선적으로 갈 거냐는 굉장히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저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관통할 수 있는 것은 청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에 좀 더 관심을 두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정태호 위원 9월 18일이 청년의 날인 것 아시나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정태호 위원 2020년에 청년기본법이 제정됐는데 그 청년기본법에 의하면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이 청년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가 청년의 날이 되는 날이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감사합니다.

○정태호 위원 청년정책위원회가 있다라는 것을 아시나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알고 있습니다.

○정태호 위원 총리가 위원장인데……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총리실에 있습니다.

○정태호 위원 그 멤버로 경제부총리가 들어가는 것은 아시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알고 있습니다.

○정태호 위원 청년위원회 회의가 있었는지 한번 점검해 보셨나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제가 차관으로 몇 번 참석했습니다.

○정태호 위원 그러니까 장관이 멤버인데 차관이 참여하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일정상으로 어려웠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정태호 위원** 그만큼 청년이 중요한데, 장관이, 그전에 저는 경제부총리가 꼭 참석을 하셔서 청년고용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태호 위원** 그런 거고.

애기가 나온 김에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정치권력과 관료권력의 관계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관료가 정치권력과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한 국가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 크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최근 한 4, 5년을 지켜보면서 느끼는 것은 관료권력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회의를 저는 가지고 있어요, 특히 경제관료에 대해서는.

관료권력의 가장 큰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힘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국익을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할 때 그 중심에 있고 공익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태호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퍼블릭 마인드. 퍼블릭 마인드 그리고 전문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행정학 이론상으로 보면 포획 이론이라고 해 가지고 관료의 전문성을 가지고 정치권력을 포획한다 이런 주제가 연구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정태호 위원** 그런데 과연 지금 대한민국 관료, 특히 경제관료가 그 전문성을 가지고 나라를 끌고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더욱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태호 위원** 그 점에 있어서 저는 최근에 부동산 세제 관련 논의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스러움을 느끼고 있어요. 왜 이 혼란이 생겼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저희가 입법예고 과정이나 그전에 토론회도 사실 많이 했었는데요. 의견들을 굉장히 많이 듣는 과정을 거쳤습니다만 충분하게 좀 더 고민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태호 위원** 저는 그게 관료의 전문성과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있어서, 특히 부동산 관련 세제개편에서 목표가 뭔지 저는 불분명해요. 목표가 뭐였습니까? 정책 목표가 뭐였다고 생각하세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첫 번째는 거주 중심의 주택문화로 가자, 그리고 공정과세를 도입하자, 그리고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보호를 확실하게 하자 이런 게 저희가 추구하는 목표였습니다.

○**정태호 위원** 그런데 그 목표가 지금 다 흔들리고 있는 것 아닌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아니, 저희가 그 원칙은 그대로 잘 견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태호 위원** 그 목표가 저는 처음에 보고를, 보고라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설명을 들을 때 부동산 과세의 정상화였어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제가 공정과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태호 위원** 최근 주택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가격을 정상화해서 중부세 부담을 줄여 준다는 게 첫 번째 있었어요. 그다음에 과세의 공정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 공정한 과세를 하겠다라는 거였잖아요. 저는 그게 핵심적인 목표였다고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주택 거주자와 비거주자 논쟁이 벌어져 버렸어요. 거기서 저는 정부가 엄청 흔들리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정책의 목표가 뭔지가 늘 궁금했습니다. 그 두 가지를 견지하면 그렇게 흔들릴 일도 아닌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제 판단이니까요 참고를 해 주시고.

그래서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발표를 할 때는 그 목표의식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 목표에 따라서, 그야말로 그 목표가 정당할 때 그리고 국민의 동의를 얻을 때 수단은 얼마든지 실용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오히려 목표가 흔들리니까 모든 수단들의 정당성이 다 무너져 내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에서 저는 경제부총리께서 이번의 부동산 관련 세제 논의 과정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서 가지고, 앞으로의…… 지금 여러 가지 개혁과제들이 많잖아요. 그때마다 이 목표의 정당성을 국민들한테 설득하는 노력을 좀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승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남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남준 위원 후보자님 지명 축하드립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감사합니다.

○김남준 위원 본격적으로 질문드리기에 앞서서 기본적인 내용부터 한번 짚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앞서서 모두발언 말씀을 하실 때 장관으로서의 철학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 우리 헌법 제10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고요. 34조를 보면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또 국가에는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종합해 보면 헌법에서 요구하는 국가의 역할은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 그리고 또 동시에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제부총리의 역할도 역시나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 제119조를 보면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동시에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 적정한 소득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헌법이 지향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관점에서든 불공정, 격차 이런 부분들을 바로잡고 국민경제 전체의 성장과 안정을 도모한다. 그럼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또 인간다운 삶의 영위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이 헌법에 규정해 놓은 국가의 역할 그리고 나아가서 경제수장으로서도 눈여겨봐야 될 지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도 장관께서 모두발언에서 언급을 하셨지만 재정경제부장관의 분명한 원칙과 철학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또 필요한 곳에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하면서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는 것이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의 경제정책들을 돌아보면 이런 측면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는 지점들이 보입니다.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회복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 그리고 또 그에 따른 전략들 이런 것들이 충분했느냐 이런 지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지요. 그래서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께서 과연 우리 경제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 또 지난 정부의 경제정책에서는 배울 점이 무엇인지, 앞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우리 경제를 어떻게 이끌어 갈지 이런 역량과 비전이 있으신지를 한번 여쭙보고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첫 번째로 공공정책의 책임자로서 그 능력을 따져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과거 정부에는 사례가 어땠었고 앞으로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계신지를 여쭙보려고 합니다.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공공정책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대국민 서비스의 안정된 제공’제가 이렇게 핵심을 정리해 봤습니다. 앞서서 헌법 정신을 말씀드렸듯이 정부는 정책의 공공성 강화를 지속 추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동의합니다.

○김남준 위원 최근에 공공기관 기능 개혁이 있었습니다. 109개 기관 통폐합, 어느 정부보다도 많은 효율화 조치였다고 보고 또 질적인 수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평가할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질적인 방만 경영을 해소하면서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국가 공공 역량을 극대화시키는 게 필요하다는 거고요.

고속철도 KTX-SRT 통합을 했고 전력발전 5개사를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님이 보시기에 이전에 왜 이렇게 고속철도와 발전사 운영사들이 나뉘져 있었다라고 보십니까? 그 배경이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통합할 필요성을 느꼈지만 굉장히 어려운 과제가 아니었을까 생각하고 정책적 결단 이런 것으로 저희들 이번에 그걸 갖고 한번 통합을 해 보고 결정을 내린 것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이것은 핵심 기능을 전략적으로 재배치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책 환경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영을 키우려면 이 시점에서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남준 위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의 사례에서 경험과 교훈을 좀 배우는 것도 필요하겠단 싶어서 다시 한번 짚어 보려고 합니다.

2011년 정부의 ‘KTX 민영화를 적극 검토한다’ 이런 발표가 있었고 국민적인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당시 국책연구원이 ‘요금 20% 인하 효과가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뚜렷한 근거 없어서 철도공사 임직원들이 교통연구원을 고발 조치하기도 했습니다.

민영화 시도가 반발에 막히자 정부는 자회사 분리로 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주회사와 자회사 이렇게 양쪽으로 나누는 체제로 전환을 하기에 이르렀고, 사실 자회사를 만들어서 모회사와 경쟁시킨다 이런 개념 자체도 잘 이해가 안 되지만 10년 넘게 고속철도 서비스가 이런 이원화로 체제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얻은 추가 편익이 과연 있었느냐 묻고 싶고, 이번 통합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요금이 인하되고 좌석 수도 크게 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전력발전 5개사의 경우에도 비슷한 과정을 겪었습니다. 1999년에 정부가 전력산업구조개편을 목적으로 한 민영화 계획을 발표를 했고 3단계에 걸친 시장 분리 계획으로 발표를 하자 큰 우려와 비판이 있었고요. 그런데 2001년에 캘리포니아 발전 민영화로 인해서 열 차례 정전 사태라든지 요금 40% 인상 이런 폐단이 알려져서 전력 민영화에 대한 거센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5개사를 분할하는 정도에 멈췄고, 그 이후에 전기 이용에 요금이나 서비스 측면에서 개선된 바가 있다고 후보자님은 보고 계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남준 위원** 2008년 이명박 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으로 24개 기관 민영화하고 131개 출자회사 정리를 합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49% 지분매각 계획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2020년 이후에 인천공항은 세계 1등 공항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런 성장세에도 당시 ‘왜 파느냐?’ 이런 국민의 의문에도 여러 차례 추진을 강행했었고 22년 윤석열 정부에서도 대통령비서실장이 인천공항 지분매각 필요성을 언급을 하면서 민영화 추진 의지가 계속해서 살아 있는 상황이었었습니다.

우회적인 민영화로서 지분매각이 있었다면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서는 공공기관 자산매각이라는 한 번 더 우회하는 일이 있었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부족해서 오후 질문에서 추가적으로 이어 가겠습니다만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의결로 14조 5000억이라는 무분별한 자산매각에 착수를 하기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러면서 공공자산 매각 추진으로 헐값 매각, 투기자본 혜택 이런 논란이 일었고요. 코레일이나 LH 등등 공공자산 매각하고 YTN 지분도 민간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발전 5사가 보유한 지분도 주식 가격 7조 원에 비해서 인수희향가는 1조 3000억 원이라는 큰 격차를 보이면서—인도네시아 바얀 광산 지분 말씀드리는 건데—제대로 이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정부에서 통폐합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의 공공 기능과 자산을 회수 불가능하고 무책임하게 매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도 공공기관 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한 이후에도 부처별로 로드맵 수립과 조속한 이행을 독려하고 저희 부 차원에서도 계속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준 위원** 나머지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승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마지막 질의입니다.

강민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경남 진주를 강한 대한민국 강민국입니다.

김용범 실장 잘 아시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언제부터 아셨어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차관 할 때 제가 국장으로 있었고요. 그 전에도 아마 같은 부서 내에서 같이 있었던 것으로……

○강민국 위원 또 대학 선배고 고시 선배고 또 부처에도 같이 계시고, 그렇지요?

1차관 재직 시절에 김용범 실장하고 일주일에 대면보고를 몇 번 하셨어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그것은 제가 자세하게 카운팅은 못 했는데……

○강민국 위원 그러니까 대충 평균 몇 번 하셨냐고.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한두 번 이상은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강민국 위원 우리 관가와 시장에서 다 아는 이야기지요, 김용범 실장의 오른팔이다 또 눈빛으로 통하는 경제사단이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그것은 좀 과한 평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강민국 위원 너무 높게 평가해 줬나, 후보님을?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아마 처음에……

○강민국 위원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아쉬워요. 김용범 실장님이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 서는 좀 더 오래 정책실장으로 계셔야 되는데 참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장관 지명 사실, 김용범 실장이 후보님보고 구윤철 잘릴 테니까 준비하라고 언제 말씀하시나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그런 말씀 들은 적이 없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러면 누구한테 최초로 통보받았습니까? 아니, 전화를 받았을 거잖아, 통보를.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

○강민국 위원 그게 뭐…… 청문회 하는데 답변을 하셔야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지금 김용범 실장으로부터 받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민국 위원 김용범 실장이 구윤철 잘릴 테니까 준비하라는 소리를 안 하시던가?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전혀 들은 적이 없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런 적이 전혀 없었다고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강민국 위원 그런데 구윤철 장관이 아직 공항에 앉아 있던 그 시각에 본인께서는 수장에 지명됐다는 사실 알고 계셨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저는 집에 있었습니다.

○강민국 위원 아니, 그것을 연락받고 알고 계셨잖아. 뉴스로 보고 아셨던 건 아니잖아.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강민국 위원 그래서 이게 그런 말이 많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총괄하는 사령탑이 공항 한복판에서 영문도 모른 채 내쳐지는 그 살벌한 광경을 모든 국민들이 지켜봤어요.

그래서 전부 다, 시장에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구윤철 장관은 투명 인간, 즉 모든 것을 패싱하고 후보가 김용범 실장하고 직접 보고한 결과가 지금의 그 자리라고, 후보 자

리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제가 청와대에 만약에 보고할 일이 있을 때는 그 전에 반드시 부총리께 이런 사항을 보고한다고 말씀드리고 제가 직접 하지 않더라도 보고서를 만든 실무자한테 보고하라고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합니다.

○강민국 위원 단일 레버리지 ETF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후보님도 여러 정권에서 일을 하셨지요. 그렇지요? 정권은 돌고 돌아요, 항상.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김용범 실장님 같은 경우는 ETF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 때문이라도 아마 특검이 가동되면 그것 다 연관된다고 봅니다, 지금 후보님하고. 그렇지요? 그리고 철저하게 이 자리에서, 다 속기록에 남으니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우려하는 게 후보님이 앞으로 장관으로 직무수행을 제대로 하겠는가에 대한 우려가 있어요. 왜? 2002년도 윤석열 정부 기획재정부 차관보 시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투기 수요 단속하기 위해서 다주택자에 대해 굉장히 많이 징벌적 과세를 했다’, ‘다주택자 과세가 임대차 시장에 전이돼 임대료 인상을 일으키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있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그 부분의 취지는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러면서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 방안도 마련하셨어요. 그렇지요?

아직도 다주택자 중과세에 대해서 징벌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저는 그 당시 발언의 취지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서 임대 공급이 민간에서 돼야 된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도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변화가 없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래서 징벌적이라는 윤석열 정부 때 했던 그 말씀을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그 당시에 거래 절벽 상황에서 임대 공급을 위해서 다주택자의 역할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전세사기 문제라든지 시장 불안 등이 야기됨으로써 개인 다주택자의 공급을 계속 갖고 가기에는 어렵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 이후도 계속적으로 저희들은 안정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려면 장기 민간임대 법인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는 180도 입장이 바뀌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다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 축소, 3주택 이상 공정가액비율 인상,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폐지 등 지금 다주택자 과세 강화에 굉장히 앞장서고 계세요. 입장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다주택자 과세는 징벌적이라고 하신 분이 어떻게 경제적 소신을 180도로 바꾸고, 이것도 윗선이 원하는 증세안을 말 한마디 안 하고 펜 한 번 안 흔들고 그대로 받아쓴 것 아니에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

기……

○강민국 위원 김용범 실장이 뭐라고 했어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는 없었고요. 장기 민간임대 법인의 지속적인 활성화가 필요하다, 개인 다주택자보다는 법인 형태로 가야지만 20년 이상 장기적으로 민간임대 공급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비 아파트의 경우에는……

○강민국 위원 아니, 후보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지금 180도로 바뀌고 있는 정책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제 사령탑 하겠다는 사람이 경제 원리나 데이터도 아니고 정권의 입맛, 윗선의 하명에 따라서 그렇게 굶대 없이 흔들리면 앞으로 어떻게 그 말 믿고 다 따르겠습니까? 어떻게 투자와 재무 계획을 세울 수 있겠어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민간의 임대 공급을 늘려야 된다는 것은 계속적인 소신이고 그때도 주장했었고 지금도 주장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민국 위원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또 시장이 가지는 메시지,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메시지는 정반대예요, 지금. 대통령 지시사항이든 정책실장 지시사항이든 간에 잘못된 정책이라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맞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만약에 합리적인 부분을 벗어난다면 이야기는 드리는 게 맞습니다.

○강민국 위원 윤석열 정부의 모범사례를 잘 따르세요.

그리고 ETF 관련해서 여쭙볼게요.

지금 재정부, 금융위, 한국은행 등 해외투자 수요를 국내로 돌리겠다고 야심차게 깃발을 들었는데 정작……

추가질문 때 할게요, 방법이 없잖아.

○위원장 조승래 고생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 자료 준비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회)

○위원장 조승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첫 질의는 존경하는 이준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준석 위원 후보자님, 몇 가지 여쭙겠는데요. 이번에 부총리가 되시면, 이제 재정부 장관이 되시면 국무회의에 참석하시게 되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맞습니다.

○이준석 위원 국무위원 서열이 몇 위지요, 재정부총리가?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총리 다음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준석 위원 국무위원 중에 1등입니다. 총리는 부의장으로서 회의를 하게 되고 국무

위원 중에는 서열 1위가 되게 되는데 국무위원으로서 정책 심의할 때 대통령이 생각하시는 정책과 본인의 소신이 충돌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반대 의견을 내시겠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소신에 맞는 이야기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소신에 맞게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우려가 많은데 지금까지 무엇이 잘못되었다, 한번 짚어 주실 수 있으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지금 저희는 부동산시장에 대해서는 공급을 최대한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공급을 확대하는 노력을 계속 기울이고 있는데 아직 여러 가지 절차적인 완성도라든지 법률 개정 이런 게 좀 미비한 부분이 있지만……

○**이준석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세제 정책이나 아니면 정부가 행한 규제들에 있어서는 문제점이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세제 정책 이제 막 시작을 한 상황이고요 법안을 국회에 낸 상황입니다. 국회에서 정부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국회 내내 심도 있는 숙의를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세법이 개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석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시행해서, 국민들의 우려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진행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이 입장을 유지하실 겁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현재 있는 세법안은 정부안인데 국회에서 저희가 계속 소통하고 숙의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어떤 합리적인 의견이 있으면 저희는 충분히 적극 논의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이준석 위원** 최근에 정부의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 이탈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후보자께서 좀 더 적극적인 어떤 소신을 가지고 국무회의나 이런 데서 발언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린 건데 지금 하시는 말씀은 그러지 않을 것 같아 가지고 좀 걱정이기는 한데요.

그러면 결국에는, 아까 오전 질의에서 보니까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 삼성전자에서 최근에 5억 원 대출해 주는 것 관해 가지고 후보자께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을 총대출한도에 집어넣고 해서 어쨌든 규제의 틀 안에 넣겠다는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 맞으시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아니요, 근저당을 설정토록 했기 때문에 근저당을 설정하면 자연스럽게 한도가 내려간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부 규제 틀 속에서 담기는, 이것은 은행을 통한 금융회사의 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준석 위원** 저는 후보자께서 상당한 일관성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접근해야 된다고 보는 게, 사실 최근에 있었던 일 중에 우리 국민에게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에 상당한 금을 준 사건이, 근저당 관련 이야기 알고 계시지요? 대통령께서 집을 파시면서 상당한 액수, 17억 원 가까운 액수를 근저당으로 설정하면서 매도를 하시고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주택 매매에서 가능한 형태인가를 가지고 논란이 많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사인 간의 계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석 위원 문제가 없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개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위원 이게 전부 다, 우리 국민들이 주택을 매수·매도 할 때는 토지거래허가나 이런 것들 상당히 넓게 펼쳐 놔 가지고 이 사안도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분당구청에서 허가를 받은 사안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올바른 판단이라고 보십니까? 사실 이런 게 많이 활성화되면, 소위 말하는 매도인 대출이라는 것이 활성화되게 되면 지금 정부의 대출 규제나 이런 입장과는 다르게 매도자에 따라 가지고는 거의 불법에 가까운 사대출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게 취지에 맞는 대출입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법상 제약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준석 위원 법상 제약은 없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앞으로 사용하는 것들은 정부가 막거나 불법화할 수는 없겠네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힘들 것 같습니다.

○이준석 위원 앞으로 그러면 주택을 매수·매도 할 때 어떤 여러 가지 제약이 사라지는 것 아닌가, 이런 매도인만 만나게 되면. 어떻게 보십니까? 이자도 안 받는다면서요, 대통령께서?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이준석 위원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의 케이스는 문제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아니, 사인 간의 계약일 경우에는 이야기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준석 위원 상당히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통령에게 사실 어떤 지적을 하실까 이 제 약간 우려가 되기는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대한민국에 전세로 들어 있는 사람의 수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임차 가구가 전체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전체 가구의 한 절반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석 위원 지금 주거실태조사로는 한 38%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가 사실 절벽에 오게 되면서 최근에 보면, 갱신계약을 하면 신고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이준석 위원 그런데 최근에 갱신계약 한 사례를 보면 넷 중에 셋이 보증금을 올려서 받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말씀하십시오.

○이준석 위원 그런다고 했을 때 사실 정부정책에 대해서, 아까 정부 부동산정책을 아직까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평가하셨지만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 부동산정책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안 좋고 그런데 전세가 상승에 대해 가지고 정부가 가진 구체적인 대안이 있습니까, 지금? 전세가 없어져야 될 제도다 이런 정도의 입장입니까, 아니면……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아니, 주택공급을 빨리 늘려서, 주택 공급량을 늘리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이준석 위원 주택 공급량을 늘렸는데 또 실거주 의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세입자에게 물량이 공급 안 되는 문제가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아니요, 공급량을 늘리면 당연히 전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외에도 더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서 비아파트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제 완화라든지 어떤 금융의 혜택을 준다든지 해서 더 빨리 공급이 확 촉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준석 위원 앞으로 그러면 아파트를 공급하면서 새로 신규 공급되는 주택들에 대해 가지고는 최대한 그런 실거주 의무나 이런 제약들을 줄여 나가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아닙니다. 공급량이 늘면 자연스럽게 전월세 임대차 물량도 늘어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전문, 저희들이 이번에 역점을 둔 8월 달 공급 대책 중의 하나는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임대를 공급할 수 있는 법인들을 육성해서 이분들이 실제로 건축을 해서 임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려면 규제를 풀어야 됩니다. 어떤 규제를 푸냐면 임대 규제를 풀어야 됩니다.

○이준석 위원 후보자님, 지금까지 부동산 역사에서 공급 대책을 내놓아 가지고 MB 때 정도 빼놓고, 그때는 시장이 신뢰를 했지요. 왜냐하면 좋은 물량을 왕창 풀겠다고 했으니까 그때 대기 수요가 발생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좀 안정됐던 때가 있고요. 지금 이재명 정부의 공급 대책은 사실 시장에 그렇게 효과를, 백몇십만 호 건설하겠다고 했는데 아무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준석 위원 임기는 이제 4년 남았는데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그래서 비아파트 쪽에 대해서 더 빨리하려고 하고 지식산업센터라는 이런 거 공실을 빨리 없애는 노력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조승래 이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영환 위원 반갑습니다.

일단 장관 지명, 내정 축하드립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감사합니다.

○김영환 위원 지금 세계 각국이 금리 인상 시기지요, 건축 과정이고?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맞습니다.

○김영환 위원 대한민국도 예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금리라는 게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물가를 잡는 거고 그다음에 부동산시장이

나 과대 공급된 통화 긴축 과정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외환시장 안정 작용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런데 그렇게 반대편으로는 이게 또 거시적인 지표이기도 하고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반대 측면에서는 일단 노동시장이 우리가 안 좋잖아요, 고용시장이. 거기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고, 아무래도 긴축 과정이 있으면.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통화정책은 사회·경제 전 분야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리고 불평등의 문제에 있어서도 안 좋아요. 왜냐하면 자산이 있는 집과 부채가 있는 집과는 금리 인상 시기는 계속 벌어지는 과정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기존에 대출자들, 중소기업, 소상공인 이런 데 여파가 심하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래서 재정정책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특히 방점은 이렇게 취약계층이나 금리 인상 시기에 피해를 보는 이런 계층들에게 재정정책의 효과가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한번 드리는데 의견 한번 주십시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위원님 말씀처럼 통화정책이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우려 사항들에 대해서는 재정정책에서 그것을 보완하는 것이 폴리믹스(policy mix)상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환 위원 그리고 이게 또 전 세계적으로 국채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대한민국 국채 시장 한번 좀 보고 회사채 시장도 한번 봤는데 지금 27년 국채가요 우리가 총 222.8조 원, 국고채 총발행액입니다. 이 중에 순증은 좀 줄어들었어요. 그렇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한 3조 원 정도……

○김영환 위원 13조 원 정도 줄어들었고요. 만기상환용 발행인데 이게 대폭 늘었습니다, 20조 원.

자, 그러면 제가 발행내역을 좀 보니까 2년물·3년물짜리 이게 반절이 넘어요. 그러니까 3년물짜리면 23년도에 24년도 본예산 올라올 때 그때 24년도의 국채 발행 물량이고요. 2년물짜리는 이제 돌아오는 물량은 24년도에 25년도 국채 발행 올렸을 때 그 국채 발행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그렇습니다.

○김영환 위원 대규모로 돌아옵니다.

이때가 어느 때인지 아시지요? 23년도 세수 상황이 매우 안 좋았던 시기 아닙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그렇습니다.

○김영환 위원 24년도도 그렇고요. 그런데 추가적인 국채 발행을 못 해요. 왜? 국회 동의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취했던 거지요, 그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정부 내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김영환 위원 어떻게 했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기금을 갖고 활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환 위원 외평기금 돌려 막기 하고 주택도시기금 1.5조 안 주고 우체국보험 갓다 쓰고 그다음에 또 있었잖아요. 지방교부금·교부세 일률적으로 다 깎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내부에 엄청난 피해를 갓다준 상황입니다. 그러고도 지금 2년짜리, 3년물짜리 대환 국채가 굉장히 커졌어요.

그런데 지금 국채 시장이 걱정이예요, 연말부터 시작해서 내년. 그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혹시 이 물량을 다 소화하려고 하면?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현재 국채 발행이 연말에는 잔여 물량이 남아 있는데요. 그중에 일부는 말씀하신 이런 계획이 있고 또 일부는 저희가 시장조정물량이라는 걸 국회에서 한도를 받아서 갖고 있습니다. 그걸 갖고 시장에 필요한 경우에 시장 안정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으로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김영환 위원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바이백 효과가 조금 시장 기대보다 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국채금리가 튀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10년짜리 계속 튀어요. 그런데 이게 일정 정도 헤지 비용까지 하면 우리나라 국채 수익률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수요가 좀 부족할 거다라는 제 생각이구요.

진단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한번 들어 보시고 말씀을 주시면 좋겠는데, WGBI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패시브 자금 4~11월까지 들어오는 것 8분의 1씩 다 끝났어요. 더 이상 신규 자금은 없는 상황이지요. 맞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11월까지 들어오는……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11월까지. 그러니까 더 이상 신규 자금은 없잖아요, 다 조정하는 것밖에 없고.

그다음에 지금 이것 때문예요 기업 자금조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지금 회사채(AA-3년) 신용스프레드가 67.4bp, 신용스프레드가 그렇게 엮어졌어요. 그래서 회사채 같은 경우도 대개 단기자금성으로 빌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지금 국채 발행 물량 소화 관련된 부분하고 이게 또 회사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하고 해서 부총리후보자께서 관리 측면에서 되게 중요한 시기에 와 있다, 과거의 업보가 계속해서 축적돼서 지금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반가운 소식 중의 하나는 IMF 공적자금상환기금 내년에 끝나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27년에 상환을 완료하게 돼 있습니다.

○김영환 위원 이제 IMF 빚은 30년 만에 다 털어 내는 겁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상황 발생 후 30년이고 상환하기 시작한 걸로는 25년 만에 상환입니다.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말 국민의 허리띠를 졸라맸던 그 빛의 더미에서 하나가 굴곡에서 헤어 나오는 것 같아서 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국채 시장하고 회사채 시장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관리하실지.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말씀하신 대로 채권시장은 저희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자금조달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지금 현재 또 글로벌 국채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인 만큼 특별히 모니터링을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시장 안정 조치 등을 통해서

변동성이 과다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저희는 안정적으로 관리할까 생각하고요.

현재까지 나와 있는 국채 물량은 저희들이 볼 때는 안정적으로 소화할 수도 있다 생각이 들지만 말씀하신 대로 수요 측면에 여러 가지 우려도 있는 게 사실인 만큼 일단은 관계 기관하고 시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 회사채 시장도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회사채 시장은 아직까지는 말씀하신 대로 스프레드 좀 확대는 되어 있지만 아마 금리와 관련해서 선반영된 것도 있고 한데 국채까지는, 아직 기업의 자금조달까지 영향은 제한적인데 그것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승래**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의힘 김상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후보자님, 얼마 전에 사퇴한 김용범 실장하고 이형일 후보자, 홍지선 국토교통부장관 내정자가 특별히 친하게 밀착된 관계로 지냈다 그러는데 맞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3명이 같이 친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지요, 아니면……

○**김상훈 위원** 내가 뭘 물어보려고 하나 하면 김용범 정책실장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레버리지 ETF의 설계라든지 미래대응기금에 같이 참여를 한 적이 있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김상훈 위원** 미래대응기금은 누구 아이디어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그건 저희 쪽이 아니고 아마 기획예산처하고 협의 과정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훈 위원** 기획예산처차관한테 물으니까 모르겠다는데요?

이 말도 안 되는 기금의 설계를 누가 했는지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정체를 밝히지 못하겠어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설계자가 누구인지 저도 잘 확인이 안 됩니다만……

○**김상훈 위원** 이형일 후보자도 재정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 많은 재정전문가들이 세상에 이런 기금은 있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영상자료를 보며)

첫째는 내 마음대로 기금입니다. 지금 164조 조성한다고는 하지만 기금 규모의 상한도 정해지지 않았어. 언제까지 존속하는 것도 정해지지 않았어. 운용 기준도 법에 없어. 여유자금 운용한다 그러면 목표수익률을 어떻게 할지, 투자 범위를 어떻게 할지, 손실이 발생하면 책임과 보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지금 명시돼 있지 않아요.

더군다나 기가 막힌 게 보니까 이 기금의 관리운용책임자가 기획예산처장관이에요. 운용도 기획예산처장관이 하고 운용에 대한 심사위원장도 기획예산처장관이 하고. 자기가 집행해 놓고 자기가 심사를 해요. 심의위원도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촉을 해요. 이런 기금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기금의 집행과 심의에 대해서 견제장치 하나도 없어. 이런 기금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미래대응기금이 생긴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세수 자체가……

○김상훈 위원 제가 기획예산처차관한테 어쨌든 조금 번거로운 일이 있어도 국회의 사전의결 절차를 밟는 추정이나 일반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쓰기 좋은 돈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 주머니 쌈짓돈 쓰듯이 이렇게 쓴다면 앞으로 어떤 부작용이 있을 것 같아요?

다음 한번 봅시다.

이게 미래대응기금이 아니고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기금입니다. 적자국채를 100조 가까이 빚을 내면서 여유자금 104조 원을 적립한다? 이것 누가 책임져요?

금리 보니까 이것도 이상해. 빌려 오는 돈의 금리는 4.4%인데 조성된 적립금에 대한 금리는 3.85%라. 그러니까 이걸 무조건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이런 기금을 운용한다는 게 이게 과연 합당한 일인지에 대해서 재정전문가이신 이형일 후보자도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해 봐야 돼요. 기금 운용에 대한 통제와 견제장치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런 거 없이 그냥 국회에 떠맡겨 가지고 통과시켜 주겠거니 이렇게 기대하면 그 책임은 전부 미래세대가 다 지는 거예요.

내년에 보니까 사상 최초로 국채가 1500조를 찍습니다. 그 부채는 언제 갚으려고 그래요? 국가채정법에 보면 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첫째, 교부세·지방교부금 정산, 공적자금 상환, 국채 상환 이런 것부터 먼저 하기로 돼 있는데 잉여금이라고 무조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쌈짓돈기금 만들어서 집행해도 됩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쌈짓돈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상훈 위원 물론 후보자 입장에서는 쌈짓돈 아니라고 이야기하겠지요.

기금 한도도 설정 안 하고 손실 났을 때 책임 보전 원칙도 하나도 없고, 그다음에 기금 운용과 심사는 기획예산처장관이 북 치고 장구 치고 다 하는데 이거 쌈짓돈 아닙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기금운용계획이 국회에 제출되면 관련된 심의를 받을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요. 그것 외에도……

○김상훈 위원 사후보고 사후보고 하지만 그것은 사실상 통보밖에 안 돼요. 그것은 견제장치가 아닙니다. 특히나 이번에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은 미래대응을 빙자해서 지방 말살시키는 기금입니다. 왜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지방교부세 30조 5000억을 축소시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제가 알기로는……

○김상훈 위원 무슨 지방계정 15조 얼마짜리 둔다고 하지만 그것은 기금에서 목적과 용도를 정해서 지방계정 기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지방교부세 같이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집행자금의 용도와 성격이 달라요. 지자체가 지방교부세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그것을, 30조 5000억을 축소하면 그 책임은 또 누가 져요? 이래 놓고 무슨 지역균형성장, 지방주도성장 그렇게 떠듭니까? 지방재원을 이렇게 말라비틀어지게 해 놓고 무슨 지방주도성장이에요?

물론 이 정부의 이념에 이형일 후보자가 앞장서야 되는 위치도 있겠지만 이렇게 견제되지 않는 기금, 지역에 이렇게 부담을 심각하게 주는 기금, 경제부처장관들 모여서 여기에 대한 안전장치를 충분히 마련하고 특히 지방말살기금이라는 말 안 듣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숙의를 하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취임하게 되면 좀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이 미래대응기금 자체는 지금까지 예상하지 못했던 대규모 초과세수가 들어 오면서 따라서 생긴 재정의 운용을, 탄력적 조정이 너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서 만드는 그런 취지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상훈 위원 시간 넘었으니까 내가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집행, 심사, 심사위원 위촉을 기획예산처장관 1인이 다 한다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자금보전기간, 조성 한도 금액 분명히 정해야 돼요. 그것 충분히 상의하세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그렇게 하고 또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승래 김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년입니다.

장관 지명 축하드립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감사합니다.

○김태년 위원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AI 대전환의 시기 또 대외적으로 경제환경의 불확실성도 매우 크고요. 이럴 때일수록 오늘 청문회 통과하고 임명받으시면 대한민국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태년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하겠다고 세제개편안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맞습니다.

○김태년 위원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작년인가요 이것 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했었는데 작년에는 조금 부정적이었는데 이것 그래도 이렇게라도 설계해서 제출해서 다 행이긴 합니다. 제가 관련 법안도 지금 발의를 해 놓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 설계를 해 놓은 걸 보면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생산세액공제든 투자세액공제든 공제가 실효성이 있으려면 영업이익이 있고 과세소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공제를 받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세제지원의 기본적인 전제가 됩니다.

○김태년 위원 물론 이월제도가 있긴 하지만 적자기업은 당장 이걸 현금화할 수가 없잖아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그렇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런데 정부가 선정한 6개 적격 분야, 이른바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도 제가 보니까 소부장이에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반도체부품.

○**김태년 위원** 예, 부품. 핵심소재, AI 로봇, 이 6개 분야가 안타깝게도 상당히 적자인 분야 또는 기업들이 많아요. 일례로 배터리 3사 같은 경우만 봐도 최근에 내리 적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생산세액공제 이것 아무리 도입해 봤자 기존에 투자세액 공제도 못 받고 있고 지금 R&D 세액공제 혜택도 못 받고 있는데 이것 그림의 떡 아닌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그래서 세제지원의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재정에서 지원을 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공급망안정화기금에서 공급망과 관련된 부분에서 지원할 수 있는 틀은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김태년 위원** 그래서 이런 걸 하나 제안을 해 보려고 그래요. 이것도 제가 했던 이야기인데, 지금 기업들이 필요한 것은 언제 공제받을지 모르는 그런 제도가 아니라 당장 필요한 건 현금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추가 투자도 하지요.

지금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를 한번 보자고요.

미국은 이월 대신에 직접환급을 하거나 제삼자 양도제도를 결합해서 지금 운용을 하고 있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김태년 위원** 그래서 기업이 즉시 세액공제를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터 주고 있는데 우리 기업들이, 배터리 3사만 하더라도 우리 같았으면 지금 한 푼도 못 받았을 것인데 최근 3년간 미국에서는 한 5조 8000억 정도를 환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이 뭐냐 하면 제삼자 양도제를 통해서 지급받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걸 매년 커지고 있고. 이 말은 검증된 제도라는 건데 이게 그렇게 크게 복잡한 게 아니잖아요.

KDI가 국내생산세액공제 예타보고서에서도, Zwick and Mahon 논문까지 인용을 했던 데 ‘조세 유인의 혜택이 현금흐름 개선으로 직접 연결할 때 효과가 강하게 나타난다’. 보셨습니까, 이 예타보고서?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아니요, 아직 못 봤습니다.

○**김태년 위원** ‘환급·양도 허용 시 납세액이 없거나 적은 기업의 현금흐름을 즉각적으로 개선하고’ 이런 보고서 내용도 있어요. 빨리 현금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줘라, 그런데 형평성 문제도 물론 지적을 해 놓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업은행에서 중소기업의 어음할인 제도 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김태년 위원** 중소기업 어음 받았는데 지금 당장 현금은 필요하고 그러면 중소기업이 일정하게 할인율을 적용해서 매입을 하고 시한 도래하면 그것 팔아서 기업은행은 수수료 수입을 획득하고 그렇게 되는 건데 이런 방식으로 거래시장 하나 만들어서, 세액공제 거래시장 하나 만들어서 운용하면 되지 않겠어요?

크게 복잡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국세청에 사전 등록하고 회계·세무 자문사에 실사하고 그리고 주관사를 통한 양수인을 확보하고 그리고 양도인이 대금 수령하고 국세청에 신고하고 이런 순서로 진행하면 될 것 같고. 이 운용사는 우리 국책은행이 하면 될 것 같아요,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이나.

그렇게 되면 정부는 추가 재정지출 없이 지정 산업의 유동성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고, 다이렉트 페이 안 해도 되잖아요. 매도 기업은 즉시 현금을 확보해서 당장 시급한

R&D 투자도 하고 설비 투자도 할 수가 있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 운영사를 국책은행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국책은행들은 중개·매입 역할을 해서 수수료 수입을 얻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효과가 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제삼자 양도가 결국에는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중개회사를 통해서 넘어가면 그분들은 바로 돈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을 중간에 갖게 된, 양도권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에는 국세청으로 와서 세금을 돌려받는 행위를 함으로써 이 결제 전체가 완결되는 구조라고 이해됩니다.

○김태년 위원 그렇지요. 거기에 가면……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그렇지요. 결국에는 다이렉트 페이가 있는 거랑 동일한 효과가 되는 겁니다.

○김태년 위원 아니지요. 다이렉트 페이하고는 다른 거지요, 시차가 있으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그렇지요. 그렇지만……

○김태년 위원 매도했던 해당 기업이 수익이 나서 공제를 해 줄 시점에 현금으로 환급을 받는 거라서 그건 다이렉트 페이하고 다른 거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이걸 양도했기 때문에 양도를 받은 사람이 이익이 나면 바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거라고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년 위원 아닙니다. 달라요. 그것 다시 살펴보시고.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김태년 위원 이 제도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제안 주셨으니까 당연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제삼자 양도나 다이렉트 페이 같은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세 형평 또는 재정 운용의 안정성 등 검토할 게 좀 많지 않나 생각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태년 위원 재정 운용의 안정성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요, 다이렉트 페이가 아닌데?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다이렉트 페이가 아니라도 언젠가는 누군가 그걸 받게 되는데 세수 예측을 할 때 대규모 세수감이, 올해 저희가 이때쯤 세수감이 될 걸로 예상했는데 경기가 안 좋을 때도……

○김태년 위원 아니, 언젠가는 환급을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영업이익이 났을 때는 환급을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연도별로 세수추계를……

○김태년 위원 그러면 양도기업이 이익이 날 때 환급을 받는 거니까 그것은 재정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승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기형 간사님 질의하겠습니다.

○오기형 위원 후보자님, 바로 질문하겠습니다.

미래대응기금 관련해서 이걸 재정 안정화 장치 아닌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규모 세수 할 때……

○오기형 위원 22년, 24년 초과세수 또는 세수결손액이 발생했을 때 호황기에는 초과세수가 추경으로 이어지고 해서 경기 과열이 될 수가 있고 돈이 너무 절제되지 않게 사용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걸 좀 미리 준비하자라는 것도 있고.

또 세수결손 당시에 보다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자원을 써야 되는데 국채를 발행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런 것들이 계속 너무…… 경기 변동성에 대한 재정 안정화 장치가 필요하다는 담론이 지금 수년 동안 쌓여 있었고 국회에서도 예정처 차원에서 논의를 했었고, 그리고 재정부 차원에서도 논의가 축적된 거 아닌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단일 회계연도상으로 끊어서 보는 상황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규모 초과세수가 생겼을 경우에는 현재 있는 시스템상에서 이것을 받아들이 버퍼가 없으면 전액 지출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액 국채 상환에 써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 두 가지 경우가 다 지출로 갔을 경우에는 나중에 줄일 수 없는 여건이 생길 수 있고, 국채 상환에 전부 다 썼을 때는 국채시장이 유동성을 일정 부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다 소멸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기금이 필요하다는 그 취지에 저희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오기형 위원 그래서 초과세수 관련된 것이나 또는 여러 가지 논쟁 속에서 지금 미래대응기금의 논의가 나오는데 이후에 실제 국회에서 얼마나 역할을 하고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느냐 이런 별개로 계속 논쟁을 해야 될 거고. 그러나 미래대응기금 자체가 우리 사회적으로는 필요한 논쟁이고 제도의 진화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챙겨 주셨으면 합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그러겠습니다.

○오기형 위원 부동산 공급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실제 서울 지역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공급이 워낙 중요한 의제고 나중에 임명이 되시면 또 실제로 이것 좀 챙겨 주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86주간 부동산이 계속 올랐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들어 보셨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오기형 위원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오세훈 시장이 말씀하신 건데 지금 그 86주의 서울시장이 오세훈 시장이었습니다. 사실적으로 여러 가지 현상들은 있는 것 같고, 문제는 지금 현재 이 상황 속에서 공급 부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인식을 같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그 전제하에서 공급 부족이 어디서부터 부족했고 앞으로 될 좀 챙겨야 되는가 이 말씀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22년부터 해서 실제 인허가 물량이 축소됐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24년부터는 착공도 축소된 게 나타나고 있고요. 22년, 23년, 24년 그때의 인허가·착공 부족이 지금 26년,

28년 사이에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아시다시피 22년도에는 부동산 PF 이슈도 있었지 않습니까, 레고랜드 사태도 있었고?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레고랜드 사태 이후로 굉장히 부동산 시장이 어려워졌습니다.

○오기형 위원 부동산 PF를 적시에 처리했느냐 이런 비판도 저희들이 국감 때 계속 했었습니다.

통상 서울시 같은 경우는 과거 10년 동안 한 6만 5000호 정도를, 평균 그 이상을 공급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올해 실제 공급 물량을 보니까 3만 호가 안 됩니다, 상반기에. 그래서 실제 이 목표치를 달성하기가 어렵다 그런 점들이 우려가 되고 또 공급을 위해서 서로가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민간에서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고 공공에서 공급하는 것도 중요한데 민간에서 공급하는 것 관련해서 신통기획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오세훈 시장께서 31만 호를 앞으로 5년 동안 공급하겠다고 이렇게 제안을 했었습니다. 충분히 공급할 수 있으면 그걸 또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민간에서 공급한다고 이야기했던 물량을 보더라도 실제 31만 호가 아니라 멸실되는 물량이 한 22만 2000호 됩니다. 그래서 실제 추가되는, 플러스가 되는 것은 약 8만 7000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통기획만 가지고 공급이 되는 건 아니고 신통기획에서 이야기하는 아파트 말고 비아파트나 또 다양한 청년주택을 공급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좀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저희가 이번에 주택공급 대책 할 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비아파트 쪽에 굉장히 역점을 많이 뒀습니다. 그래서 비아파트와 관련된 규제 완화, 주차장이나 여러 가지 기준을 계속 개선함으로써 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또 전문 임대법인을 양성해서 그분들이 신축해서 바로 임대로 갈 수 있고 분양을 전제로 하지 않고 장기간 임대를 함으로써 임대주택 재고가 쌓일 수 있는 이런 등등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책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오기형 위원 실제 31만 호 공급한다고 이야기했지만 이 부분이 단기적으로는 공급 물량 자체가 수천 호씩 전체 수요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고. 그리고 제가 보니까 30년, 31년 그 시점에는 공급 물량이 집중되어 있는데 그때는 또 멸실되는 물량이 십몇만 호가 돼 가지고 그 당시에 이분들이 어디로 이사 갈 것인가를 대책을 안 세워 놓으면 또 현실적으로 공급이 안 될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통기획에 대해서는 협력할 건 협력하되 이 외의 민간이나 공공에서 공급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된다, 그 점에서 중앙정부와 서울시 그리고 기초단체가 적극 협력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유념하겠습니다.

○오기형 위원 특히 공공택지와 관련돼서 서리풀공원 또는 3기 신도시 그리고 용산 주변 부지 또는 지금 현재 3년 안에 매입임대를 2만 호 정도 이상 공급한다고 그러는데 그럴 때마다 LH를 중심으로 한 어떤 자금 지원이 필요한데 그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재정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오기형 위원 앞으로 계속 이 지점에 대해서는 논쟁을 좀 하겠습니다.

세금 문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부동산 세제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세금으로 집값을 잡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오기형 위원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는 매우 일관되게 하는 메시지인 거고, 현 정부에서.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서,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세금을 쓰지 않는다는 건 일관된 원칙입니다.

○오기형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OECD 이야기하면서 이른바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자 이런 게 나오는데 양도소득세가 거래세입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소득세입니다, 원칙적으로.

○오기형 위원 소득세입니다. 그리고 거래세는 취득세·등록세 문제인 거지요. 취득세·등록세는 유연하게 볼 수 있지만 소득세는 공정과세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정과세 기준을 가지고, 시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공정과세 기준에 따라서 풀 문제인 것 같고 종부세에 있어서의 1가구 2주택에 대해서는 실제 실거주, 비거주 별 차이 없이 현실적으로 예측 가능성, 수용성 가지고 검토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그리고 종부세 자체를 그냥 바로 보유세하고 똑같이 볼 것인가에 좀 다른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보유세 성격이 있지만 재산세와 종부세 관계에서 장기적으로 제도 개편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위원님 말씀하신 보유세를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볼 것이냐 이 부분은 굉장히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효과도 있을 수 있고 또 반대로 이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종부세랑 재산세 사이에 인별 과세냐, 물건 과세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여건을 같이 검토해 나갔으면 하겠습니다.

○오기형 위원 이따가 후속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승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배준영 간사님 질의하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배준영 위원입니다.

미래대응기금 관련해서 재정안정화 플랫폼이라는 말이 있는데, 재정안정화 장치는 이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미리 좀 알려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지금 대통령과 정부 지지율이 날개 없이 직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33.8%까지 떨어졌는데, 제가 볼 때는 경제가 제일 큰 원인이라고 보는데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경제 분야에서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런데 지금 후보자님들한테 닉네임이 붙어서 따라다니는 거 혹시 아세

요?

제가 한번 불러 드릴게요.

‘비거주 이형일 재경’, ‘영끌 홍지선 국토’, ‘갭투자 이소영 중기’, ‘특혜 분양 강신철 국방’, ‘저가 전세 김성수 대법관’.

하나 더 불러 드리겠습니다.

‘매도자 근저당 이재명’, 이게 단순히 경제 문제가 아니고요 국민들한테는 정말 최악의 세제개편안으로 부동산이랄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으로 몰아넣으면서 본인들은 이렇게 다 내로남불식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런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영이 서겠습니까?

후보자님, 전세는 없어져야 할 사금융이라고 하는 대통령의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면 ‘아니요’라고 대답해 주세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전세시장이 구조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모습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배준영 위원 아니, 동의하세요? 없어져야 할 사금융이라고 하는 대통령의 생각에 동의하세요, 동의하지 않으세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이번에 주택공급 대책에서도 전세를 안심하고 신탁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을 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배준영 위원 과천에 집 사시기 전에 전세 사신 적 있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있습니다.

○배준영 위원 후보자님도 전세 살다가 돈 좀 모아 갖고 집 사실 때 결국에는 갭투자 하서 갖고 집 사시게 된 겁니다. 그런데 후보자님 자녀분들, 아들딸 있으시잖아요. 과천에 똑같은 집 사실 수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거기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서 갭투자가 안 되게 돼 있고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이 4억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후보자님은 예전에는 집을 사실 수 있었지만 지금은 집 사려고 하는 후보자님의 자녀들을 포함해서 절대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사다리 걷어차기가 아니고 뭔지 제가 좀 묻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아까 확실히 2개월, 2개월 사셨다고 그러셨잖아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맞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런데 입증할 수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셨지요? 전입신고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셨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제가 다른 데 살았다면 전입신고를 어떻게 거기다 하고 살 수 있었겠습니까?

○배준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입신고 외에는 증명하실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지요, 현재로서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좀……

○배준영 위원 없으신 것으로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거주하고 비거주 이것을 국민들한테 다 따지신다는데 앞으로는 전입신고 여부로만 따져 주실 겁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만약에 거주 여부를 판단할 때는 가장 기본되는 게 공적 자료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등록상에 있는 전입이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가 될 겁니다.

○배준영 위원 그러니까 전입신고로만 거주, 비거주를 판단해 주실 겁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전입신고로만’이라는 표현은 아니고요 전입신고를 기초로 하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아니, 후보자님은 전입신고 외에는 아무것도 증명할 게 없다고 그러는데 왜 앞으로 할 사람들에게는 이런저런 자료를 요구하시는 겁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 당연히 거주고요 전입신고가 안 돼 있더라도 본인이 어떤 상황을 증명할 수 있으면 그것도 거주로 볼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배준영 위원 그래서 내로남불입니다. 나는 증명 못 하는데……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아니, 반대로 말씀드린……

○배준영 위원 남들은 증명하시라는 거잖아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아닙니다. 전입은 증명이 된 거고요. 전입하지 않았을 때도 증명할 수……

○배준영 위원 증명 안 됐어요, 후보자님은.

잠깐만요, 이번에 세제 개편안 세제실에서 만들었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배준영 위원 그것 총지휘하신 분이 후보자님 아니세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맞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렇지요? 세제 개편에 대한 영향과 세수를 추계하도록 되어 있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배준영 위원 이번에 세제 개편안에 대한 늘어나는 세수가 얼마나 됩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전체 5년으로 봐서 3.4조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배준영 위원 또 틀리셨어요. 이번에 29일 만에 거주, 비거주에 대한 것을 9억에서 12억으로 다시 바꾸셨잖아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수정안을 냈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때도 3조 4000억이고 지금도 3조 4000억입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그게 5년간 보면, 1000억이 연차별로 달라질 수 있는데요……

○배준영 위원 그것 계산 안 하셨다는 겁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5년간 총액은 동일합니다.

○배준영 위원 아니, 그것 과세하는 기준과 금액이 달라졌는데 어떻게 세수 추계액이 같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거주, 비거주 관련해서 그 부분은 동일한 사항이고요.

○배준영 위원 자료를 내 주십시오. 저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다만 저희가 차이나는 것은 세부담 상한으로만 차이가 납니다.

○배준영 위원 저는 말씀만 하는 걸로는 이해가 안 가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정확

한 추계로.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그러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러면 대통령님도 집값 잡는 게 목표가 아니라고 했고 거주 중심으로 가신다고 하신 거지요, 이번에?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맞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러면 거주 중심으로 가면 어쨌든 보유세 압박하시고 집주인들이 들어 가면 세입자들이 나가게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나가는 세입자의 추세나 임대시장 공급이 어떻게 줄지 추산해 보신 적 있으세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부동산 관련해서 임대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준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얼마나 나갈지 추산해 보신 적 있으세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추산하기가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배준영 위원 못 하셨지요?

또 묻겠습니다. 그러면 집주인들이 세입자들한테 월세 등으로 전가해서 전월세가 오를 가능성에 대해서는 연구해 보셨을 텐데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전월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세제 개편으로 일의적으로 평가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것도 검토 안 하셨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아니, 검토하지 않은 게……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배준영 위원 어려우니까 검토 안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그냥 정책으로 밀어붙여 갖고 지금 전월세 시장이 오르고 전세가 품귀현상에 이르고 풍선효과 일어나고 이런 것을 전혀 예측도 못 하시고 추산도 안 한 다음에 진행하셨다는 거예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저희가 공급 대책과 같이 함께 병행해서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8월 13일 날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배준영 위원 잠깐만요, 제가 구윤철 부총리한테 얼마 전에 세제 개편에 관련해서 목표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거주 중심의 부동산 시장이라는 철학적 접근이라고 하셨습니다. 후보자님도 그런 철학적인 접근을 지금 하고 계시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국민들은 피가 마르는데 그런 주먹구구식 철학적 접근 하고 있습니까?

나중에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승래 예, 보충질의 시간이 있으시니까요.

이렇게 주질의는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보충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입니다.

먼저 박수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수영 위원 후보자님, 한 언론 보도를 제가 읽어 드릴게요. 어느 신문에서 나온 건지 좀 말씀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반도체 초호황, 없어서 못 판다…… 생산라인 증설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상태다’. 이게 어느 신문인지 혹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만 내용은 전체적으로 괜찮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이해가 되는 사항입니다.

○박수영 위원 그러면 그다음에는 정부 발표를 하나 보여 드릴게요. ‘경기 호황 국면이 지속됨에 따라서 조세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초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것 어느 발표인지는 몰라도 맞는 얘기는 맞지요? 그렇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현재 조세수입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박수영 위원 제가 언론보도 하나하고 정부 발표 하나를 보여 드렸는데 이게 언제 건지 보여 드리겠습니까.

우선 언론보도부터 한번 보시지요. 이 언론보도는 95년 8월 23일 동아일보입니다. IMF 사태가 나기 직전입니다. 반도체 초호황인데 95년에 언론이 어떻게 예측했느냐. 2000년대 초까지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반도체 호황이 계속될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무려 5년이 될 거라고 판단했지요.

그다음에 정부 발표 한번 볼까요. 이것 95년 10월 12일 재정경제원 발표입니다. 호황이 지속돼서 세입이 많아지고 그래서 추경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재정경제원 발표일인 95년 10월 12일부터 정확히 1년 3개월 뒤에 97년 1월에 한보의 부도 사태가 나고 97년에 우리 IMF 외환위기로 점철되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즉 1년 3개월 전에도 재정경제원이 이렇게 희망적으로 예측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후보자님과 재경부, 기획예산처가 예상하고 있는 것이 저는 이때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반도체는 사이클되는 산업입니다.

뒤에 한번 보시면 그다음 장 한번 보시면, 반도체 D램 가격, 메가 D램 가격들이 이렇게 95년 이후부터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64메가 D램이 97년에 가서 떨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95년, 96년에는 반도체 호황이 계속될 거라고 보고 정부가 판단을 한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떨어져서, 갑자기 반도체가 급락해서 세입이 안 들어오고 엉망진창이 된 게 외환위기 아닙니까?

다음 장 한번 보시지요.

반도체 사이클이 정부에서는 3년 내지 5년 간다고 하는데 지금 계속 한 2년, 3년 만에, 빨간 것은 반도체 사이클이 좋았을 때인데 그 나머지는 쭉쭉 빠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HBM발 호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이걸 3년, 5년 갈 거라고 예상하고 정부 정책을 전개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당시에 재정경제원의 차관을 했던 강만수 차관이 98년 1월, IMF 1년 뒤지요, 한 말 한번 봅시다. 반도체 특수에 허상에 눈이 멀었다, 반도체 특수에 따른 착시현상이 일어난 93년도부터 사실상 외환위기가 시작됐는데 정부가 판단하지 못했다고 통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후보자님 지금 우리 경제 전체를 책임지고 가는데 이런 후회, 통탄하지 않도록 경제 현실을 제대로 봐 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기획예산처 중심의 예산 편성과 미래대응 기금 편성이라는 게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지 않고 너무 그때와 똑같이 허상을 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 96년하고 지금 2026년하고 비교를 해 보면 당시에 우리 잡 재정성장률도 8%였어요. 지금 1.7, 1.8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국가채무 D1, 제일 작은 규모로도 37조 원, 지금 1413조 원입니다. 더더욱 중요한 건 뭐냐. GDP 대비 비중을 따지면 당시는 8%밖에 안 됐어요, D1이. 지금 51.6% 아닙니까? 내년엔 GDP가 올라가서 48.3%로 떨어질 걸로 예상하지만 GDP는 언제든지 줄어들 수 있는 겁니다, HBM 안 팔리게 되면. 그러면 국가부채는 더 올려왔고 GDP는 떨어지고 분자는 작아지고 분모는 그대로 커져 있으면 이 비율은 금방 50%, 51%, 60%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현상을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실까요?

블랙스완입니다. IMF 외환위기 누가 예상했습니까? 네팔에 빙하 무너지는 것 누가 예상했습니까? 9·11 테러 누가 예상했습니까? 코로나, 전 세계 경제가 무너지는 것 예상했습니까? 이런 예상하지 못한 블랙스완이 등장했을 때 정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무기가 재정안정성입니다. 건전재정 흔들어 뜨리고 부채 막 내고 이렇게 다 내 가지고 위기가 닥치면 어떻게 정부가 대응할 수 있겠냐고요. 기획예산처 정치인 장관이라서 아무리 늘리려 하더라도 관료 출신인 후보자는 막아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추가질문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승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상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안상훈 위원 오늘 후보자님 신념, 지속가능 성장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주로 챙겨야 될 대상은 청년일 것이다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계속 의견 그대로시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맞습니다.

○안상훈 위원 부총리께서는 단기적인 국채 관리만 하시면 됩니까, 아니면 장기적인 문제도 신경 써야 됩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당연히 장기적인 것도 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상훈 위원 지금 현재 정부가 국채비율이 기존 전망보다 줄어들 것이라 홍보하고 계시고, 한데 이게 실제로는 이재명 정부가 잘해서가 아니고 언제 꺼질지 모르는 반도체 호황 때문에 우리 GDP 분모가 늘어나 가지고 보이는 착시현상이라고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GDP가 는 것 자체도 또 실체가 있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우리 경제성장률이 올라간 건데 앞서 박수영 위원님 말씀과 같이, 안 위원님 말씀도 똑같이 이것에 너무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거나 항상 긴장하고 위기를 미리 예지하고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상훈 위원 국채 불어난 만큼 이자도 증가하고 또 우리나라는 지금 복지국가를 한창 만들어 가면서 필요한 국민 부담은 우리 정치인들이 무책임하게 부과를 하지 않고 있어요. 다른 나라들 GDP 대비 10% 복지, 20% 복지 할 때 국민 부담, 조세 부담하고 보험료 부담 보면 우리보다 더블이 훨씬 넘습니다. 지금 우리 정치 실패 현상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아까 여당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재정 당국에서 챙겨야 될 부분이 굉장히

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보이시지만, 우리나라 국채 수준이 지금도 많지만 또 이 많은 게 언제 늘렸는지 보면 문재인 정부 때 310조 갑자기 늘렸고 이번 정부도 또 역대급으로 늘리고 있어요.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국도 아닌데 저것 감당 가능합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계속적인 재정건전성 노력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상훈 위원 지금 하고 계세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이번에도 국채를 순상환하고……

○안상훈 위원 아니, 한국은행은 금리 올리고 물가 때문에 그러는데 정부는 지금 돈 있는 대로 더 쓰고 계시잖아요, 국채도 지금 최대로 발행을 하고.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국채는 순상환 규모를 줄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들어온 돈을 다 쓰지 않고 미래대응기금에 놔둔 것 자체도 좀 더 미래를 멀리 보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성장 능력을 확충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상훈 위원 해석의 문제인데 그런 해석에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우리가 D1·D2·D3·D4 이렇게 나눠서 보면 정부는 주로 앞의 한 D1·D2 가지고만 얘기하고 싶겠지만 지난번에 통과된 국민연금법 개정 때문에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우리 정부가 지급보장 의무를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D4까지 챙겨야 되거든요. 이거 어마어마해요. 지금 국민연금 미적립 부채만도 1820조 원입니다.

제가 작년 국감 때 정부 장기재정전망 기초자료 가지고 분석을 해 봤습니다. 작년으로 부터 40년 후에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근로자들이 세금 빼고 건보료하고 국민연금 보험료 얼마 내야 되는지 아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제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상훈 위원 72%입니다. 세금까지 하면 번 돈 다 내야 돼요. 이게 지금 우리 세대가 국가재정 관리 제대로 안 하고 국채 관리 안 하고 연금부채 관리 안 해서 미래세대에 떠넘기고 있는 어마어마한 빚폭탄이거든요.

아까 부총리후보자께서 얘기하셨던 장기적인 성장 또 청년·미래세대를 챙겨야 된다, 이것 지금 챙기는 것으로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이번에 재정에서 또는 다른 기업 규제 완화 이런 것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 나가는 노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상훈 위원 세간에는 민주당 정부 들어서면, 문재인 정부하고 지금 이 정부 공통점이 집값 폭등하고 국채 팍팍 쓰고 연금개혁 안 하는 3대 공통점이 있다고 청년들 게시판에 유행하거든요. 만약에 부총리, 장관 통과되면, 임명되면 이 문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복지부에만 맡겨 놔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신경 써서 챙길 용의가 있으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말씀하신 대로 국회 안에 연금특위도 있고 저희 쪽에서도 재경부랑 복지부랑 공동으로 하는 연금 관련한 TF가 있습니다. 거기서 정확하게 좀 더 챙기고 말씀을……

○안상훈 위원 그 TF 회의 한 번밖에 안 했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수익률 올랐다고 대통령께서 이제 연금 걱정 없다 그러시는데 수익률 감안해도 최소 18년 핑크예요, 70년 기준.

대통령부터 제대로 이 문제 인식하게 하고. 그리고 경제부총리입니다. 좀 챙겨 주십시오. 복지부도 연금 문제, 보험료 문제에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경제 주체, 경제부처라고 보이거든요. 통할해 주십시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년부터 6차 재정계산이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위원님 말씀을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승래 안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영석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윤영석 위원 후보자님께서 그동안에 공직생활을 쫓 하면서 답변이나 이런 것을 보면 재정준칙, 그러니까 재정안정화 이런 부분을 상당히 강조를 해 왔는데 재정준칙 도입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합니까, 법제화에 대해서?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재정건전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만 현시점에서 봤을 때 고려할 요인이 많이 있고 또 현재는 좀 더 적극적 재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석 위원 조금 소신 있게, 만약에 임명이 된다면 재직 중에 뭐 하나라도 뭔가 성과를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소신 있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저는 성장동력을 찾는 데 더 성과를 내고 싶습니다.

○윤영석 위원 성장동력, 그러니까 지금 재정준칙 도입하는 것 찬성입니까, 아니면 반대입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높여 가자 그 부분에는 동의하는 사항입니다.

○윤영석 위원 소신 있는 답변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재정준칙을 도입해서 재정안정화를 하자는 쪽인지 아니면 재정을 막 풀어서 뭔가 성장을 도모하자는 그런 주장인지 지금 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소신 있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재정준칙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으로 답변을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성장을 통해서 재정으로 선순환되는 게 더 의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영석 위원 말장난이지요.

그래서 존경하는 안상훈 위원님도 방금 지적을 하셨지만 국가채무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 현재도 내년 기준으로 얼마 정도 예산을 하고 있습니까, 국가채무?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국가채무비율이 한 50%대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석 위원 금년도에 추가세수가 지금 한 104조 원 정도, 106조 원인가요? 지금 추가세수가 얼마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내년 것을 말씀하시는……

○윤영석 위원 금년.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금년 것은 지금 현재 지난번 추경 때 41.5조를 올……

○윤영석 위원 내년도에는 얼마 예산을 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조금 더 재추계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160조 이상의……

○윤영석 위원 그러면 이제 빚을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그래서 국채를 순상환 규모는 있습니다. 순상환을 했고요. 12.5조 정도를 순상환했습니다. 할 계획입니다.

○윤영석 위원 들어오는 돈에, 그러니까 초과세수의 10% 미만을 채무 상환에 쓰겠다 이 이야기인데 지금 보니까 한 12.5조 원 정도 빚 상환에 쓰겠다는 건데 빚을 좀 갚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국채시장 입장에서 보면 현재 한 220조 수준으로 몇 년간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너무 많이 갚았을 경우에 국채시장의 영향 그런 것도 같이 감안해서 보되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적 판단 사항의 여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영석 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추가세수의 한 104조 원 정도를 미래대응기금으로 신설해서 여기에 지금 적립을 하겠다 이런 말씀 같은데, 미래대응기금의 목적이 한마디로 하면 뭐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미래를 대응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성장동력을 높일 수 있는 투자를 하자는 게 있고요. 또 나중에 혹시 결손이 났을 때 다시 되돌릴 수 있는 재정안정화 기능이 있고 그런 것을 같이 갖고 있는 기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영석 위원 빚을 안 갚으면 결국은 많은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만 해도 지금 연 40조 원이 넘을 텐데, 그렇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윤영석 위원 그런 상황에서 이 기금에 대한 어떤 수익률이 제대로 안 나오면 결국은 또 빚이 빚을 낳는 그런 악순환이 지금 계속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좀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거를 이렇게 미래대응기금으로 한다는 것이 재정경제부 내에서도 지금 보기에, 계시판에 보면 ‘미래대응기금이 아니고 미래소멸기금이 아니냐’ 하는 그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좀 잘못된 방향 아닙니까, 이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대규모 세수가 들어왔을 때는 단년도 회계연도를 뛰어넘는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영석 위원 그래서 지금 OECD나 IMF나 이런 곳에서도 호황이 되면, 세금이 많이 들어오면 채무를 갚는 게 우선이다 하는 그런 권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도 불구하고 미래대응기금이라고 하는 그런 명목으로 이렇게 뭔가 방만하게 운영을 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적인 수단 같은데 이게 과연 제대로 될지 상당히 걱정인데 여하튼 좀 채무를 상환하는 쪽으로, 상환하는 쪽으로 심각하게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더 논의하고 토론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승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춘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춘석 위원 후보자님.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이춘석 위원 1차관으로 근무하셔서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참석해서 위원들의 질의사항을 다 듣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이춘석 위원 뒤에 앉아 계시긴 하지만, 직접 대답은 않지만.

후보자님 생각에 본 위원은 어떤 내용에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가장 많이 하는 걸로 기억하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

○이춘석 위원 잘 기억이 안 나세요?

후보자님께서 차관 시절에 기고한 칼럼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PPT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2025년 6월 21일 서울경제에 기고한 내용입니다. ‘지역부활의 출발점’이라는 기고문인데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지역산업 구조의 변화, 경기침체의 징후 등이 보다 빨리 포착되면 그에 맞는 맞춤형 정책 대응이 가능하다. 분기별 GRDP 발표가 지방소멸이 아닌 지역부활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집중할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의 마음을 아주 흡족하게 하는 내용이었습시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재정경제부가, 후보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이 GRDP 통계를 정책에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서면질의를 보냈어요. 그런데 답변이 이렇게 왔습시다. ‘부총리로 취임하게 되면 통계청장 재임 시절 GRDP 작성 주기를 단축했던 경험을 살려 보다 충분하고 시의적절한 지역경제 통계 풀을 구축할 수 있도록 통계청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차관 시절에 칼럼에서 쓰신 내용은 지역부활을 굉장히 강조하시면서 그런 자료들을 다 활용하겠다고 하셨는데 이제 부총리가 되면 GRDP 통계 풀을 구축할 수 있다 하는 취지로 본 위원이 느낄 때는 한 발짝도 아니고 적어도 한 세 발짝 정도는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닌지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시다.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후보님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제가 이 GRDP를 통계청장 때—지금은 데이터 채입니다만—청장 시절에 역점적으로 이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제가 차관으로 오고 나서 발표가 됐습시다.

이 당시에 GRDP를 제가 추진했던 이유는 분기별 GRDP가 없었고 연간 GRDP만 있었

고요. 그리고 시차가 1년 이상 걸리는 굉장히 느린 통계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나라 국가 GDP는 한 달 만에 나옵니다. 그럼으로써 그 GDP를 보고 우리 경제가 어디로 잘못 가고 있는지, 어디로 잘 가고 있는지 평가하고 분석해서 다음 대책을 만들 수 있는데 지역 GDP는 1년 뒤에 그것도 연간 한 번만 나오니 이게 실제 지자체에서 이 데이터를 갖고 어떤 지방을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알 수가 없는 차원에서 필요한 데이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기별로 한 석 달 만에 내자라고 한 이유는 지방정부에서 이걸 갖고 좀 더, 어디가 해당 지역의 소비가 부진한지 투자가 부진한지 찾아가서 대응하자 이런 취지로 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분기별로 나오고 있으니 지방정부에서 이것을 잘 활용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제가 여기서 좀 더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은 GRDP 내용 등을 보면 GDP도 그렇지만 생산 측면이 있고 지출 파트가 있습니다.

○이춘석 위원 시간이 제한돼 있으니 제가 질의를 마저 하고 마지막에 뒷부분은 보충질의를 하십시오.

저는 재정경제부가 균형발전이라는 말을 하지만 실제로 진짜 지역에 대한 균형발전의 실현 의지가 있는지 하는 여러 가지 의문이 듭니다.

그중 한 가지만 보면, 5년간 지역균형발전 관련 조세지출 현황을 보면 조세지출은 33.5%가 증가했지만 균형발전기금은 오히려 57.7%가 감소했고 전체 조세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3%에서 1.7% 하락했어요. 또한 재정경제부에서 균형발전정책을 총괄하는 지역경제과가 있는데 이 인력도 정원이 7명에서 기획예산처가 분리된 이후에는 3명으로 줄어들었어요.

후보자님도 수도권 집중은 국가 전체의 성장동력을 저하시키고 있다라는 서면답변을 하였고 국가의 균형발전은 지역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생존을 결정하는 당면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정경제부 차원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역균형발전 관련 조세 제도를 어떻게 대대적으로 개편할 것인지 또 세제개편 과정에서 균형발전 부서와의 사전협의를 어떻게 의무화할 것인지 그리고 균형발전 조직 부활 등이 시급하다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후보자가 장관이 되신다고 하면 이 세 가지 사안을 검토해서 개선 방향을 국정감사 전까지 본 의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못 하신 말씀을 포함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GRDP 통계를, 생산 측면과 지출 측면인데 지금은 생산 측면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출 측면까지 같이 보완해야만 지방정부에서 제대로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통계를 더 강화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아마 답변을 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재정부 차원에서 지방정부의 발전을 위해서 세제지원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세제개편안 낼 때

예를 들어서 투자세액공제라든지 R&D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입하는 생산세액 공제도 마찬가지로 지방을 더 우대하는 시스템으로 시스템을 바꿔 갔습니다.

그래서 지방을 권역별로 나눈 다음에 수도권을 1배를 주는 거라면 제일 우대를 많이 해야 될 권역에는 1.5배까지 동일한 세제지원에 더 많이 주는 것을 추가를 했고요. 만약에 지방 이전할 때 근로자가 내려가야 되는데 그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방 이전에 대한 수당을 주게 되면 그 수당에 대해서는 월 50만 원, 연간 600만 원까지 비과세하도록 이번에 같이 넣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지방에 대한 배려를 세제상에서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국회에서 위원님하고 이런 부분을 좀 더 토론하고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승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순서가 이렇게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도걸 위원님, 정성호 위원님, 이종욱 위원님 이렇게 질의 순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도걸 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승래 다음에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정성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성호 위원 정성호 위원입니다.

후보자, 농사짓다가 대풍이 났어요. 아주 풍년 들었습니다. 수확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풍 나고 나면 뭘 해야 됩니까, 그다음에?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다음 한 해를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성호 위원 맞습니다, 그게. 풍년 나면 또 흉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지금 어쨌든 반도체 특수 때문에 세수가 굉장히 늘고 있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맞습니다.

○정성호 위원 그런 반도체 특수라는 게 결국 수출이 잘 돼 갖고서 잘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어떻게 쓸 것이냐 이런 고민하에서 지금 미래대응기금도 나온 거 아니겠어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정성호 위원 저는 세수 증가분을 갖다가 미래대응기금, 그 취지 분명히 동의합니다. 거기에 적립해 갖고 잘 활용해야 된다는 데 또 대비해야 된다는 데 동의하는데 방향은 맞지만 잘 써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5년 단임제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국회의원선거도 있고 또 지방선거도 있고 그다음에 단임제니까 다음 대선 한 1년 전부터는 차기 권력으로 권력이 쏠리다 보면 정책 일관성을 지키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나라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돈을 제대로 정말 어디에다 어떻게 쓸 것인지 깊은 고민이 있어야 돼요.

야당 위원들이 여러 지적들을 하시는데 그냥 다 말은 뭐 성장, 성장 얘기하지만 다른 일반회계라든가 다른 기금으로 쓸 수 있는 사업까지 다 집어넣어 가지고 그냥 막 푼돈 빼다 쓰듯이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이것은. 그렇게 되면 나라의 미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을 잘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미래대응기금의 취지에 대해서 제가 동의드린다고 말씀드렸고요. 다만 구체적인 내용, 사업을 볼 때 현재로 보면 메가프로젝트나 미래성장엔진, 청년 이런 쪽에 여기서 지출하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사업별 내용은 결국 국회심의 과정에서 좀 더 토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성호 위원 이것은 국회에서 당연히 심의하겠지만 어떻게 할지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정성호 위원 그래서 그게 국가균형발전이라든가 또 지방 중심의 성장에 맞게 또 미래세대인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그렇게 써야 되거든요, 사실은?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공감하는 바입니다.

○정성호 위원 그런 면에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들 좀 하셔야 됩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알겠습니다.

○정성호 위원 그다음에 명절 때만 되면 물가안정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정성호 위원 물가안정 이야기인데 지금 물가가 어때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지금 이번 추석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추석민생대책을 발표했고요. 그리고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 보완대책까지 해서 집행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석 되기 약 1, 2주 남았기 때문에 한창 자금이 집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성호 위원 그런데 역시 지금 아무리 경기가 좋고 세수가 늘었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결국 물가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물가가 모든 민생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성호 위원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런데 매년 명절 때만 되면 성수품 공급 확대하겠다, 할인 지원하겠다, 소상공인·중소기업 여러 가지 금융 지원하겠다, 다 똑같은 거 같아요. 그리고 유통망 개선하겠다고 하는데, 특히 유통과정 개선한다는 이야기는 매년 나옵니다, 유통구조 개선은.

제가 보기에는 제가 정치 하면서부터 이 얘기가 안 나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작년에 도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9월에 발표한 것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맞습니다.

○정성호 위원 그래서 2030년까지 유통비용 절감하고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도 거의 사실은 제가 기재위에 와서 얘기할 때마다 안 들은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구체적인 성과들이 있어야지,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다 이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온라인 도매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온라인 도매시장을 조금씩 점유율이랄까 매출액을 늘려나가고 있는데 위원님 보시기에 아직 좀 불충분하다 이런 면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더 협의를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추석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모든 국민들이 성수품을 구하기 때문에 성수품

의 공급을 늘리고 할인을 한다는 이런 기본 틀은 해마다 결국에 바꾸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측면을 이해해 주십시오.

○정성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추석 때뿐만 아니라 유통구조 개선은 사실 일상적인 국가 관리에 낀, 필수적인 민생물가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유통비율만 봐도 10년째 계속 늘고 있거든요, 유통비용률 같은 게. 소매단계 비용률도 계속 조금씩 늘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 구체적으로 유통비용 등에 관련해 갖고 연도별 목표치를 설정하고 또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점검하고 제대로 해야지, 매년 명절 때만 되면 유통구조 개선하겠다 이것 언제까지 반복할 거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말씀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정성호 위원 근본적인 유통구조 개선에 대해서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유통구조 개선에 더해서 결국에 농업이 첨단 스마트농업이 되면 생산원가를 떨어트릴 수 있다 그래서 농업의 경쟁력 강화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기후위기가 옴에 따라서 작물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같이 감안해서 농업의 전반적인 발전도 같이 보겠습니다.

○정성호 위원 좋은 말씀인데 정말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피부에 느끼게 체감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승래 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의 이종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후보자님, 결국 반도체 초과세수가 예기치 않게 너무 많이 들어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이종욱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대표적으로 TSMC 있는 대만도 있지요?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이종욱 위원 비슷한 상황인데 대만은 빚부터 갚았어요, 우리나라는 막 쓰고 있고.

(영상자료를 보며)

거기 지금 한번 보십시오.

10년 전에만 해도 국가채무비율이 중앙정부 기준으로 30% 비슷했어요. 그런데 지금 대만은 20%대이고 우리는 50%대입니다. 이게 정부가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국가채무가 10년 사이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에 106조 원의 국가채무가 늘면서 여유재원 104조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그 104조에 대해서는 이거를 다 지출로 쓰기에는 너무 탄력적 조정이 어렵고, 그렇다고 이거를 국채를 다 상환하는 데 쓰기에는 국채시장이 일정한 유동성이나 사이즈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이종욱 위원 그 말씀 좀 하시지요.

국채시장의 상황을 아까 220조 정도 수준이라고 하셨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한 이삼 년간 220조 정도의 국채 발행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종욱 위원 그 국채 발행규모를 우리가 왜 지켜줘야 되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아니, 그걸 지켜줄 필요는 없는데요 시장에서 그런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종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채시장 때문에 빚을 못 갚는다는 주장이세요, 국채시장이 흔들리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만약에 여기서 100조를 꺼 버리면 국채시장의 유동성이 갑자기 없어지는 그것도 또 다른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종욱 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까지 갚으면 국채시장에 문제가 없지요? 그런 생각 해 보셨어요? 갚으려는 생각은 해 보셨냐고요. 국채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 국채시장에 영향이 없는 정도로 몇 십 조 정도까지는 갚을 수 있나요? 그런 생각 해 보셨어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그건 정책 판단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보고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욱 위원 판단사항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판단이 지금 빚 갚을 생각은 전혀 없다는 반증이에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저희가 12.5조를 갚았습니다. 갚을 계획입니다.

○이종욱 위원 12.5조는 갚는 시늉만 했지요. 그리고 총발행규모는 똑같아요, 12.2조 갚았지만. 220조 수준으로 똑같다니까요.

제가 한말씀드릴게요.

이게 국채 발행규모가 늘어난 게 최근에 늘렸어요, 이재명 정부에서. 이재명 정부 들어서기 전에만 해도 얼마였나? 2024년에 150조대였어요. 70조를 늘려 놓고 이제는 못 줄인다고요? 2019년에 100조대였어요. 220조가 100조로 갈 수 있다니까요. 그걸 국채시장 핑계 대면서, 국채시장이 흔들리면 대한민국이 흔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리고 국채 발행규모를 줄이면 국가적으로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 자금이 어디로 갑니까? 회사채로 가잖아요. 회사채, 공사채 금리 높은 거 좀 풀어 주면 금리도 낮춰 주고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국가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그 발행량이 는 건 25년부터 늘었습니다. 25년에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종욱 위원 그러니까 2024년에서 2025년에 얼마가 늘었냐? 한 70조 늘었거든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그건 24년에 결정된 내용이 25년에 반영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종욱 위원 어쨌든요 70조 늘었잖아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이종욱 위원 느는 거는 느는데 왜 주는 거는 못 줄어요? 70조 한 방에 못 줄인다고요? 한 방에 늘리는 건 괜찮고?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우리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사이즈도 점점 늘

어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거 늘리면서 그때 국채가 전부 공사채, 회사채 수요를 다 빨아들인다고 부담이 된다고 했지요. 그렇지요? 그게 있었고 그런데 이제 반대로는 못 간다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이고, 유일한 핑계가 국채시장 핑계 대는데 그게 핑계가 안 된다, 저는 그거 지적하고 싶고. 근본적으로 빚을 갚을 생각이 없다, 이 돈을 들고 있고 싶다, 저는 그렇게밖에 해석 안 됩니다.

아까 탄력적인 운용을 한다고요? 탄력적 운용할 게 뭐 있어요? 탄력적인 운용이 말을 뒤집으면 똑같은 말이 씌웁니까요.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제가 지출과 관련해서 늘리고 나면 그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출로 쓰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이종욱 위원** 그리고 저는 만약에 국채시장 때문에 일부 한 50조 정도는 들고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미래대응기금보다는 국부펀드가 나은 것 같아요, 원금 보전하면서 이자 가지고 일정한 투자를 하는 거. 그런데 재경부가 그 주장을 하고 있다가 언제 순간에 기재부가 예산처에 졌어요? 재정전략회의에서 결정 났다고 하는데 왜 결정이 났습니까? 왜 재경부는 본인 의사를 접었어요? 어떤 장점이 있어서 접었습니까, 미래대응기금이?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국부펀드 출자 규모는 기획예산 협의하면서 결정된 건 맞습니다. 다만 초기에 저희가 안정적인 출발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종욱 위원** 아니요, 제 질문은 그게 아니고 제가 합리적으로 봐서는 국부펀드가 장점이 훨씬 많다고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국부펀드에 출연할 때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저희가 일정 부분을 받았지만 현재 저희가 현물출자를 통해서 들어오는 배당금이라든지……

○**이종욱 위원** 지금은 조금밖에 안 받았지요. 그렇지요? 초과세수는 5000억인가 1조 5000억 맞지요, 그렇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5000억 받았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조금만 저거 한 거고……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제가 말씀드린 거는 첫해에 출발을 해야 되니 이거와 관련된 수요나 상황, 여러 가지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는 말씀을 같이 감안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종욱 위원** 나중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승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후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오전에 질의할 때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서 ‘재경부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그게 금융위에서 상품을 인가하는 문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저도 쪽 관료 생활을 해 봤지만 저희가 그동안 금융위원회에다가 의견을 주로 낸 것은 개별 상품의 인가보다는 제도의 변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쪽 내 왔다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확인했을 때도 의견을 별도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런데 이제 취임하시면, 앞으로라도 위험성이 있는 새로운 상품들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경제부총리로서 실제 책임감을 가져야 되잖아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앞으로 상품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더 책임감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리고 작년의 지금쯤에는 우리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상호관세를 가지고 많은 것에 우리가 긴장감을 가지고 협상을 했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그런 기억이 납니다.

○윤후덕 위원 그때도 많이 노력하셨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기억납니다.

○윤후덕 위원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3500불을, 우리가 우리 돈을 가지고 미국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사실상 강요를 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중에 2000억 불하고, 1500억 불은 조선산업에 대해서 투자하고……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조선협력투자입니다.

○윤후덕 위원 2000억 불에 대해서 내일모레 글피 18일 날 한국의 대미투자에 대해서 트럼프가 미국에서 발표한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맞아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계속 협의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현재 여기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나중에 협의가 끝나고 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답변을 안 해 주는 것은 맞다는 얘기지요.

18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발표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맞춰서 역순해 가지고 우리 국회에서도 부처에서 보고도 하고 그러고 있는 중이에요, 사실은. 그러면서 드러나고 그랬던, 대미투자 사업이 하나 둘 셋 정도는 드러났지요. 텍사스의 가스 사업하는 것하고 원전 8기를 사업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알래스카 LNG 사업하는 것 정도는 언론에 좀 나왔어요.

그런데 텍사스 현지의 주민들이 데이터센터에 대해서는 농민들도 요즘은 그거 민심이 그거 좋아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미국 현장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미국 정부로서도 신중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얘기는 좀 들었어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들은 바 없습니다.

○윤후덕 위원 인사청문회 준비하시느라고 그런 보고는 못 받았나 보네요.

실제 현실적인 얘기에요. 그래서 오늘내일 사이에도 변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 대미투자는 이게 핵물질을 가지고 사후에 재조정하는 것, 핵 처리하는 거지요. 그것에 대해서도 한 4000t 정도 처리하는 사업을 미국 측에서 요구하는 것 같다

고 그래요. 그것도 확인해 줄 수 없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한미 간의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언급하기 어렵다는 말씀 드립니다.

○윤후덕 위원 논의는 하고 있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윤후덕 위원 그리고 다섯 번째 사업이 탄소 포집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게 몇 달 전 서부터, 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것도 좀 거론이 되고 있어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은 아까 전이랑 동일한 취지로 협의가 진행 중인 사항이고 또 양국 간에 보안을 전제로 협의 중입니다.

○윤후덕 위원 그렇게 이해하고 내가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런데 두 가지 문제만 지적할게요. 이렇게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의 사업이 규모도 크고 우리가 미국하고 협약한 금액이 2000억 불인데 2000억 불을 훨씬 오버하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가늠하고 조정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년 전에도 트럼프 측하고 우리가 상호관세 그리고 투자하는 규모에 대해서 협상을 하면서 우리가 일본하고 견주어 봤을 때 어느 정도 일본의 성과가, 앞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런 정도로 우리가 유리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했었어요. 투자를 실제 하는 이 시점에서 일본이 투자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이제 하려는 것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본보다 우리가 유리하게 진행했는지에 대해서 좀 평가해 주세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2000억 불 한도, 대미투자 2000억 불 한도는 저희들이 지키려고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협의를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일본과의 비교 이런 것은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다 연계된 사항이라서 별도로 보고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러면 취임하시고 그때 제대로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국회에 아마 자리가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조승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도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안도걸 위원 부총리후보자님,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 논란이 좀 많이 있네요. 그런데 미래대응기금의 기본적인 취지가 저거지요, 세수 변동성. 그렇지요? 이것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안도걸 위원 윤석열 정부 때 얼마의 세수결손이 생겼지요, 지난 3년간?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한 해 50조, 어떤 해는 50조까지도……

○안도걸 위원 그렇지요. 그래 가지고 합치면 100조 정도 되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는 어땠습니까? 거꾸로 131조의 초과세수가 생겼어요. 5년 동안 132조

인테 내년 한 해 162조의 추가 세수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게 아주 비정상적인 상황이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외적인 사항이라 이거지요. 예외적 상황에서 만들어진 추가 세수 우리가 잘 적립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또 있을 수밖에 없는 세수결손에 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도걸 위원 만약에 그때 세수결손이 생긴다, 그런데 이번에 다 빚을 갚아 버린다고 하면 그때 다시 빚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그런 상황이 됩니다.

○안도걸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렇게 특이한 상황에서 생긴 세수를 우리가 잘 적립을 해서 갈수기 때 우리가 쓰겠다라는 그런 취지인 거지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저거예요. 일부는 빚을 갚는 데도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빚을 얼마나 줄입니까, 적자국채?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12.5조 순발행을 줄입니다.

○안도걸 위원 그렇습니다. 12조 정도 줄이는 거잖아요. 중요한 것은 12조를 줄여서 우리가 재정을 건전하게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안도걸 위원 내년에 재정건전성 지표가 어떻게 돼 있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관리재정수지가 -0.1%……

○안도걸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통상 재정수지, 선진국에서도 마찬가지로 합니다는 재정적자를 GDP -3% 범위로 잡자는 것 아니겠어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안도걸 위원 우리 지난해까지 못 잡았잖아요. 그렇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안도걸 위원 그런데 이번에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0%예요. 이것은 균형이지요. 사실상 균형이지요. 그러니까 20년 만에 균형을 달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면 재정건전성을 맞춘 것 아니에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재정건전성이 개선됐습니다, 확실하게.

○안도걸 위원 그렇지요. 개선된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해 가지고 됐고.

또 국채비율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국채비율 아니겠습니까? 국채비율은 얼마나 낮아 집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국가채무비율이 올해가 50.6%였는데 내년에는 48.3%로 떨어집니다.

○안도걸 위원 48.3%로 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여하튼 재정과 성장에 선순환을 만들어서 재정건전성도 어느 나라에 비해서도 우리가 확실하게 개선되는 모습을 갖췄다. 그리고 거기에서 여유자금은 묻어 뒀다가 갈수기 때 쓴다, 이게 맞는 현명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그리고 또 일부는 미래를 위한 지출로 쓰고 있습니다.

○안도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소신을 가지고 답변을 더 해 주시

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조금 여쭙겠습니다.

이번 취지가 무엇입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부동산 세제개편은 첫 번째로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을 정착시키자는 거랑 공정과세, 공평과세를 하자 그리고 지속가능한 세제를 만들자 이 세 가지 목표를 갖고 만들었습니다.

○안도걸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달성해야 될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권 초기 때문에 세제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이번에 개편을 개혁 차원에서 한 것 아니겠어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맞습니다.

○안도걸 위원 다만 그게 시장에서 수용되는 것은 조금 별개의 문제겠습니다마는 여하튼 이러한 취지를 가지고 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달성해야 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번 세제개편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이러한 개편 취지가 국민들과 시장에 충분히 전달되고 또 올바르게 이해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아마 저희가 좀 더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안도걸 위원 저는 그런 부분에서 많이 준비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제를 전면적으로 고치는 데만 중점을 두었지 그것을 국민들한테 설득시키고 또 국민들이 가질 수 있는 우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답해야 될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준비가 소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 프레임에 갇혀 버린 상황이 되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더더욱이나 이번에 종부세하고 양도세 개편은 과세대상, 과표, 각종 부과기준을 전면적으로 손질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도 굉장히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전문가들도 지금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국민의 입장에서 납세자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준비를 많이 했어야 된다 이렇게도 생각되는데 그 점이 매우 부족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납세자 전체 세부담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납세자 유형별로 귀착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할 수 있는 자료가 지금 부족해요. 저희도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만 이것 공식적으로 그런 자료 내기 어렵다는 게 우리 재정부의 입장이라구요.

예를 들어 봅시다. 이번에 주택 가격이 상승하니까 납세자가 늘지 않습니까, 종부세? 그래서 이번에 중산·서민층들의 부담을 좀 덜어 주자라고 해서 종부세 공제한도를 12억에서 14억으로 옮긴 것 아닙니까. 상향했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기본공제를 2억 상향했습니다.

○안도걸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약간의 시장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있잖아요 그것도 70%로 올렸지요. 이렇게 돼서 그러면 어떤 효과가 나느냐라는 건데 이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답이 없어요.

그런데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분석을 했거든요. 지금 그중에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과세 대상자의 81%, 12만 5000명이 평균 43만 원이 감소됐어요. 이런 수혜 혜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부각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이번 세제개편이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납세자의 불편과 불만이 어느 것은 합당하고 어떤 것은 과한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있어야지 그걸 바탕으로 해서 국회에서 세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좀 주세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할 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공제 금액을, 종부세 대상 금액을 12억에서 14억으로 올림으로써 시가 기준으로 하면 한 17억 정도 되는 집에서 20억까지는 비과세로 전환이 됩니다. 종부세를 내지 않고요. 그리고 시가 20억부터 시가 30억 사이는 오히려 감소합니다. 그 구간이 아마 나라살림연구소에서 한 것처럼 대부분의 주택 보유자가 이 구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종부세 부담이 줄고 그다음부터 는다 이런 내용 같습니다. 저희가 볼 때도 의미 있는 정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좀 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도걸 위원 예, 그런 정보를 제공했어야지요, 공신력 있는 정보를.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팩트에 입각해서 이번 세제개편의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은 상당 부분 억측이지 않습니까? 억측과 합당한 이유에 대해서 구분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유념하겠습니다.

○안도걸 위원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준비해 주십시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승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 순서를 바꿔 달라는 요청들이 많아서 상당히 혼란스러워서 제가 한 번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질의는 김태년 위원 하시고 그리고 강민국 위원님, 김남준 위원님, 이광재 위원님 이런 순서로 정리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년 위원 전략형 국부펀드 발표를 했어요. KIC 확대 개편한다는 것 작년 국정감사 때 이것 하자고 그랬는데 그때는 좀 부정적이었는데 이번에 정부가 보유한 자산을 전략투자자로 하겠다, KIC에다가 그 계정을 만들어서 하겠다 이것은 매우 반가운 일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 아시니까 설명 따로 안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이 정도 규모 갖고 이것 국부펀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저희 국부펀드가 초기에 좀 작아 보일 수는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운용 성과를 보여서 늘려 나갈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년 위원** 작아 보이는 게 아니고 작지요, 다른 나라의 국부펀드하고 비교해 보더라도. 지금 우리가 현물투자 20조 그다음에 미래대응기금에서 5000억, 지금 딱 손에 쥐는 것은 5000억이에요. 그러면 현물자산 투자한 것 배당받고 매각하고, 그것은 시장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지는 거니까. 그것 해도 깎해야 한 1조, 많아야 한 2조 정도 될 텐데 규모가 너무 작습니다. 미래대응기금에서 조금 더 늘려야 될 것 같은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알겠습니다.

○**김태년 위원** 보면 예를 들어 테마섹하고 비교를 해 보더라도 너무 작아요. 테마섹이 당시에 128억 3000만 싱가포르달러를 투자했는데 이게 당시의 싱가포르 GDP의 약 2.8% 정도 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GDP로 비교를 해 보면 한 74조 원 수준입니다. 미래대응기금이 결국은 우리가 여러 가지 분야에 어떤 전략적인 재정정책들을 펴는 건데 이 중의 하나는 결국은 수익을 만들어 내는 것도 하나가 있잖아요, 운용을 해서.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수익성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김태년 위원** 국부펀드에 조금 더 배정을 많이 해 가지고 국부펀드 규모를 늘려야 된다, 이걸 제기하니까 검토를 조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아이자립펀드 발표를 했어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김태년 위원**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비슷한 정책이 미국의 트럼프 어카운트, 지난 7월에 발표한 건데 이게 청년기 첫 자산 형성 지원책으로는 유사한데 이 트럼프 어카운트는 모든 신생아에게 지원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시드로.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는 소득 수준에 따라서 또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른 거고 또 부모의 납입 여력에 따라서 또는 납입 의지에 따라 정부가 부담해 주는 게 지금 달라지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잖아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최대 연 200만 원까지……

○**김태년 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설계해 놓은 걸 보면 결과적으로는 저소득층 자산 형성 지원책이 된다 이렇게 보여져요. 왜냐하면 지금 중위소득 150% 이하 아동에게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김태년 위원** 그러니까 150% 이상은 별도의 유인책은 없는 거고 또 중위 50~150% 같은 경우에도 국가 납입 부담액이 차등 지원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

○**김태년 위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부모가 얼마 납입하느냐에 따라서 매칭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잖아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김태년 위원** 그래서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조금 고정해야 된다. 최소한 중위소득 150% 이하에는 좀 고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고정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김태년 위원** 일정 금액으로 정해 주자, 150% 이하는, 이게 차등 지원할 게 아니고. 그러니까 부모가 납입 여력이 없거나 의지가 없게 될 경우에는 이게 결국은 청년의 자산 형성에 별 도움이 안 되는 제도가 되잖아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대신에 매칭을, 50% 이하면 아예 정액이 들어가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50에서 100 사이는 50만……

○**김태년 위원** 50% 이하는 아예 정하자 이런 거예요, 차등 지원하지 말고. 그것 검토해 주시고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김태년 위원** 또 하나는 이걸 시드로, 초기에 시드로 규모를 늘려 줘야 뒤에 이게 쪽 운용을 해 갖고 운용 수익이 늘어나서 실제로 청년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이걸 계산을 해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설계된 대로 보면 동일하게 한 7100만 원 만기 수령액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 보면 우리아이자립펀드는 약 4028만 원이 들어가요, 현재 설계된 대로 하면. 그런데 트럼프 어카운트는 한 2300만 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왜? 초기에 시드로 집어넣어서 복리 6%로 쪽 복리 효과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는 거기 때문에. 다른 계산도 있는데……

그래서 초기에 이 시드머니, 시드를 좀 늘리는 방식으로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 바라는 이광재 위원이 주장하는 아예 그런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신생아에게 그냥 아예 초기에 투입해 주는 게 좋겠는데 그게 어렵다 하더라도 초기에 지원 규모를 키워서 복리 효과를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바꿔야 될 것 같다.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승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후보자님, 김용범 실장,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 그리고 레버리지 ETF 사태, 이 연관성에 대해서 한번 시장에서 들어 본 적 있어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아니요, 없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러면 국정감사에서 다루기로 하고.

기초적인 추산이나 사전 검증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재경부·금융위·한국은행, 지금 이런 줄속 정책 때문에 시장은 완전 아수라장이 되고 수십만 명 국민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거래대금을 보니까 19조 4429억에서 5300억, 97%나 폭락했다고.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강민국 위원** 그런데 이번에 후보자한테 여기에 대한 걸 질의해 보니까 굉장히 답변이 실망스럽습니다. ETF 사태에 대해서 지금 후보자는 그 심각성에 대해서 아직 남 일처럼 여기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보완대책 만들 때에는 저희들이, 재경부랑 금

윤위랑 같이 협의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때……

○강민국 위원 그런데 왜 답변서에서는 금융위가 한 것이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그건 도입 단계를 말씀……

○강민국 위원 상품 설계에 직접 참여 안 했다는 이런 회피성 답변을 하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그건 실제 그랬었고요. 그 도입 단계 때 그랬다는 말씀입니다.

○강민국 위원 그러면 그 반대로 구윤철 부총리는 지난 7월 국회에 와서 상품을 출시할 때 꼼꼼하게 못 챙긴 측면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과를 했는데 정반대되는 입장 아닌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아닙니다. 팩트와 관련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정부의 입장은 결과적으로 저희가 도입했던 취지와는 다르게 시장 변동성이 전반적인 반도체 시장과 맞물리면서 확대됨으로 인해서 국민들께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은 저도 똑같습니다.

○강민국 위원 재정부나 금융위의 그 많은 인재들이 이런 사전 검증 없이 이것을 진행했다는 것은 누군가의 압박 때문에 시작된 거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구조적 위험성은……

○강민국 위원 그것은 정책실장이 다 컨트롤한 거예요, 아니면 그 윗선이에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그것은 제가 잘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조적 위험성은 검토했다고는 들었습니다.

○강민국 위원 지금 시간이 없어서, 또 한 가지 더 여쭙볼게요.

2026년 9월 3일 날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했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강민국 위원 이게 공공기관 기능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지금 난리입니다. 원칙과 기준이 전혀 없어요. 멀쩡한 LH는, 그것 전부 다 DJ 정부 때 한 것 아닙니까? LH는 지금 기능을 분리하고 남동발전 등 발전사는 또 통합을 해 버리고, 한전이 너무 적자니까.

또 보니까 지금 건설기술교육원·건설산업정보원 등 이것은 이미 민간기관이 하는 것과 정부가 하는 것을 합쳐 가지고 이걸 정부가 빼앗아 가겠다는 거나 똑같은 건데 도대체…… 그때 책임자 아니었어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그것은 2차관실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강민국 위원 그러면 재정부장관후보자로서 지금 입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제가 볼 때는 이번 기능개혁의 주된 목적은 핵심 기능을 전략적으로 재배치하자 그거랑 수요자 중심으로,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서비스 체제를 개편하자 이런 취지로 바꾼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민국 위원 이게 탁상행정이라는 겁니다. 지금 재정부의 문턱이 그만큼 높은 거예요. 지금 누구하고 소통해서, 국민들과 소통한 적 있나요? 소통도 아주 지나치게 획일적인 기준으로 접근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LH 기능 조정이라든지 발전사 통합이라든지 또 건설기술교육원·건설산업정보원 통합 관련해서는 원위치로 돌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

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좀 더 부처별로 해서 주무 부처에서 로드맵을 잘 설계해서 착실하게 진행되도록 노력을 할까 합니다.

○강민국 위원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 다시 한번 더 챙겨 보시고 국정감사 때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리고 요즘에 시장에서 이재명 정권이 국정 운영하는 행태를 보면 딱 한마디로 요약하더라고. 일단 던져 보고 여론 눈치 보다가 비판이 거세지면 책임을 회피하고 도망치는 간 보기 정권이다. 그런데 이것은 나는 대통령의 의지로 안 봐. 이 모든, 큰 기여를 한 것이 바로 나는 재경부라고 보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 때도 마찬가지잖아.

(영상자료를 보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저번에 2026년 세제개편안 아시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강민국 위원 여러 가지 내용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이것을 1차관이 직접 발표하고 만든 안이지요, 당시 1차관 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발표라기는 그렇지만 직접 만든, 관여했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런데 딱 29일 만에, 9월 1일 날 철회하고 원상복구 했다고.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그것은 입법예고기간 중에 들어온 의견을 수렴한 내용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민국 위원 그 중요한 것을 여론수렴 해 가지고 결정해요? 그러면 공공기관 기능도 여론수렴 하고 했어야지. 그런 것 아니에요? 원칙이 뭐예요, 도대체? 이것 또한 얼마나 지속적으로 추진했는지 지금 재경부가 스스로 함정에 빠진 거예요.

재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승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국 위원님, 기부금 내역은 자료 받으신 거지요?

○강민국 위원 예.

○위원장 조승래 받으셨지요? 어쨌든 궁금한 게 해소가 되신 거지요?

○강민국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조승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남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남준 위원 오전에 공공기관 기능개혁 말씀을 드렸었는데 중요한 것은 다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이번 공공기관 기능개혁은 철도라든지 발전이라든지 국민의 삶에 직결된 필수 서비스와 관련돼서 이 필수 서비스를 강화하고 효율화하면서 예전 정부들의 과오, 거기에서 교훈을 찾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릇된 경쟁이나 수익성 논리로 인해서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강민국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 소통의 부재 문제는 지금 제기가 됐으니깐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또 소통하는 노력은 기울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준 위원 우리 경제가 풀어야 할 과제들이 좀 산적합니다. 저성장이라든지 인구 감소 그리고 고령화라든지 청년 고용은 부진하고 또 소득·자산 양극화는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쟁으로 인한 대외 불확실성까지 커지고 있는 정말 안팎으로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를 동시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긴축이 맞냐 아니면 확장이 맞냐 이런 논쟁들도 어떻게 보면 이분법적이고 또 다소 소모적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를 총괄하는 부총리후보자로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계신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7년도 예산안 총지출이 820조 9000억 원, 전년 대비 12.8%가 증가했습니다. 성장으로 인한 추가세수나 초과세수를 가능한 많이 미래에 재투자하자 이렇게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잘 이해하고 있는 겁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맞습니다.

○김남준 위원 아시다시피 법인세를 포함한 세수가 증가를 하면서 오히려 부채비율은 줄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잠깐 도표를 좀 살펴봐 주시면, 실질적인 정부의 살림 현황을 보여 주는 관리재정수지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전체 수입에 지출을 빼고 나머지 사회보장기금, 국민연금이라든지 고용보험·산재보험 이런 것들을 뺀 수지인데요.

이것을 보면 올해보다 2027년도 비교를 해 보면 105조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GDP 대비 비율로 따지면 마이너스 0.1%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크게 줄어들은 거지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올해보다 3.3%p 개선된 48.3%로 나왔습니다. 작년에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제시했었던 53.8%보다 5%p 넘게 개선이 된 겁니다.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에서도 신규 국채 발행 축소에 12조 5000억 배정된 점을 들면서 신용도 긍정 요인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또 재정건전성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 간의 균형을 모색했다, 이렇게 무디스가 진단했습니다.

후보자님께 한번 여쭙보겠습니다.

추가로 벌어들인 세수가 있다면 전부 국채 상환에 써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는데 저는 이런 관점에서 좀 따져 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빚을 갚아서 이자 부담 줄이는 것 뭐 이것도 중요한 대목입니다만 그보다는 그 재원으로, 지금 국고채 이자율이 3~4% 정도 되지요. 이것을 더 상회하는 큰 수익을 낼 수 있고 또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가 더 크다면 재원을 전략적으로 써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확장이나 긴축 같은 틀에 매어서 이렇게 이분적으로 볼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금의 성장을 미래로 이어 갈 수 있는지 이런 지속 가능한 선순환

재정 이것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건축 확장이나 또 이분법에 벗어난다는 말씀 공감하고요. 우리 경제 현재 어려운 직면에…… 잠재성장률을 반등시켜야 되고 또 그로 인한 양극화 이슈가 또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볼 때 재정이 지금은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성과를 창출하는 적극 재정 운용을 한다면 오히려 그게 다시 재정으로 돌아오는 성장과 재정의 어떤 선순환 구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재정을 의미 있는 곳에 잘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남준 위원 또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부총리로서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게 성장의 과실이 우리 경제 전반에 온기로 퍼져야 하는 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김남준 위원 관련해서 27년도 예산안이 전년 대비 12.8% 증가했지만 보건·복지·고용 분야는 전년 대비 9.3%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양극화 재원 충분하지 않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전체 위낙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9점 몇 프로 넣은 것도 굉장히 많이 넣은 거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보면 중위소득 기준을 대폭 올려 가지고 기초생계 쪽이 또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남준 위원 시간이 부족해서 답변 마지막으로 좀 해 주십시오.

아마도 이런 경제성장의 혜택이 국민 삶……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바닥까지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후보자님께서 부총리가 되시면 성장과 민생의 선순환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짧게만 답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성장의 과실이 양극화를 해소하고 전체 국민의 삶으로 돌아가고 그것이 다시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환류될 수 있다는 말씀에 크게 공감하고요. 앞으로 계속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조승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를 드릴 텐데요 저희들이 회의를 진행한 지 한 2시간 가까이 돼서 이광재 위원님과 이준석 위원님까지 질의하고 잠시 정회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광재 위원 경제성장의 성과가 과연 국민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는가라는 부분에서 한번 여쭙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직원들한테 성과급 주는 게 화제잖아요. 그렇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이광재 위원**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2차·3차·4차 벤더에게는 단가를 인상해 준 다든지 TSMC처럼 R&D 자금을 많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함께 성장하는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상생이라고 표현은 되는데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하청과 원·하청 사이에 그 이익이 환류되려고 하려면 결국에는 이중구조 문제가 해결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 해당 기업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재 위원** 그러면 이번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단가에서, 어떤 부분에서의 좀 더 인상 조치가 있었는지 또는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지, 그렇게 해야 우리가 TSMC하고…… 뭔가 함께 성장하는 구조가 있어야 결국 후방 효과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이광재 위원** 그러면 재정적으로는 또는 법리적으로는 어떤 혜택을 주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할 건지, 그냥 일방적으로 민간기업에 하라고 할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저희가 세제지원 내용에 보면 환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에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이광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이런 대규모 호황이 2차·3차·4차 벤더에게는 어떠한 지원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봐 주시고 나중에 알려 주시고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이광재 위원**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에 1년에 포인트·마일리지가 대략 얼마쯤 발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죄송합니다.

○**이광재 위원** 소비자보호원이…… 통계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대략 20조 원 정도 발행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마일리지·포인트를 지역화폐로 전환해서 쓸 수 있으면 세금을 들이지 않고 우리가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겠지요? 그렇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이광재 위원** 제가 며칠 전 보고를 받아 보니까 카드사는 한 3조 원 정도는 지역화폐로 간다 그래요. 그런데 항공사가 갖고 있는 게 대략 3조 4000억~3조 8000억쯤 되는데 아직 동의하지 않고 있어요. 유통업체도 아직 실태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마일리지·포인트가 지역화폐로 전환되게 되면 훨씬 더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될 텐데 이것 한번 실태 조사를 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광재 위원** 조금 전에 김태년 위원님이 국부펀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20년간 연간 수익률이 얼마나 돼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한 7~8% 정도……

○**이광재 위원** 7~8% 되지요.

우리나라 국부펀드 수익률이 얼마나 돼요, KIC가?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KIC도 아마 해외투자 해서 그것보다 조금 더

높은 걸로……

○이광재 위원 한 5~6% 정도 되지요. 그렇지요?

20년간 운용해 봤으면 그 정도 국부펀드 운용 능력이 있다고 봐야 되지 않나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이광재 위원 그렇지 않나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이광재 위원 그러면 이것 한번 봐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태어나면 아이한테 우리가 1억을 국부펀드에 납입을 하면 이걸 7%로 운용하면 3억 8700만 원이 돼요. 그러면 20살이 되게 되면 우리가 1억 원을 청년자산으로 지원해 주고 2억 8700만 원을 65세까지 운용하게 되면 대략 60억 원 정도 되면 40억 원을 은퇴자금으로 주고 20억 원은 국가로 회수하는 시스템을 만들면 이렇게 되면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수도 있고 도전하는 나라를 만들 수도 있고 노후에 안심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뭔가 이제 AI라고 하는 거대한 생산성은 존재하지만 이게 결국은 부의 배분에는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수명 100세 시대 인간이 나오면 60살에 정년을 하면 40년 동안 먹고살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이광재 위원 그래서 기존 예산에 일반회계를 투입해 가지고 국민을 잘살게 하는 방식에서 국부펀드를 운용하거나 금융기법을 이용해서 국민들의 삶을 안정화된 삶을 만드는 새로운 국가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좋으신, 착안하신 아이디어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계속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광재 위원 이걸 제가 용역을 해 가지고 한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제는 국가가 세금을 걷는 데 돈 쓰고 세금을 쓰는 데 또 돈 쓰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합리적으로 돈을 쓰고 국부펀드에 모아서 국민들의 삶을 안정화시키는, 뭔가 국가가 투자하는 국가로서의 전환점을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지금 국가 자산도 그렇고 국부펀드도 그렇고 수익성 그리고 투자 이런 쪽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시기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광재 위원 더군다나 이번에 삼성전자·하이닉스가 많은 돈이 있을 때, 더군다나 국민연금도 모아 놓은 게 전 세계 5위잖아요. 퇴직연금도 이제 국민연금만큼 모일 거 아닙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끌어올려야 됩니다.

○이광재 위원 그렇게 된다면 뭔가 이제는 투자국가로의 대전환이 있는데, 한번 이것은 집중적인 검토를 해서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승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준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준석 위원** 후보자님, 아까 이재명 정부에서 어떤 정책적 판단을 대통령이랑 결을 다르게 할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냐 했는데 그렇게 소신을 드러내시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국무위원 중에 서열 1위다, 그게 바로 경제부총리의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국무회의 많이 들어가 보셨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대참으로 가끔 들어갔습니다.

○**이준석 위원** 그때 표결은 안 하셨겠지만 어쨌든 참석해 보셨을 텐데 그 국무회의에서 다루는 안건 중에서 본인이 소관하는 부처의 내용도 있겠지만 다른 부처들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도 심의해야 될 때가 있고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같이 합니다.

○**이준석 위원** 지난 정부에서 장관 지내신 비정치인 출신의 한 분이 저한테 계엄 날을 추억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내가 이것 판단해야 되는 시점이 올 줄 몰랐다’. 그러니까 국무위원으로서의 책임이라는 것은 국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들에 대해서 내 전문 분야가 아니더라도, 내 담당 분야가 아니더라도 소신 있게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렇게 하지 못했던 분들 상당수가, 그 자리에 있던 장관 중에 재판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초기의 기세보다는 지금 지지율이 많이 하락한 상태고 여러 정치적 사안들이 발동하고 있고, 같이 치러지는 법무부장관 청문회에서 하나의 쟁점이 된 게 결국 만약에 정당해산심판 같은 것들을 건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 전부다 국무회의 심의사항이거든요. 이런 거 오면 판단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침묵을 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사안을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이준석 위원** 다 그렇게 얘기하지요. 그런데 사안을 본다고 했을 때, 사실 경제부처의 수장이 되게 되면 결국 계엄도 그렇고 이런 아주 정치적 격변이라는 것이 경제 상황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적극적 판단을 꼭 해 주시라, 그래서 의견을 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하겠습니다.

○**이준석 위원** 그걸 그냥 침묵하시면 책임져야 되는 상황들이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한번 그냥 여쭙봤습니다.

비거주 1주택 관련해 가지고 국민들 관심이 정말 큰 상황이고 그 정책을 실질적으로 입안한 사람 중의 한 분이 바로 후보자시기 때문에, 예외상황을 지금 우리가 계속 열거를 하게 돼 있잖아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비거주이면서도 거주로 볼 수……

○**이준석 위원** 오늘 자 버전으로 어떤 사람들이 예외를 받을 것 같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저희가 현재 한 일곱 가지 정도 법안에 담고 있고요. 그것 외에도 부득이하게 그것에 준하는 사유가 있으면 추가로 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해 놓은 상황인데요. 예를 들면 해외전출이라든지 아니면 취학 그리고 전학·전근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부모 봉양도 있습니다.

○**이준석 위원** 지금까지 안에 따르면 시군 경계를 넘어가는 경우에 직장이 이동한다는

지 이럴 때 혜택을 받는 거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시군을 넘어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위원 그렇다면 이게 지리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생활권과 시군의 경계가 겹코 같지 않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이준석 위원 예를 들어 과천에 집이 있는 사람이 양재동으로 가면, 만약에 양재동에 전세를 얻어 갔는데 직장이 그리로 옮겼다, 그건 생활권의 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일단 도의 경계를 넘어간 걸로 이해됩니다.

○이준석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은 혜택을 받겠네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다른 요건에 맞춰야 됩니다, 그것 플러스 다른 것 맞추면……

○이준석 위원 그러니까 요건 맞췄을 때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이준석 위원 예를 들어서 화성시도 보면, 제가 동탄인데 동탄에서 경부고속도로만 건너면 오산입니다. 같은 생활권이지요. 한 4km 정도 가면 나옵니다. 시가지가 겹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면 시군 경계를 넘어서니까 괜찮은 거고. 만약에 화성에서 제가, 동탄이 동쪽 끝인데 서쪽 끝의 안산 밑에 새솔동이라는 곳으로 직장이 이전하게 되면 혜택을 못 받는 거네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그게 굉장히…… 시군이라는 건 명쾌한데 그다음부터는 일률적으로 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현재로서는 시군구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특이한 거지요. 사실 생활권과 시군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 제도를 이렇게 설계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보완할 지표나 다른 경계가 없어서 이렇게 한 건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아니, 저희들이 대안이 있으면 그것을 참고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어떤……

○이준석 위원 대안을 뭐로 하려고 합니까? 예를 들어서 거리로 따지면 어디 오밀조밀한 데는 사실상 경계선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포괄적이게 될 것이고.

혹시 생각해 둔 지표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 정책에 따라서 지금 국민 한 분 한 분은 나의 거주나 이런 것들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대충 시군 경계 이렇게 해 버리면 너무 크잖아요.

서울이야, 수도권이야 시군 경계가 오밀조밀하지만 저 멀리 가 보면 시군 경계가 되게 널찍하거든요.

다른 지표 만들 생각 있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시군구 제도는 원래부터 내려오던 세법에 있었던 제도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합리적인 대안이 있으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한번 고민해 볼 생각입니다.

○이준석 위원 그걸 지금 만들어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지금 현재는 찾기 어려운데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위원 시군구 경계가 당연히 행정상 경계니까 그걸 사용하겠다고 그러는데 생활권, 경제권이 맞지 않고 사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은요, 이 제도의 취지라는 것 자체가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 이런 거였다면 이것 당연히 생활권 고려해 가지고 짚어야 되는 거거든요. 좀 보완이 필요한데……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국회 과정에서 계속 더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준석 위원 아니, 발표된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이것 논의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조승래 이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16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승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영환 위원 장시간 노고가 많으십니다.

국가채무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채무 총량이 중요하니까, 아니면 상대적으로 관리 가능한 질적인 측면이 중요하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둘 다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질적인 측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환 위원 IMF 30년 만에 우리가 국가채무를 최종적으로 정산하는데요 그때의 고통을, 재경원에 그대로 계셨을 텐데 정말 힘든 고통을 우리 국민들이 겪지 않았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맞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런 위기 때마다 국민들은 항상 고통을 겪으면서 지내 왔어요. 그리고 그 뒤에 또 금융위기가 한 번 왔고요, 코로나 시기가 왔지요.

제가 코로나 때 국가채무 증가를 국가별로 한번 비교한, 제 책에 있는데 제가 비교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때 19년부터 21년까지 3년간 국가채무가 각 국가마다 어떻게 늘어났냐? 대한민국이—1300원 기준으로 다 통일했습니다—원화 가치로 221조 원 증가했어요,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때 GDP가 1800억 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캐나다는 1900억 불 정도 됐어요. 얼마 지출했냐? 한화로 665조 원 지출했어요. 일본은 그때 GDP가 우리나라의 한 2.5배 되지요. 그런데 얼마 지출했냐? 1682조 원 지출했어요. 미국은 우리나라 GDP보다 한 11.5배 정도 해요. 얼마 지출했냐? 5770조 원 지출했어요. 한 25배 지출한

겁니다, 우리나라보다. 채무가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프랑스는 1.5배 정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221조 원인데 프랑스는 580조 원 지출했어요. 독일은 한 2배 정도 하는데요 587조 원, 600조 원 가까이 지출했어요. 이탈리아는 우리하고 규모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459조 원 지출했고요. 스페인이 우리나라 GDP보다 적은데 374조 원 지출했습니다.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채무를 지면서 국민들을 살리기 위한 방법들이 다양했을 텐데…… 저희는 조기에 코로나를 극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고통도 따랐어요. 국민들이 빚을 졌습니다, 대신에. 이런 과정을 극복하는 게 사실은 이재명 정부의 또 하나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저는 원인을 찾기 전에 먼저…… 이때 베네수엘라 모델로 간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러면 다른 국가들은 이미 베네수엘라 모형으로 다 쫓아갔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동떨어진 주장들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또 피치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 미래대응기금 관련해서?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이번의 재정수지랑 국가채무 비율로 볼 때 재정건전성 기조로 들어가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한 것으로……

○**김영환 위원** 제가 한번 읽어 드리면 ‘미래대응기금이 경기변동에 따른 재정 수입 변동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AI·반도체 등 전략산업 투자가 생산성과 성장잠재력을 높여 고령화·저출생에 따른 중기 성장 제약을 완화할 수 있다’, 높게 평가한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신들을 보면 대한민국 재정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잘 보여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신대로 열심히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리고 제가 농특세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농특세가 목적세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서택스(surtax)입니다.

○**김영환 위원** 이게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들어가요. 그런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는 농업·농촌 구조 개선, 환경·기반시설 확충, 농어촌 소득 지원 등 특정 목적의 사업을 위해 운영되는 특별회계입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김영환 위원** 재정부 그때 있었을 때 봤으니까……

그런데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세출을 보면요 지특회계 지역자율계정으로 전출할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환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마저 마치기 위해서 1분 더 주시면 보충질의 때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승래** 알겠습니다.

○**김영환 위원** 이렇습니다. 다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지역자율계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특회계 지역자율계정에 농어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출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 한번 보실래요?

지원계정으로…… 일반회계에서 지원돼야 되는 4조 5000억을 감액하고요, 지난 추경 때, 농특회계에서 지역지원계정으로 전출을 시켰어요, 4조 2000억을. 그런데 이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지원계정 세출은요 초광역권, 지역특화산업·초광역산업의 육성, 투자, 일자리 창출, 지방대 경쟁…… 이게 농어촌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요? 저는 이거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야 되는 게 맞다, 지원계정은. 그래서 지원계정을 전출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

그래서 국가재정법하고 농특회계법을 해석을 달리하는데, 국가재정법에서는 기금 전출·전입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거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회계법이 또 따로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번에 미래대응기금에서 농어촌기본소득을 가져가겠다 하는 건데, 저는 국가재정법 해석 좀 잘해 줘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특회계 지원계정에서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잘못됐고요. 그래서 이제 서야 법안이 수정돼서 올라오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법 근거가 없으니까 수정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경제 총괄 책임자로서…… 농특세는 농업의 특성에 맞게 쓰여져야 돼요. 그리고 이제까지 한국의 산업 기반을 위해서 농어촌이 희생해서 온 겁니다. 세수가 좀 많이 걷힌다고 해서 이거를 갖다가, 이 여유재원을 법 근거도 없이 갖다가 쓰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순가락, 밥그릇 숫자까지 지역 특색을 다 알고 있는 농림부에서 농어촌기본소득을 하는 게 맞다, 농특세 재원으로 하는 게 맞다, 그것도 농어촌특별회계에서 하는 게 맞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걸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승래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상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후보자님,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로 급락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여러 요인들이 같이 함께 나타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훈 위원 두리뭇실하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국민들이 먹고살기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부동산 가격 폭등, 전세 매물 급감, 전세가 상승, 주가 하락, 물가 상승,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재정경제부장관의 입장이라면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런이런 정책은 문제가 있으니까 하면 곤란합니다라든지 진언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후보자 태도를 보면 무난하게 그냥 임기를 이어 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제 김용범 실장도 사퇴를 했고 그러면 경제 수장, 경제 일인자로서 국민들 민생을

직접 챙기고 진언하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실 자신 있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반드시 그렇게 하세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알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지역화폐 이런 거 남발하고 포퓰리즘 이런 정책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노무현·김대중 대통령 때는 특정 지역의 국정 프로젝트에 대해서 차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표 많이 얻은 지역, 표 적게 얻은 지역, 노골적으로 차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찌질한 국정 운영입니다. 정부 수반이고 국가원수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각 지역 주민들이 차별받는다든 그런 인식 들지 않게끔 골고루 국민들 삶을 챙겨야 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하나 하면 군공항 이전 사업, 광주 군공항 이전이나 대구·경북, 대구 군공항 이전은 맥락이 똑같아요. 이전 형식도 똑같아요. 같은 법에 의해서 추진됩니다.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는데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은 정부에서 직접 TF를 조직해서 지원을 해요. 기부 대 양여의 실질적 주체가 정부가 돼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는 그런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대구 군공항 이전 사업,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어느 특정 지역 군공항 이전 추진하다가 정권 바뀌면 또 그것 스톱시키고 다른 공항 추진하나? 이전 기간만 줄잡아 10년 넘게 걸리는 사업인데 같은 잣대로, 같은 방식으로 추진돼야 됩니다. 재정경제부장관이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무게 중심을 잡고 판단하고 추진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표 많이 얻고 표 많이 얻지 못했기 때문에 국비 예산이 지원된다거나 정부가 주도하는 프로젝트의 노골적인 차별은 이것은 안 됩니다. 특정 지역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고 해서, 그게 조금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심각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돼요. 이것은 국민들 갈라치기가 되는 겁니다.

선거는, 투표는 국민들, 시도민들 자율적인 판단과 선택에 따라서 하는 거고 그 결과를 연동시켜서 국정을 펼쳐 나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민생을 책임지고 있는 경제수장 이형일 후보자가 막중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재명 대통령에게 진중한 제언도 하시고 또 민심을 챙겨 나가는 데 정말 제대로 된 잣대를 대통령이 인식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레버리지가 돼 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직무를 집행하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이형일 후보자 내가 믿겠습니다.

○위원장 조승래 김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태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메가프로젝트가 지역적인 구도를 가지고 지역을 결정했나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지금 서남권, 충청권, 영남권에 나뉘져 있습니다.

○정태호 위원 전국적으로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전략적으로 배치한 거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정태호 위원 그런 점을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 주제는 조세 체계와 불평등에 관한 부분으로 오늘 한번 후보께 좀 강조를 하고 싶은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 그림을 보시면, 소득 지니계수 많이 보시지 않아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정태호 위원 이게 좀 특징이 있어요.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2012년부터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 이것은 아마 재정이 투입된 이후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여지는데 2020년부터 별로 변동이 없어요. 그러면서 최근에 들어와서는 시장소득 지니계수하고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 간격이 좁아지고 있지요. 이거는 재정의 역할이 약해지고 있다 이런 신호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던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등장한 겁니다.

다음 것 한번 보실래요?

그래서 실제로 조세와 이전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살펴본 건데 OECD 34개국 중에서 한국은 4위 수준입니다. 제가 요새 이 그림을 많이 인용을 하는데 소득재분배가 재정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지 않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그렇습니다.

○정태호 위원 그런 건데 우리나라는 재정이 소득재분배에 있어서 별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이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소득재분배 효과는 재정지출하고 조세지출에서 아마 이 부분을 해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 전체 평균에 비하면 좀 약한 면이 보이기는 하는 상황입니다.

○정태호 위원 아무래도 경제부총리께서는 조세를 운용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만 놓고 보면, 소득세와 관련해서 보면 소득세 최고세율이 우리나라는 OECD 평균보다는 높습니다. 45%고 OECD 평균은 36%인데 정작 GDP 대비 소득세 비중은 한국은 6.6%, OECD 평균은 8.2% 이렇게 돼 있고요. 총조세 대비 소득세 비중은 20.5%, OECD는 23.6%. 우리나라 소득세 비중이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한다고 봐야 되겠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정태호 위원 금융소득을 중심으로 한번 보면 금융소득을 포함하는 종합과세대상자는 약 19만 명으로 종합소득 확정신고자의 1.9% 수준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과세되는 대주주는 24년 말 기준으로 보면 코스피 0.004%, 코스닥 0.006% 수준.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근로소득자 입장에서는 금융소득자에 대한 불만들이 있는 거지요. 정부가 공정하게 과세를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역으로 보면 소득세를 근로소득자 중심으로 이것을 운용하면 결국 소득세 비중이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GDP 대비 또는 전체 조세 대비 비중이 낮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게 공평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번 분석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소비 관련 과세와 관련해서 부가세를 보면 전체 평균을 GDP 대비로 보면

5.8% 정도 되는데 1분위는 14%. 그렇지요? 부가세 부담률, 그러니까 소득 대비 자기의 부가세 부담률을 보면 전체 평균이 5.8%인데 1분위는 14%, 10분위, 그러니까 소득이 높은 쪽이지요, 3.2%밖에 안 돼요. 이거는 원래 부가세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기는 하지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과연 우리 조세 체계가 공정한가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출 부분은 따로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번에 부총리가 되시면,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잖아요. 조세 체계의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그 부분도 저는 되게 중요한 과제일 거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부총리의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삼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조세제도의 전면적 대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조세지출 쪽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조세지출 쪽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세제상으로 보면 아무래도 소득이 적은 사람한테 공제를 해 줘도 덜 돌아가고 오히려 소득이 많은 사람한테 더 나가게 되는 그런 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세지출제도를 과감하게 정비를 했고요 또 필요하면 더 할 생각이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 부분 소득재분배 기능을 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재정지출로 전환하면 재정지출에서는 훨씬 더 소득에 맞게끔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재분배 기능을 조세지출에서 재정지출로 옮기면 더 늘어나는 현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이번에 같이 했고요.

그것 외에 내년에도 또 저희들이 조세지출 쪽에서 손볼 게 있는지 더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태호 위원**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가 있나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태호 위원** 그거는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도입을 검토를 해 보시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승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임이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후보자님, 제가 오전 질의에서 신공항 이전 관련해서 재정 지원 부분에 있어서 특별법 제20조에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이나 여기에 대해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라는 이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전혀 1원도 반영이 안 된 부분에 있어서 광주 군공항에 대통령 TF실까지 만들어 가지고 1조 원 이상 지원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광주 군공항에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뭐라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준해서 TK 신공항도 재정 지원에 대해서는 동일한 잣대로 해 줘야 된다고 하고 여기에 대해서 TF를 꾸려서 해 달라고 했고 후보자께서는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맞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임이자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반도체 가지고 한번 말씀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반도체 그다음에 AI데이터센터, 퍼지컬 AI 이게 분절돼 가지고 하나 하나 있는 것보다는 같이 있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게 같이 있을 때 하나의 국가첨단전략으로서의 효과가 더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만 두고 봤을 때는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는 서남권에다가 896조 원을 지원하겠다는 거고 하고 충청권에는 AI데이터센터로 해서 390조 지원하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영남권에 대해서는 퍼지컬 AI로 가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310조라는 얘기는 있는데 여기서 896조, 390조, 310조는 숫자에 큰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기업들이 투자하는 부분도 포함돼 있으니까요.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우리 국가가 권역별로 성장엔진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4대 선정 기준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기업이 투자할 의지가 있는지 그다음에 지역의 강점은 뭔지, 잠재력은 있는지 그다음에 국가전략이 들어갑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국가전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보게 되면 반도체 서남권, AI데이터센터 울산·동해·세종, 퍼지컬은 새만금과 대경권이라고 돼 있는데 새만금 같은 경우에는 현대자동차가 투자를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임이자 위원 그런데 대경권은 전혀 없어요. 그냥 구미 반도체 조부장 혁신 거점 육성만 제시해 놔서 서남권은 없어요.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지금 광주 군공항 부지에다가 반도체를 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팹을 짓겠다는 거고 하는데 여기에 버금가게끔 TK 신공항 부지도 230만 평 정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도 반도체 팹을 지을 수도 있고 다 좋은데 광주에 기 간다고 했으니, 저는 광주에 간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업균형발전을 위해서 갈 때는 가는 것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대경권에는 230만 평이나 되는 TK 공항 부지가 있고 여기에는 이미 낙동강이라든가 전력 수급도 괜찮아요. 그렇지요 않습니까? 그런데 또 구미도 보게 되면 구미는 이미 5산단에서 2산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80만 평 부지를 해 놓고 있고 거기에 40만 평 정도는 팹 2기 정도 지을 수 있는 게 있다. 그리고 구미에 보게 되면 AI데이터센터가 이미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잘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여기는 조부장 부품도 잘돼 있어요.

그러면 이 대경권에다가 퍼지컬 AI뿐만 아니고 또 팹도 두 기 집어넣고 이미 조부장이 돼 있고 그러면 여기에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그다음에 AI디지털센터 그리고 여기에 조부장까지 다 돼 있으면 퍼지컬 AI까지 다 들어가서 하게 되면 정말로 한 눈에 볼 수 있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냥 312조 규모로 투자할 거다. 지난번 대정부질문 때도 한성숙 국무총리께서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못 했어요. 할 수가 없지요, 여기에 대해서 기업이 얼마나 투자할지 명확하지는 않으니까.

그러면 후보자님, 대구 출신이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임이자 위원 여기서 내가 출신을 꼭 따지는 건 아닙니다마는 대구 출신으로서 그래도 경제 전문가고 정책 전문가로서 우리 대구시민들이 그래도 좀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그 높은 자리 계실 때 대경권에 반도체 또 AI데이터센터 이런 걸 다 중심으로 해서 퍼지컬 AI를 크게 키울 수 있는, 육성할 수 있는 국가전략을 크게 세울 수 있는 방안 갖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영남권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처음에 출발할 때 기업들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312조가 숫자만 있는 게 아니고 기업과 각 업종이 이미 다 나눠져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는 나중에 자료를 드릴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기업별로 어디서 투자할지가 다 정해진 상태로 저희가 취합을 모아 가지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 계획들을 어떻게 하면 빨리 구현할까, 현실화할까 이런 쪽에 지금 현재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입지 면에서는 기업이 결국에는 스스로 선택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알기로는 반도체는 아마 소부장, 부품 쪽인 것 같고 AI데이터센터도 있고 그린에너지, 우주항공, 방산까지 같이 다 있는 게 영남권 프로젝트입니다.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더 디벨롭(develop)하는 데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임이자 위원 퍼지컬 AI도 같이 해서 우리가 정말로 한눈에 볼 수 있는 큰 국가첨단 전략산업으로 좀 그려 내라, 그려 달라 이 얘기 하는 겁니다. 좀 해 주세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그랜드 스케일(grand-scale)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기업의 의사결정이 있으니까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아니, 해야 된단니까요. 해야 돼요. 안 하시면 고향 못 와요.

○위원장 조승래 수고하셨습니다.

당장 이번 추석 때 가기 어려우신가요?

○임이자 위원 그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승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기형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기형 위원 후보자님, 세법 관련해서 한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 관련해서 지금 현재 논쟁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래서 후보자가 그걸 함께 이해하고 또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가 주가 누르기 방지 관련해서 통상 이야기하는 게 국내 자본시장에서 PBR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자본시장의 시가와 그다음 장부가를 비교했을 때 장부가보다 낮으면 PBR이 1보다 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통상 한국이나 미국, 일본 비교해

보면 한국은 약 69%의 기업이 PBR 1 미만이고 일본은 36%, 미국은 한 2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PBR 1 미만인 기업이 과도하게 많다, 이게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하나의 현상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다음 보시면 실제 이런 현상들을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풀어 가고 있느냐 그러니까 통상 PBR이 낮은 회사의 경우에는 장부가를 믿을 수 있다면 일반적으로 가치주라고 평가되고 많은 시장의 기능에 의해서 M&A가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정상화되는 과정, 이게 주가가 정상화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평가 기업에 대한 M&A 인수 제안이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저평가 PBR 1 미만 기업들이 대폭 축소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그런 기능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거나 또는 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도 이런 M&A 인수 제안에 대해서 이사회가 중립적으로 의견 표명을 하고 또 거래소나 이런 곳에서 공시를 제대로 하게 하는 것, 그래서 시장의 기능에 의해서 저평가된 기업들이 정상 가치를 이해하고 또 그렇게 평가를 받는 이런 취지에서 베어허그(Bear Hug) 제도라고 해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금 몇 개 발의가 돼 있고요.

그런데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이러한 자본시장법도 있는데 또 상·증세법으로 법안들이 지금 몇 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정부안에서도 비슷한 안들이 나왔는데 이 내용들은 통상 비상장기업의 경우에 비상장주식을 상속·증여를 할 때는 PBR 0.8 기준으로 해서 세금이 부과되는데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시가가 있고, 시장의 거래가격을 시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기준으로 해서 되기 때문에 만약 PBR 0.8 이하이고, 0.2 0.3인 기업들도 많은데 그런 기업의 경우에는 오히려 상장 상태를 유지하면서 계속 상속을 하려고 하는 그런 유인이 있지 않는가 이런 시장의 비판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해서 주가 누르기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증세법상 상장회사도 0.8을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부과하면 어떻겠냐 이런 법안들이 나와 있는 거지요. 어느 법안이 옳냐 그르냐를 떠나서 이게 사회적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고, 그러면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대한 내용은 자본시장법상 M&A 제도를 통해서 정상화하는 방법이 있고 또한 상속 및 증여세법을 통해서 푸는 방법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는 대부분 M&A 절차를 통해서 정상적인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고유하게 상·증세법 개정안도 나와 있어서 이번 정부의 세제개편안에도 그 부분이 부분적으로 반영이 돼 있고 그 정부 세제개편안은 이른바 거래소에서 네이밍 앤 쉐이밍(Naming and Shaming)이라는 거래소 공시 규정, 저PBR 기업에 대한 공시 규정의 일부 기준을 가져와서 세제개편안도 나왔는데 그 세제개편안 내용에 적용할 경우 실제 저PBR 기업들 중에서 거의 한 10분의 1 내지 10분의 2 정도만 적용 대상이 된 거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는 이미 검토를 하셨을 테니까 현재 이 논쟁되는 측면에서의 제도개편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먼저 위원님 말씀처럼 주가 누르기를 해결하는 방안은 상속세법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금융위에서 하고 있는 네이밍 앤드 셰이밍(Naming and Shaming) 제도 자체도 어떤 견제의 기능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발의하신 베어허그법에서도 보면 일

정 부분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개매수 제안이 들어갔을 때 주주충실의무가 반영된 상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만큼 이사회에서 최대주주만을 위한 평가를 하기 어렵고 그러면 제대로 된 평가를 하면서 보면 당연히 주가에 대한 반응이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 외에 저희가 제안한, 정부안으로 낸 상속세법까지 같이 겹쳐졌을 때 종합적인 시너지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대해서도 요건과 관련해서는 현재는 거래소 규정에 관련된 내용을 차용했지만 여러 가지 의견을 저희들이 같이 귀담아듣고 있고 그 요건을 좀 더 수정하면 포섭 범위를 넓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또 같이하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기형 위원 평가 방식이나 또는 평가 기준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리적 논쟁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맞습니다.

○오기형 위원 그래서 그런 점도 충분히 검토하고 계시는 거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를 어떻게 할증하는 거랑 시가랑 다른 것을 하는 거랑 이 차이에 있어서 저희가 깊이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기형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승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준영 간사님 질의하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후보자님, 저희가 한미전략투자기금 2000억 불에 관련된 결정은 재경부 산하에 있는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거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공사 내에 운영위가 있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래서 얼마 전에 결정을 하셨고 그게 언론에 나왔는데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에 한미전략투자기금 투자합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협의 중이라서 나중에 때가 되면 저희가 국회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구체적인 항목은 저희가 지금 현재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배준영 위원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 상업적 합리성이 있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관련된 내용이 아직 다 끝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배준영 위원 제가 작년에 미국 가서 알래스카를 지역구로 하는 연방 상원의원을 만나서 그 자리에서 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들은 바 있어서 좀 관심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1년 전이지요—예결위 때 김정관 산업부장관한테 거기에 투자할 거냐고 물으니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하이리스크 사업’이라고 했고요 ‘현재 대미투자 항목에서 벗어난다고 보아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상업적인 합리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지금 상업적 합리성을 따질 수 있는 단계까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절차상으로.

○배준영 위원 그래서 각 미국의 투자사업을 묶어서 수익을 조정하는 방식에서 하나하나 나뉘어서 한다고 그러니까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에 만약에 투자를 결정해서 손해가 나면 국민의 혈세가 정말 크게 손실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책임은 재정부 운영위원회에서 집니까, 재정부장관이 집니까, 아니면 누가 집니까, 그 책임은?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현재 법에 따르면요, 대미투자특별법에 따르면 상업적 합리성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관리위원회에서 그렇게 평가를 해서 운영위로 보내고 운영위는 그것을 갖고 의사결정한 다음에 국회에서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 상업적 합리성이 타당한…… 충족을 못 했다 그런 경우에 전략적 가치를 고려하게 됩니다. 전략적 가치를 고려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하면 사업관리위원회를 거쳐서 운영위를 거쳐서 국회에 와서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완료가 되는 사항입니다.

현재 특정 사업이 상업적 합리성이 있느냐 없느냐,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이 아직 어떤 것은 진행 중이고 어떤 것은 아직 초기 단계고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준영 위원 그러면 후보자님에게 묻겠는데 내일모레 국회에 와서 산자위에서는 보고하는 거고 하여튼 재정부에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비공개로 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그게 동의를 구하는 절차입니까, 아니면 그냥 보고만 하시는 겁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지금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배준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의를 구하는 절차라면 저희한테 사전에 통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통보가 없었고 그리고 적어도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같이 국민적인 우려가 있고 자체적으로도 상업적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굉장히 유보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보고 절차를 했다는 게 동의를 얻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좀 명확하게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나중에 그 협의가 끝나고 나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리고 후보자님, 평생 기재부에 계셨잖아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사실상 그렇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런데 67개 기금을 이번에 보니까 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결산을 들어가서 보니까 국가재정법상 기금운용평가 대상이 미래대응기금도 되는데 이게 3년에 한 번씩 기금 존치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존치평가를 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 제일 많이 보는 게 유사·중복성, 다른 기금이랑 중복되고 그러면 폐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유자금도 너무 많으면 이게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도 폐지 대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재정안정화 장치라고 이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공공자금관리기금이 이미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기금 존치평가에 비춰 보면 이게 너무 많이 겹친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미래대응기금을 3년 뒤에 폐지해야 되거나 아니면 다른 기금을 다 폐지해야 되거나 이게 법에 정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이 부분은 국가재정법 운영사항 중에서 기획처 소관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기획처랑 한번 더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총리로서의 입장을 말씀을…… 경제부총리 아니세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아직 잘 모르세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아직……

○위원장 조승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가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3분입니다.

먼저 박수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수영 위원 후보자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감사합니다.

○박수영 위원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 미래대응기금 162조라고 하는데 실제 적립하는 돈은 몇 조인지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지출을 하고 제외한 분은 한 104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영 위원 104조지요.

내년에 우리 국가부채는 얼마를 발행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국고채 발행액은?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228조……

○박수영 위원 차환하는 것 말고 순증하는 것.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구십몇 조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수영 위원 106조 아닙니까? 몇 조든 간에 어쨌든 100조 가까이 되지요? 그렇지요?

이렇습니다. 미래대응기금에 104조를 적립하는데 이거를 하는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세입 194조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국가부채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어요. 다 합쳐서 빙빙 돌리니까 모를 수도 있는데 결국은 적립하는 돈이 국가부채를 낸 돈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미래대응기금을 미래약탈기금이라고 이름 부르는 이유입니다. 제가 기재부장관이 고 제가 청와대 같으면 딱 194조 세입이 더 들어오면 절반은 나라 빚 갚는 데 쓸 것이고 절반은 미래대응기금에 넣어서 나중에 세수 핑크가 날 때 보충하는 이런 데 쓸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결정하신 건 뭐냐? 다른 사람 잘 몰라요, 이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당연히 미래대응기금이 돈 남은 것 저축하는 줄 알고, 외신이 어찌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데 잘 몰라요, 이 사람들이. 이게 빚내 가지고 넣은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내는 국고채 추가 발행액은 예상 금리가 얼마 정도로 우리가 갚아야 됩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내년에 아마 시장 발행 금리를 따라가지 않을

까 싶습니다.

○박수영 위원 따라가는데, 일단 금년 상황에서 그대로 예상하면 4.6% 정도 예상되고, 지금 적립해 놓은 돈은 예상 수익은 얼마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구체적으로 운용계획이 나중에 나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수영 위원 아까 보고서에는 3.6% 정도 된다고, 1%p 정도 차이가 나요. 비싼 돈을 빌리고 낮은 금리로 적립을 해 놓는 건데 이게 가정 같으면 가능하겠습니까? 집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비싼 돈 빌리고 낮은 금리로 적립해 놓고, 이것을 벌어들인 돈에서 해야지 빚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도대체 이게 맞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저는 경제 잘 모르는, 청와대에 경제 잘 모르는 정치인 장관, 이런 사람들이 이런 것 주장하더라도 관료 출신이고 전문가이고 경제학 박사인 후보자는 ‘노’라고 할 수 있는 후보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 그대로 흘러가게 놔두고 이런 식으로 재정 운용돼 가지고 되겠나.

부총리후보자는 경제관료 출신 아닙니까? 지금 답변하는 것 보면 여전히 경제관료예요. 이제는 아닙니다. 관료도 아니고 차관도 아니고 이제 경제수장이 될 찰나에 있으니 수장이 되면 제발 엉터리 같은 경제이론에는 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경제수장이 돼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위원장 조승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진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문진석 위원 후보자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현재 국세청에서 주택가격 기준 상위 1%가 누구인지 파악이 가능합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다 집계를 하고 나면 알게 됩니다.

○문진석 위원 그렇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문진석 위원 사실 모든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일일 테고 특히 조세제도는 더더욱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부세는 상위 1% 소수의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해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 참여정부 시절에 도입된 제도인 것 맞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진석 위원 그런데 과세 기준이 공시가격 12억에서 이번에 14억으로 올리겠다고 했는데 자꾸 시장의 변동 상황에 따라서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이게 대상자가 늘어나기도 하고 약간 줄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거든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그럴 수 있습니다.

○문진석 위원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이렇게 살펴보면 2017년에 33만이었던 게 작년에는 53만 8439명이 이렇게 대상이 됐는데 이러다 보니까 시장이 변동하면, 주택가격이 변동함에 따라서 종부세 대상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 않아요.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조세에 대한 공포가 좀 있는 거잖아요, 나도 언젠가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종부세 제도에 대한 불안정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후보자님

도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말씀하신 중부세 과세 기준을 비율로 만들어 보자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처음 말씀 주신 것은 아니고 21년에도 정부하고 국회에서 굉장히 깊이 있게 한번 논의된 적 있습니다. 그 당시에 상위 2% 안을 갖고 조세소위에서 한번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고민을 한 결과 그때는 통과가 안 되고 보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를 보면 매년 변동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적응하기는 나올 수 있으나 오히려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예측 가능성이, 갖고 있는 집이 중부세 대상인가 아닌가를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차원이 더 고민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셨으니 저희도 이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더 고민을 해서 합리적인 의견을 찾아보고 필요하면 국회랑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문진석 위원 그러니까 비율로 조정을 해서, 지금 국세청에서 집계가 되기 때문에 비율로 해도 자동으로 그냥 가격을 산정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로 하든 2%로 하든 그 기준을 정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면 자동으로 부동산 가격이 산정이 될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그렇습니다.

○문진석 위원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도입하는 것이 더 시장의 변동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 아니냐.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문진석 위원 중부세를 없앨 거면 모르지만 계속 유지한다고 한다면 좀 더 안정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승래 문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상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안상훈 위원 후보자님, 오늘 보니까 여당 위원님들께서 조세 형평, 양극화 해소 강조들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 세대는 세대 내의 문제도 있지만 세대간의 형평도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부모 세대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애들 걱정 먼저 하는 게 제대로 된 부모잖아요.

제가 보기에 지금 대한민국의 장기 재정 상황을 요약해 보면 딱 이렇습니다, 현 세대는 복지잔치, 미래세대는 빚잔치. 아까 앞선 질의에서 제가 우리나라 국채 D4까지 감안해 가지고 우리나라는 지금 전형적으로 복지만 늘리면서 거기에 따른 조세 부담, 보험료 부담 정치권에서 얘기를 못 하고 있어서 이 문제가 발생했다 얘기를 드렸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에 보면 이 정부에 대해서 청년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래세대 빚

위기 이 문제, 청년들 커뮤니티 게시판 가 보면 도배가 돼 있거든요. 이 문제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결국 성장을 더 함으로써 그게 다시 재정으로 돌아오는 선순환 구조가 안착이 되면 결국에 재정건전성도 같이 따라올 수 있다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올해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게 결국에는 5년 뒤의 국가채무비율을 10%p 내리는 결과를 갖고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일을 이번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러면 새로운 반도체 산업에 뭘 할 거냐 이것을 저희가 고민해서 계속 끌고 나가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상훈 위원 아니요, 제가 듣던 중에 너무나 희망적이고 극한적으로 낙관적인 답변이 세요. 이게 재정학 교과서 봐도 짝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세금이나 보험료를 올리자고 주장하든지, 아니면 지금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되니까 현재 있는 복지를 좀 구조조정하자라고 얘기를 하든지 그런 얘기들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국채 문제만 해도 앞에서 존경하는 박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재정경제부 익명게시판 보면 후배들이 뭐라 그러시는 줄 압니까?

PPT에 나오지요.

‘어떻게 쓸까부터 궁리하는 기금은 미래대응기금이 아니라 미래소멸기금이다’, ‘국채 발행과 상환, 국가재정법상 세계잉여금 처리 규율은 경제부총리의 고유 권한이자 책무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미래대응기금 그대로 하는 게 맞는지? 만약 우리가 조금이라도 초과세수건 추가세수건 있으면 지금 미래세대한테 전가될 이 국채부터 끄는 게 맞는지, 뭐가 옳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그것은 전략적 판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공적 상황을 내년에 완전히 끝은 행위 자체도 이미 미래로 넘어가는 부채를 줄이려는 노력의 하나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국채의 경우에도 순발행 규모를 줄인다는 노력도 같이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랑 같이 그 외에도 양극화를 해소한다든지 청년을 위한다든지 이런 것도 결국에는 미래세대를 위해서 지금 지출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장기적인 연기금 이런 잠재적 부채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정재계산제도가 또 있으니 그때 가서 또 같이 논의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상훈 위원 후속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승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영석 위원 정부의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현상에 대해서 팩트를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되겠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윤영석 위원 팩트가 잘못되면 그것은 정책이 잘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무원들이 요즘 소신이 없다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대통령이 최근에, 여러 가지 경제 정책에 대한 팩트 인식을 보면 상당히 잘못된 게 많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예를 들면 주택 공급에 대한 부분도 지난 7월 달에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토론회인가 거기에서 재개발의 경우에는 집이 줄어든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때 발언을 보면 ‘재개발의 경우는 총입주 가구수가 줄어든다, 이것이 통상적이다’ 이렇게 발언했는데 이게 명백히 잘못된 거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아마 정비사업 시 발생하는 문제점도 고려해야 된다는 취지로 보이고요.

○**윤영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실제로 그 사이트별로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영석 위원** 아니, 가구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명백한 오류가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바로잡아야지요. 이것을 바로잡아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지금 후보자 말씀대로 이것을 합리화하는 식으로 대답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만약에 임명이 되면 이런 대통령의 잘못된 인식을 공무원들이 바로잡아 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그렇습니다.

○**윤영석 위원**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이 건은 잘못됐다기보다는 다가구주택 등……

○**윤영석 위원** 또 그런 식으로 합리화를 자꾸 시키려 그러는데 이게 명백하게 잘못된 거지요.

지금 PPT도 나와 있지만 도시정비형 재개발을 하면 가구수가 약 한 2배 증가합니다. 그리고 재정비촉진지구 도시정비형도 거의 한 1.7배 정도 다 증가를 해요. 지금 후보자의 과천 거기도 마찬가지로 아닙니까? 한 30% 이상 증가하잖아요. 그렇지요, 가구수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하는 말을 자꾸만 합리화하려고 하지 말고 공무원들이 잘못된 건 바로잡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한국의 보유세가 선진국 대비 3분의 1이다’ 이런 발언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그거 다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우리가 보유세는 조금 낮지만 거래세가 높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GDP 대비 부동산세가 상당히 높단 말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그 외에도 지금 보니까 부동산 경매 숫자가 늘어난다는 것을 가지고 ‘부동산이 폭락할 우려가 있다’ 이런 최근의 발언도 있던데 지금 서울 경매 건수는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를 보면 전년 대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34%가 줄었습니다, 경매 숫자가.

그래서 대통령이 뭔가 인식을, 팩트에 대한 인식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럴 경우에 공무원들이 지금 후보자가 하는 그런 태도처럼 자꾸 그걸 합리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직언을 해 줘야 됩니다, 대통령한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승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후보자님!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이종욱 위원 미래대응기금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계속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여당 위원님들도 그렇고. 세수 변동성을 완충한다. 또 세수결손도 생길 수 있고 초과세수도 있을 수 있으니까 물어 뒀다가 잘 적립해서 좋은 데 쓰겠다 이런 건데, 재정안정화 장치 이런 표현이지요? 그런데 재정 당국이야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좋겠지요.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겐 굉장히 한가한 소리다. 매년 빚을 100조 원 이상씩 내면서 그걸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도록 들고 있겠다? 발상 자체가 저는 성립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100조, 크게 봐서 100조라고 하자고요. 100조 빚내서 100조 여유자금, 이렇게 재정 당국이 아무 때나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들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재정 운용하는 나라가 있어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아까부터 계속 ‘지속가능한 선순환 재정’ 이런 표현을 써요. 이런 거 없어요. 아니, 정부가 무슨 이런 약장수 같은 말을 합니까, 국민들한테? 돈을 지금 많이 쓰면 나중에 더 많이 벌 수 있다, 그거 어떻게 보장합니까? 우리 많이 들고 있어요. 약장수라든지 보험회사 판매요원이라든지 다 이런 말 하지요. 그런데 국민들 잘 안 속아 넘어가지요. 그렇지요? 그거 맨날 속아 넘어가면 가게가 거덜나잖아요, 보험만 들고. 그런데 정부가 이렇게 말을 하면 국민들은 왜 들어야 됩니까? 왜 따라가야 되지요?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건 좋다고요. 약자라든지 금리 부담 이런 거 해 줘야지요. 그 말하고 재정총량을 확장적으로 할 거냐 말 거냐하고는 다른 이야기에요. 폴리시믹스(policy mix)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어떻게 긴축재정을 하면서, 아니 긴축금융을 하면서 확장재정이 폴리시 믹스라고 그러세요? 전 세계가 다 긴축인데 대한민국만 확장입니까, 재정을? 앞으로 그렇게 갈 거예요? 무슨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듣고 있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지금 확장재정은 다른 나라도 통화정책 긴축하고 같이 하고 있는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러는 건 아닙니다.

○이종욱 위원 지금 온 나라가, 전 세계가 다 긴축으로 돌아서고 있지 않습니까, 금리도 그렇고?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재정은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통화는 긴축을 하지만.

○이종욱 위원 전 세계가 다 확장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사례가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12.8%, 이십몇 프로 이렇게 해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그거는 저희가 세수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

지만, 규모에는 차이가 있지만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그렇게 같이 가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래서 재정준칙이 필요한 겁니다. 정권이 들어서서 이렇게 책임도 못 질, 국민들한테 현혹적인 말 하지 말라고 재정준칙이 있는 건데 이 나라는 그런 생각도 전혀 없지요, 이 정권은?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현재 재정준칙에 터치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관리재정수지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종욱 위원** 그러니까 정부가 국민들한테 더 쓰겠다, 막 쓰겠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뻔뻔하게 말하는 그런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부끄러운 줄 아세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그런데 재정에서 성장동력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결국 미래를 위한 투자 아니겠습니까?

○**이종욱 위원** 약장사라니까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승래**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후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2023년에 1300만 원 정도를 기부하셨더라고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윤후덕 위원** 그것은 선한 기부를 한 거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조금 더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 사항인데요.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윤후덕 위원** 예.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그것은 그 당시에 통계청장이 된 상황에서 정무직의 경우에 급여 10%를 반납하는 그런 것을 그 당시에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동참을 했고요. 그래서 10%를 일괄 기부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제가 기부한 내용은 1년의 절반치니까 한 650만 원가량 됩니다. 그런데 650만 원가량을 기부했을 때 국세청에 그것 통계가 잡혔습니다만 우리 통계청 내 급여인사시스템에서 그게 포착이 안 되고 거기에도 같이 한 번 더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 번의 더블 카운팅이 된 거고요. 그것을 제가 최근에 발견하고 수정 신고를 하고 초과되는 추가 공제받은 부분은 다시 납세를 해서 그것은 완료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기부금은 한 650만 원 정도, 한 1년의 반 정도. 그 전에는 청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는 기부가 안 됐고요, 청장 된 이후는 10%를 전액 다 기부했습니다.

○**윤후덕 위원** 사정은 그랬네요.

그리고 5월 27일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에 차관으로서 그때 참석했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했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때 5월 달은 국내 주식이 상당히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그렇게 기억합니다.

○윤후덕 위원 그래서 국민연금에서 실제 보유하고 있는 비중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목표로 가지고 있는 비중은 14.9% 정도로 되어 있는 것을 그때 5.8%를 올린 20.8%로 올려 줬어요. 그러면서 국민연금이 실제로는 국내 주식을 매도해야 되는데 매도하지 않게 해 줬잖아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그때 같이 결정한 내용 중의 하나가 리밸런싱을 작동시키는 결정인데 같이 했습니다.

○윤후덕 위원 예, 같이 했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당시 상반기에 리밸런싱을 유예했다가 7월 1일부터는 다시 리밸런싱을 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 목표 비중을 초과하게 되면 리밸런싱이 작동되는 기제를 같이 도입했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때뿐만 아니라 발표하지도 않았는데 전략적인 허용범위를 플러스마이너스 3%p를 그것을 2배로 늘렸지요, 그때도?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그 부분 내용은 비공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숫자는……

○윤후덕 위원 내가 알고 있는데 무슨 그게 비공개예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그 당시에 비공개 의결로 구체적인 수치는 내지 않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정은 했습니다.

○윤후덕 위원 아니, 그것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용하는 것의 상당을, 그렇게 상당히 많이 올려 주고 그래서 매각하지 않게 해 준 겁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매도를 하지 않을 수 있게 해 줬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예요. 거기에서 조금씩 매도도 하면서 조정을 하고 그랬으면 이게 지금 시점에서 보면, 상당히 많은 한 22% 정도의 지수가 폭락을 했는데 그게 폭락이 아닌 연착륙을 했을 수도 있었는데 그런 상황이 발생했잖아요.

그리고 국민연금에도 그때 결정한 것이 실제 결과적으로는 손해가 크게 발생한 거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아니요, 그 당시에 목표 비중을 상향하지 않았더라면 바로 팔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그 당시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기금의 수익성·안정성과 함께 검토했다고 저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지나간 일인데—이제 경제부총리로 취임하면서 이렇게 목표로 가지고 있는 원칙을 가지고 곳곳하게 밀고 가야지 상황에 맞춰서 그렇게 변동하고 또 변화시키고 그러면 어디로, 실제 이득이 있는지 실패가 있는지 그런 것은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제부총리가 되시면 중심을 가지고 경제 운영을 좀

해 줘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승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재 위원님.

○이광재 위원 아까 했습니다.

○위원장 조승래 질의 없으시고.

정태호 위원님.

○정태호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조승래 없으시고요.

김남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남준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던 건데 지금 우리 경제가 생산연령인구 감소, 고령화 이런 복합적인 위기를 맞고 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AI 기술도 급속한 확산이라는 변화를 동시에 맞고 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산업과 노동시장 곳곳에서 인력수급 불균형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것도 경제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그 변화의 흐름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검증하는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를 한번 봐 주시면 2023년에 발표된 인구추계에 따르면 22년 기준으로는 71.1% 우리나라 생산연령인구 비중이 이렇게 나오는데 2030년에는 66.6%, 2060년부터는 과반 이하로 떨어져서 72년에는 45.8%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2025년까지 실제 인구구조 변화, 아래에도 표시를 해 봤는데 전망보다 조금씩 더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인구의 감소가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고요.

노동인구 감소는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이로 인한 충격이 산업 업종에 따라서도 조금씩 다르게 다가올 것이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의뢰해서 서울대학교 연구진이 분석한 결과 자료를 준비해 봤는데요. 2031년에 인력이 어디가 부족할 거냐 이렇게 조사를 해 보니까 사회복지서비스업, 전문직별 공사업 그리고 음식점 및 주점업 이런 데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59만 8000명, 21만 9000명, 20만 9000명 이렇게 불균형이 발생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저숙련이라든지 아니면 저임금으로 분류되는 업종들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정보기술서비스업, 전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이런 업종에서는 오히려 공급이 수요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균형이 지금 발생을 할 거라는 예측인 거지요.

또 최근에는 AI 기술이 확산되면서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난 3일 한국은행과 OECD가 공동 개최한 컨퍼런스에 따르면 AI가 대체 가능한 정도를 판단하는 AI 노출도 이것을 보니까 35세 미만 근로자 비중과 0.47 상관관계 보였다고 하고 55세 이상 근로자 비중과는 -0.53, 그러니까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고 합니다.

다. 평균 임금과는 0.40, 교육 수준과는 0.74……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젊고 또 임금 수준, 교육 수준 높은 직장일수록 AI가 대체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런 결과로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AI 영향이 큰 업종에서 청년층 고용이 감소했다라는 것들은 도표 한번 보여 주시고 그것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AI 영향을 얼마큼 받는지에 따라서 업종별로 그리고 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청년층에 대해서 차별화된 교육과 또 고용정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님 생각이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AI 확산 그리고 인구구조 변화가 우리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면에서 보면 도전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기술, 스킬셋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숙련이나 또 대체가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들이 AI 기술을 빨리 배워서 적응할 수 있도록 양성하는 것 그리고 제도약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오히려 저숙련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실제 사람을 보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는 오히려 종사자 처우 개선도 필요하지만 차라리 피지컬AI를 기반으로 한 돌봄로봇이 들어와서 일손 부족을 완화한다든지 이런 것도 같이 고민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이 부분을 면밀히 진단하고 앞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남준 위원 중요한 분야니까 잘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승래 김남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영환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별 얘기가 다 나오는 것 같은데요.

피치사나 무디스에 경제학박사들이 없어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환 위원 훌륭한 박사들이 많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미래대응기금을 혹평을 하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미래대응기금 자체가 저희들이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엄청난 단기적인 초과세수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재정과 다른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과 관련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김영환 위원 뭐 약장수니 미래약탈기금이니 이런 얘기들 하는데 지난 정부 한번 복

기를 줘 했으면 좋겠어요. 2년물, 3년물 대환용이 지금 56.2조예요. 그렇게 빚 갚기를 원하는 분들이 그때는 빚 안 갚고 세수 핑크를 전문으로 내셨다는 거예요.

교부세·교부금 23년도, 24년도 카톡으로 교부세 중단 결정을 내렸어요, 카톡으로. 그것 다 지켜본 분들 아십니까? 총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23년도에 18조 5000억, 24년도에 6조 5000억, 교부세·교부금 안 줬어요. 그래서 지방채 다 발행하고 지방 살림들 다 줄인 것 아십니까? 그것 다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책임지는 것 아니에요? 심지어 길게는 IMF 다 책임지잖아요. 빚 갚잖아요. 그렇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계속 갚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영환 위원 채무의 총량도 중요하지만 채무의 질이 더더욱 중요하다, 관리 가능한 부채 수준인지 D1·D2·D3까지 국제 비교를 하셔야지. 30년 뒤에 일본은 어떻게 미국은 어떻게 유럽은 어떻게 국제 비교를 해야 될 것 아십니까? 경제학의 기억 자도 모르시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세수 핑크나 내지 않았으면 다행이에요, 나중에.

그리고 오늘 조세지출 관련해서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제 조세지출 100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일정 정도 조세지출 관리제도도 있는데 이 관리제도가 아직까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예타·심층평가. 심층평가 내역들도 제가 살펴보니 그 내역들이 그렇게 실통치는 않아요.

그런데 최근에 출산, 입양 자녀 관련해서 조세지출을 재정지출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매우 훌륭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에게는 이익이 없어요. 출산하지 못하는 가족들에게는 이익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맞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런데 정말 돈이 없어서 결혼 비용이 부담돼서 혹은 아이들이 부담돼서 지금 저출산 기조가 이어지는데 저는 재정지출로 전환한 게 매우 훌륭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이광재 위원이 말씀하신 것을 저는 재경부가 정말 귀담아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생애주기, 제가 명명을 했습니다. 생애주기 기본소득이라고 제가 명명을 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제 출발선이 공정한지, 기회가 공정한지 또 결과는 정의로운지 항상 귀착 효과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출발선과 기회를 공정하게 만들어 주는 바탕이라는 측면에서 이광재 위원이 말씀하신 걸 정말 귀담아듣고 정책을 어떻게 짤지, 미래 세대에게 기회를 어떻게 줄지 이런 것들을 노후까지…… 노인 자살률 1등 아십니까? 노인 빈곤율 1등. 이런 사회를 어떻게 극복할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승래 마무리해 주십시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승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훈 위원님까지 하시지요.

김상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이형일 후보자님, 민주당에서 정권을 잡으면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해요. 부동산 지옥이 펼쳐집니다. 문재인 정부 때 왜 그랬지요? 임대차보호 3법, 전셋값 폭등, 청년들이 서울에 전세를 못 구하고 경기도로 이주를 했어요. 이번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도 저는 똑같은 효과를 나타낼 거라고 봅니다.

오세훈 시장, 서울의 집값 86주 연속 상승 그게 누구 탓이니 공방이 있던데 어쨌든 지금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것은 사실이에요.

8·3 부동산 세제개편안 우리 후보자가 직접 설계했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김상훈 위원 부동산 가격이 왜 폭등하냐면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의 흐름을 존중하지 않고 매입자와 매도자의 정서·심리를 고려하지 않은 임의적인 설계 때문에 이런 폐단이 일어나는 겁니다. 장특공제 축소하면 가격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그것 판단 못하겠지요? 다주택 중과 때문에 집을 정리했던 국민들, 이제는 뚝뚝한 한 채를 하면 되겠다 싶어서 뚝뚝한 한 채 마련했는데 고가주택이라고 세금을 또 물려요.

비거주 요건이 중요하다? 그러면 자식들 교육, 부모 간병, 직장 때문에 할 수 없이 비거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은 무시하고 무조건 세금 때린다? 이것 국민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그런 부분을 수용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무시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훈 위원 그런 것 충분히 반영하셔야 되고 부동산시장에 자꾸 정부가 인위적으로 칼질을 하면 안 돼요. 부동산시장은 브레이크 걸고 증시는 액셀 밟은 이게……

부동산시장에 브레이크를 밟으면 돈이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겠지만 지금 어떻게 됐어요? 부동산 가격 폭등하고 주가는 하락했잖아요. 둘 다 망했어요. 이게 인위적으로 정책을 설계하면 설계한 대로 될 것이라고 오판한 겁니다. 아주 단편한 도식만 가지고 부동산시장을 다루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지금 여전히……

이제명 정부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한 건 뭘니까? 부동산 가격 폭등 아니겠어요? 전세 매물이 지금 급감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부동산 정책 정말 신중하게 다뤄야 됩니다. 가능하면 시장에 맡겨야 돼요. 이런 부분, 경제 수장이시니까 진짜 제대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시장을 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승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어 있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인사청문회를 중지하고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원내지도부의 합의 그리고 우리 재경위 양간사의 협의에 따라서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사일정 상정의 건

(18시02분)

○위원장 조승래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국회법 제59조 단서에 따라 의사일정 상정을 위한 의결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지 15일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습시다만 관련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필요한 법률 정비를 신속히 할 필요가 있어 간사님들과 협의한 결과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하여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국회법 제59조 단서에 따라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359)

(18시03분)

○위원장 조승래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대체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조승래 의사진행발언, 위원님들 시간 관계상 2분만 해 주십시오.

○배준영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저희 국민의힘 재경위원들은 중수청법의 부수법안인 국세기본법을 원내지도부의 지침에 따라 오늘 회의에 상정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다만 우리는 중수청이 잘못된 제도이며 따라서 반대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중수청 부수법안의 상정에 동의한 것은 찬성해서가 아닙니다. 개별 법률의 조문이 정비되지 않으면 그 혼란과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기 때문입니다. 법체계만은 무너뜨릴 수 없다는 차악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회의록에 분명히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우리는 표결에 응할 수 없어 퇴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 합의된 대로 계속되는 청문회는 참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부 위원 퇴장)

○위원장 조승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축조심사를 생략하는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고 속개시간은 간사들과 협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회의중지)

(2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승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태년 위원님, 질의 준비되셨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년 위원 후보자님, 거시경제정책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통화정책이 있고 재정정책이 있고.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김태년 위원 전 세계적으로 놓고 보면 통화와 관련해서는 긴축정책들을 다, 이게 지금 추세고.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기조가…… 예, 맞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리고 그렇게 되면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5월·6월에 기준금리 인상할 필요 있다, 더 늦지 않게 금리를 인상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7·8월 두 번 인상을 했는데 하반기의 금리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을 하고 계세요. 금리와 관련해서는 후보자께서 지금 코멘트를 하기는 되게 어렵잖아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통화당국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언급은 좀 자제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태년 위원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좀 어렵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김태년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금통위에서 제시된 향후 6개월 기준금리 전망의 중간값이 지금 3.25, 한 번 더 올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물가하고 수도권 집값 상승을 주요한 요인으로 지금 한국은행 총재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금리가 인상이 됐을 경우에 지금 현재 수도권의 집값과 관련해서는, 주택 가격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안정적이거나 또는 하락할 소지도 있잖아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부동산시장에는 마이너스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태년 위원** 우리가 경험적으로 놓고 보면 사실은 역대 주택 가격은 금리, 금리에 장사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더구나 우리나라가 주담대 대출도 많고 가게 대출도 많은데 그런데 예를 들면 집값을 잡거나 물가를 잡거나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가게 대출도 많고 또 주담대도 많고 하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당연히 올라갈 것 아니에요. 이것 큰 부담 아닙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맞습니다.

○**김태년 위원** 특히나 금리가 인상됐을 때는 우리가 보면 그 고통은 취약계층이나 중소기업 그다음에 소상공인, 자영업 여기가 훨씬 더 힘들고 고통스럽잖아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취약차주 중심으로 영향이 먼저 갈 것 같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렇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보면 그나마 그 고통이 커지지 않도록 보완해 주는 정책은 역시 재정정책이 가장 효과적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일차적으로 재정에서 그 부분을 좀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년 위원**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주 면밀하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금리 인상이 어떻게 보면 올 것 같으니까 그 경우의 수를 대비해서, 그 경우를 대비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아프고 힘든 부문이나 또는 계층에 어떻게 재정정책을 가지고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들을 미리 세워 놓을 필요가 있겠다, 이 주문을 드립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지난 8월 28일 날 재경부가 주도적으로 해서 취약차주 부담 완화 방안을 관계 부처 협의해서 만들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 안에 담긴 내용이 이번에 본예산에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저신용자 지원을 위한 서민금융 상품을 늘리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소상공인 금리 부담 완화도 있고 채무조정 활성화 내용도 같이 다 담아서 일부 국회에 가 있고요. 그거 말고도 행정부 내부로도 할 수 있는 것까지 같이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금은 그 발표한 대책이 국회 심의 과정을 통과해서 내년에 착실히 집행되는 거랑 정부 내에서 하기로 한 것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을 먼저 하고 추가로 더 필요한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김태년 위원** 딱 취약차주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그쪽이 제일 시급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조승래** 김태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기형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기형 위원** 후보자님, 의무지출 구조조정 관련해서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이후에 일을 해야 되는 과정 중에서 몇 가지가 좀 있어서.

지금 미래대응기금 중에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오기형 위원 그리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제도를 한번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전체 전반적인 상황 자체가. 그다음에 기초연금 같은 경우도 현재 한 단계 진화가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사회적 비판이 있고 논의가 축적되고 있는데 잘 가고 있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교육재정교부금 관련된 것은 이번에 이미 방안을 내서 국회에 보내 준 상태고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보면 내국세의 일정 비율이 아니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를 반영한 새로운 산식을 기준으로 교부금을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경우에는 하후상박 구조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감액을 좀 줄이는 부분 그런 부분이 반영돼 있습니다.

○오기형 위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만 보면 실은 국세 중에서 내국세 20.79% 연동 이게 폐지되고 하지만 초과세수 부분을 미래대응기금에 있다가 전체 교육과 관련된 분야에 쓰기로 한 거지 않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오기형 위원 그리고 이것은 그동안 많은 논의들이 있어서 이번에는 좀 한 걸음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 또 실제 보니까 저희가 광역자치단체가 교육계 관련해서 전출금 내지는 비법정전출금, 보조금 이게 상당히 되더라고요. 제가 별도로 조사를 해 보니까, 행안부를 통해서 보니까 한 12조 정도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국가가 각 지자체든 광역이든 기초든 다양한…… 하는데 이게 기초가 부담한 것은 또 뺐습니다, 데이터가 더 축적돼야 돼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교육재정과 일반행정 재정에 있어서 너무 칸막이가 커서 그럴 수도 있는데 민심에 더 민감하게 대응하는 기초나 광역단체장들이 또 별도로 계속 이 재정 부담과 협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감안을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알겠습니다.

○오기형 위원 이와 별개로 기초연금에 대해서 하후상박한다고 하는데 실제 하후상박에 대한 발상들이 좀 관철되고 있나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하위 30%까지랑 그 위에 45% 그다음 70% 사이에 지급되는 금액을 차등화해서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오기형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길게 보면 현재도 한 27조 정도 예산 부담하고 있는데 이게 70% 기준이 뺐다 뺐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지만 길게 보면 실제 필요한 곳에 돈이 들어가도록, 취약계층에, 빈곤층에 가도록 이렇게 구조조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점에서는 나중에 가다가 멈췄다 내지는 충분한 제도 개혁의 방향으로 못 가고 있다 이런 비판들이 지금 쌓여 있습니다, 요즘 서서히 계속 나오기도 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관련해서 지급 대상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고령층분들에게 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사항이기 때문에 보다 폭넓은 사회적 논의랑 의견이 먼저 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기형 위원 국회에서 그 논의를 저희도 계속해야 될 것 같고 관심 가져 주시기 바

랍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승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준영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지금 지방에서 난리입니다. 지방교부세가 이제 미래대응기금을 선취하고 하면 그렇지 않은 것에 비해서 한 30조 원이 덜 내려가고요. 그리고 이번에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에 관련해서 20.79%를 조정했고 새로운 산식으로 하면 결국 또 한 30조가 덜 내려가서 지역에 토털 60조 원 넘는 돈이 원래대로 하면 더 내려갔어야 되는데 안 내려간다 이것에 대해서 아까 후보자님이 지방주도성장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60조 원이나 선취하고 안 내려보내면서 어떻게 지방주도성장을 하겠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예결위에서 교육부장관한테 물어보니까, 그러면 교육감들하고 합의가 됐냐고 하니깐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교육감들하고는 사전에 20.79% 폐지하는 것에 대해 합의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실제로 기획예산처하고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새로운 산식을 하게 된 상황에 대해서는 1차 보고를 하였는데 그것에 대해서 교육감님들의 동의를 완전히 구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됐거든요.

후보자님, 이렇게 상당한 금액을 중앙정부에서 쓰게 되고 그것을 다 쓰지 않고 일부 나눠 주는 식으로 하고 지방분권이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지방에 배부하는 재원을 상당 부분 줄이는 것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지역에서 반발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미래대응기금이 넘어야 될 가장 큰 벽이 있다면 그것일 텐데 어떻게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시겠습니까? 세제개편안도 보니까 후보자님이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직접 설명도 하시고 청와대 홍보영상 이런 데도 나오고 하시는데 미래대응기금이 물론 기획예산처 담당이기는 하지만 총론적으로는 경제부총리시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설득해 나가실 계획입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일단 교육교부금 같은 경우에도 증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 하나하고 그간에도 계속 논의됐던 것이 교육교부금으로 간 돈 중에서 일부는 대학교 교육에 써야 된다 이런 논의도 굉장히 많이 있고 공감대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교육 대상을 전체로 보는 걸로 같이 함으로써 전반적인 교육 자체가 늘어난다 이런 쪽으로 계속 설득을 해 나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냥 작년보다 조금 더 늘어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상당 부분, 30조 원 이상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아마 설득을 하셔야 될 겁니다. 안 그러면 이게…… 저는 미래대응기금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글썄요 저는 진행될 가능성을 굉장히 회의적으로 봅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승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까지 마쳤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분? 네 분에다가…… 여섯 분이요?

계속하실 분은 계속하세요. 계속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박수영 위원님, 3분 하겠습니까.

○박수영 위원 후보자님, 행정고시 36회시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맞습니다.

○박수영 위원 제가 29회니까 7년 차이가 나고요. 서울대학교 89학번이시라고 돼 있는데……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맞습니다.

○박수영 위원 제가 82학번이니까 역시 7년 차이가 납니다.

7년 공직을 먼저 시작한 선배로서 정말 진심을 담아서 말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후보자님이 IMF 사태 맞고 한탄을 한 제2의 강만수 장관처럼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후보자님이 공항에서 교체 결정을 통보받는 제2의 구윤철 장관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후보자님이 사법처리 받느라고 고생하고 있는 최상목 전 장관처럼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이 경제 수장이라는 자리는 이렇게 무거운 자리입니다. 지금까지 좋은 관료로 해 오셨고 후배 공직자로서 제가 늘 좋게 생각을 해 왔고 지켜봐 왔는데 이제는 충실한 관료로서, 착한 관료로서의 역할 잊어버리고 경제 수장이라는 막중한 자리를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지금 관료로서 모든 걸 예스, 예스, 예스 하고 예, 예, 예 하던 방식을 버려야 됩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루를 해도 그만두시고 나면 전부 부총리님이라 부릅니다. 제가 모셨던 윤증현 장관님하고 진님 장관님은 사표를 늘 안쪽 주머니에 넣고 다닌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김대중 대통령께 가서 내고 오는 걸 제가 본 적도 있습니다. 그 정도 각오로 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를 하나 10년을 하나 끝나고 나면 장관님 소리 듣고 부총리님 소리 듣게 됩니다. 따라서 좀 더 하겠다는 마음으로 ‘예’, ‘예’ 관료 때처럼, 충실한 서울대 출신 범생이처럼 이렇게 해서는 저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경알못’이라는 단어 아십니까, 경알못? 주변에 경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처럼 떠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만나시면 경제전문가로서 하실 말씀 분명히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야 제2의 강만수가 안 되고 제2의 구윤철이 안 되고 제2의 최상목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막중한 자리, 임명되시면 잘 수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위원님의 진심 어린 말씀에 대해서 제가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깊이 새겨서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승래 공직 선배로서의 아주 따뜻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상당히 빠가 있는 말씀을 해 주셨네요.

잘 새겨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조승래 다음은 안상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안상훈 위원 아까 질의했던 국민연금 관련해 가지고 조금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국가 지급보장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복지부만의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금이 소진되고 나면 국가가 이걸 재정으로 한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거든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안상훈 위원 가장 좋은 것은 우리 기금이 선진국들,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70년, 일본 같은 경우에는 100년까지 가도록 개혁이 돼 있거든요. 우리도 최소 70년 맞춰야 됩니다. 재정재계산 아까 말씀하셨는데 연금 재정재계산 70년 하게 돼 있는 것도 미니멈은 갈 수 있도록 5년마다 조정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70년 기준으로 몇 년이 모자라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한 10여 년 모자라는 거 아십니까?

○안상훈 위원 20년 정도.

지금 수익률이 올라서, 지난번에 대통령께서는 이번에 주식시장에서 국민연금이 많이 났기 때문에 이제 구조개혁도 연금개혁도 필요 없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런 잘못된 인식은 좀 바로잡아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 지금부터 준비해 가지고 기금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놓지 못하면, 이게 하루에도 지금 몇백억씩 쌓이는 거 아십니까? 갈수록 태산이 더 태산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후배 관료분들이 이것 다 뒤집어쓰고 욕먹게 생길 거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40년 후에 건보료랑 건강보험만 가지고 월급 번 것의 한 70% 정도 내는 그런 세상, 이게 디스토피아지 우리가 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성장 가지고 그 불 끄겠다고 그러셨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좋겠지만 정부라는 것은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감안해 가지고 최대한 보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특히 정부 내에서도 재정 당국, 재정경제부 같은 경우에는 그 일을 하라고 경제부총리를 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동의합니다.

○안상훈 위원 지금 연금특위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고 있긴 한데요, 지난번 모자란 미적립부채 한 1800조 이것 채우는 것을 보험료를 더 올릴 거냐, 아니면 자동안정화장치를 할 거냐, 국고 투입을 할 거냐. 그런데 그 당시에 지금 현재 여당 의원님들 의견은 보험료도 못 올린다, 자동안정화장치 안 된다, 국고 투입하겠다. 복지부가 이것을 덜컥 받았 습니다. 그것 알고 계셨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자세한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상훈 위원 이미 지금 여당에서 제가 보기에 거의 당론으로 국고 투입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개혁 관련해서도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국고 투입이 진짜 가능한 문제인지, 국고 투입을 한다면 미래로 떠넘기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1년에 얼마

씩 해야 이것을 소프트랜딩 할 수 있을지 이런 거 빨리 따지서 가지고 연금특위에도 주셔야 돼요. 그게 아니면 보험료 올리든지 자동안정화장치를 올리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복지부에 하셔야 되는 겁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승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저도 마무리 말씀이 있는데 질의할 게 좀 있어서 그것 마저 하고 하겠습니다.

앞서 여당 위원님께서 신용평가기관 무디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국제신평기관도 굉장히 칭찬을 했다, 전문가들이 다 알고 좋은 평가를 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래서 국제비교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씀 속에는 예를 들어서 국가채무가 평균보다 낮으면 한 정권이 다 펴먹어도 되는 건지…… 저는 그런 뜻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정권을 잡았으니까 책임 있게 하는 겁니다만 미래세대에 대한 전체적인 재정건전성은 유지해야 된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국정 운영해야 된다,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이종욱 위원 그리고 무디스가, 재정부도 물론 그렇지요. 홍보를 하려니까 좋은 말만 하는데 제가 다 읽어 봤습니다. 읽어 봤더니 이런 말은 있어요. 국채 12.5조 원을 축소할 것은 국가 신용도에 긍정적이다 이런 말을 했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이종욱 위원 그 뒤에 다른 말이 있어요. 그 이유가 초과세수를 전부 지출하지 않고 부채, 증가에 사용한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그랬거든요, 신호. 이런 좋은 신호가 나온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런 겁니다. 반대로 해석하면 한 100조 원쯤 했으면 엄청나게 극찬을 했을 겁니다. 그 평가를 새겨서 들어야 된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했어요. 국가채무비율이 GDP가 올라가서 48%로 떨어졌지만 동 신용등급—Aa지요—국가 중간값인 44%보다 여전히 높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또 12.8%로 지출을 급격히 올리면 나중에 다시 지출을 통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런 말도 했고 반도체 호황은 영원하지 않다 이런 말 다 했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이종욱 위원 물론 홍보 측면에서 한 것도 좋습니다만 이런 국제신용평가기관은 가급적이면 전체 풀 텍스트를 국민들한테 잘 전달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같은 생각이시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승래 수고하셨습니다.

윤후덕 위원님 질의하십니까?

○윤후덕 위원 예.

○위원장 조승래 윤후덕 위원님.

○윤후덕 위원 후보자님.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윤후덕 위원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서 현재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런 문제를 하나 제기할 수 있어요. 거주하고 비거주하고 이런 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저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고 매우 개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례도, 주요 국가에서도 그런 거주 중심의 세제에서 우대하는 정책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싱가포르나 다른 나라들 보니까 이것이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 도시가 형성될 때부터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그렇게 우대하는 세제도 조금조금씩 강화도 하고 이렇게 누적되면서 그것을 인정시키게 하고 그렇게 시장에서 그걸 인식하게 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와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거주하고 비거주를 구별하지 않고 세제를 가지고 왔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윤후덕 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내년하고 내후년하고 이렇게 해서 1년, 2년, 3년 만에 비거주에서 거주로 이동하라는 행동을 유발시키고 있어요. 그런 것이 좀 충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간이. 다른 나라들 보면 10년, 20년, 30년에 걸쳐서 이렇게까지 정착되고 그렇게 해서 효과가 있는 건데 우리는 그것을 2년, 3년 만에 효과를 내려는 것 같아서 우려가 돼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 봐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안을 낼 때 원래 기본공제금을 한 5억 차이를 두던 것을 비거주는 원래 받던 12억 그대로 두고 실거주에 대해서만 2억을 추가로 혜택을 주는 형태로 바꾼 사항이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나머지 공제 부분에서는 현행 정부안, 원래 원안대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세법 심사까지는 시간이 많이 있고요. 그동안 국민들 의견도 더 들어보고 또 합리적인 지적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지금 후보자가 말씀하시는 건해는 매우 플렉시블하고 포용력이 있는 건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면 또 강한 그런 입장을 유지하더라고요. 국회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의논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시장에 맞춰서 수용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내면 좀 받아 줘야 돼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적극적으로 참고하고 논의하고 소통하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래서 2년, 3년 만에 비거주에서 거주로 이렇게 기간을 주면 비거주인 소유자는 비거주에서 거주로 행동을 유발하는 그런 요인이 생겼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그것이 전세시장에 충격을 줘서 2차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우려가 된다는 얘기에요. 그것도 감안해서 3년 내에 해낸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소프트랜딩을 해야 된다,

그러면 5년이 필요하나 7년이 필요하나 이런 정도의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승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 LH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우리나라 GDP 계산을 할 때 공공기관의 부가가치를 계산해서 GDP에 반영이 되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각 부문을 다 체크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당연히 포함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환 위원 일례를 하나 들게요.

지금 LH 주택 공급을 할 때 손해를 많이 봐요, 임대주택 사업 같은 경우는. 그렇지요? 그런데 시장 시세보다 적게는 30%, 많게는 한 80%까지 주변 시세 대비 이렇게 임대주택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GDP에는 어떻게 반영되지요? GDP는 시장……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가격이 있으면 가격을 먼저 우선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영환 위원 맞습니다. 그대로 반영되는 거예요.

뭐냐 하면 공공기관의 빚이라는 것을 잘 한번 살펴보면 이게 국민의 후생을 얼마나 증진시키는지 GDP는 계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GDP는 시장의 교환가치, 즉 시장가 격만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공기관이…… 예를 들면 도로공사도 마찬가지고요, 톨게이트 비용부터 시작 해서. 우리 한강 다리가 죽 있지만 일산대교가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아요. 민자도로입니 다. 그런데 이것은 GDP에 반영이 되는데 나머지 한강 다리는 예전에 지었던 건축비만 GDP에 반영이 되고 그 이후 통행료 관련해서는 GDP에 반영이 안 됩니다. 거기에는 시 장 교환가치가 없어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부채라는 것을 국민의 후 생과 평가를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 투자라는 용어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드리면 OECD 국가 사회주택 비율이 네덜란드가 34% 정도 해요. 1등입니다. 오스 트리아가 23.6%인데 수도 빈에서는 한 44%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PIR이라고 해서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이 한 25 합니다. 이것은 25년 동안 근로자들이 평생 저축해야 집을 살 수 있는 가격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분사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통합 노 조위원장이 처음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잘 고민하셔야 됩니다. LH 물량이 1만 명 있을 때 6만 호 공급을 했습니다, 1년에. 그런데 지금 한 8500명인데 연간 물량이 11만 호, 우리가 총 5년 동안 55만 호 공급을 해야 되는데 다시 연간계획을 보면 26년에 8.12 만 호 해야 되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건축된 것이 8월 말 기준으로 1만 호입니다, 1만 호. 그리고 매입임대가 지금

9000호거든요. 25%가 안 됐어요. 지금 이 와중에 분사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추가질문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승래 그러세요. 아니면 한 2분 더 드릴 테니까 마무리하실래요?

○김영환 위원 이 주제에 대해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승래 다른 주제가 또 있으시지요?

○김영환 위원 예.

29년, 30년에 한번 가면 뒤에 다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LH의 선도적인 공급 물량이 확보가 돼야 수도권 140만 호가 저는 민간과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이 와중에 교차보전 문제를 얘기하면서 법인 간 교차 문제로 바꾸고 있어요. 개발공사하고 자산공사 이렇게 나누는 안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공공기관들 관리의 총책임자입니다. 그런데 LH를 지금 이 상태로 두면, 총과업 예고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수도권에 절대 이 물량을 공급하지 못할 거다, 그리고 임기 내 이 공급 물량을 맞추지도 못할 거다. 그래서 LH 분사 문제에 대해서 부총리께서 정말 특단의 대책으로 대통령께 보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교차보전 문제는 아닙니다. 그 안에서도 회계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해낼 수가 있어요. 지금 공공임대 관련 회계하고 그 밖의 사업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 회계하고 임대 회계하고 따로 나뉘어서 언제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법을 지금 쓰고 있다. 현재하고 분리 이후에……

제가 이 검토를, 따로 한번 보고서를 드릴 테니 LH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국토부장관하고 얘기도 하고 현장에 가서 LH도 만나고, 지금 현장 상황이 어떤지를 한번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잘 정리해야 우리가 공공에 맡겨졌던 물량들을 소화해 낼 수가 있다. 그래서 잘 생각하셔서 대통령께도 잘 보고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승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훈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후보자님, 가상자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할게요.

김용범 정책실장발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 기저에는…… 김용범 정책실장은 블록체인 전문 투자사 해시드의 계열사라고 해야 되나, 해시드오픈리서치의 초대 대표이사였어요. 그런데 왜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을 하려고 했을까? 기존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들이 지분 제한해서 지분을 내놓았을 경우에 해시드의 비축 자금으로 그것을 사들이기 위한 수순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상자산 업계에서. 이게 상당히 사적 동기에서 유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디지털자산 TF 위원들도 반대를 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사후 규제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다들 반대를 했던 거예요. 지금 김용범 실장이 물러났으니까 그런데, 물론 정무위에서 다루겠지만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그거 철폐해야 됩니다.

그다음 가상자산 과세도 재정경제부의 입장은 과세를 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지난번 구윤철 장관의 이야기를 들어 봐도, 과세를 해도 때를 기다릴 필요가 있다. 지금 가

상자산시장은 아직까지 성숙기에 접어들지 않았어요.

그다음 금융투자, 금투세하고도 형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금투세는 별도로 관리하면서 이제 성숙기에 막 오르려고 하는 가상자산에,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있는 이 가상자산 소득에 지금 과세를 하겠다? 그러면 내가 가상자산 투자자라도 굳이 국장에 투자할 이유가 있나요? 미장이나 이런 데, 역외 자금 유출이 뻔히 있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왜 가상자산 과세를 그렇게 서두르는지 모르겠어요. 과세를 하더라도 때를 기다려서 한 2년 정도 유예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니까 그 부분도 후보자께서 면밀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가상자산 투자자가 국내에 한 1140만 정도 됩니까? 국장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더욱더 돈이 많이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과세를 그렇게 시급히 서두를 필요가 없다. 가상자산 소득의 정보가 호주, 유럽, 미국 이런 나라하고 상호공유가 될 수 있는 그 시점까지 기다려서 과세를 해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늦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좀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위원님, 앞부분의 말씀들은 제가 유념하겠고요.

가상자산 관련해서는 저도 추가로 충분히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이게 24년 국회 논의한 이후로 예정돼서 27년에 시행이 되게끔, 그때도 시간을 상당히 미뤄 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통계를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만 전체의 85%가 보유하는 자산의 규모가 500만 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500만 원이 안 되면 저희가 올해 말 기준으로 의제 취득을, 올해 말 가격을 기초 가격으로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올해 말에 그걸 못 하면……

○김상훈 위원 과세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과세할 때. 그래서 이미 올해 가격부터 출발해서 추가로 번 돈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만약에 그것을 증명하지 못하고 새로운 게 없으면 나중에 매길 때 별도의 가격을 발견하기 어려우면 번 돈의 50%까지는 필요경비로 의제를 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50%만 남습니다. 그러면 500만 원 정도가 50% 하니까 250만 원 정도가 이익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기본 공제금액이 250만 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볼 때는 이분들이 대체로 면세점 이하 아니면 대부분 세부담이 미미한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출발하는 게 그 충격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거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소위 때 계속 또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정부 입장에서만 판단하지 말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그것도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승래 고생하셨습니다.

김태년 위원님 질의 안 하시고, 오기형 간사님 안 하시고.

배준영 간사님.

○배준영 위원 후보자님,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된 공운위를 지난번에 했고 그 결과를 발표하셨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재경부에서 했습니다.

○배준영 위원 재경부에서 했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배준영 위원 그러니까 관할이신 거지요, 만약에 부총리가 되시면?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배준영 위원 그런데 제가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릴게요.

인천 공공기관 중 통폐합 대상인 기관이 총 8곳입니다. 그런데 통합기관이 인천에 유치돼 확정된 곳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인천공항서비스가 있고 나머지 항공안전기술원 그리고 인천공항보안공사, 재단법인 건설기술교육원,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인천항보안공사, 인천항만공사, 여기는 전부 통폐합돼서 소재지가 어디로 될지 모릅니다.

후보자님, 지방분권이라는 것도 있고 지방에서 동력을 얻어서 전국이 성장한다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인천도 지방자치로 따지면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LH라든지 도로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각 지역에 본사를 두게 하는 것은 그 지역 가서 세금도 내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런 의미에서 하는데 만약에 인천에서 이렇게 8개 중에 한 곳만 빼놓고 7곳이 말하자면 통폐합된 다음에 브랜치(branch)가 돼 버리면 방금 말씀드린 지방분권과 지방의 활력 증진을 위해서 LH나 도로공사나 이런 기관이 없어지는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얼마나 정말 신중하게 판단하고 여론을 수렴해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8월 24일인데 말하자면 통폐합 발표하기 직전이지요. 제가 해수부장관한테 물어봤습니다. ‘장관님, 전국에 있는 항만공사 합치는 거 찬성하십니까?’ 그러니까 해수부장관이 이랬어요, ‘정부 전체에 어떤 뜻이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재경부장관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공항공사 통폐합을 할 때 국토부에서 반대 의견을 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추후 재검토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의견 수렴도 안 하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신중 검토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 이것도 경영상의 결정 아닙니까? 전국에서 통폐합하고 그러면 노란봉투법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공공기관의 어떤 이전이나 통폐합의 결정 그 자체로는 쟁의 대상이 아닙니다만 그에 따른 배치전환이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준영 위원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된다는 게 제 입장이고요. 그리고 항만공사 같은 경우에는 인천·부산 그리고 울산·여수광양 모든 지역에서 다 반대하는데 어떤 근거로 그렇게 밀어붙이시는지 그것 잘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제가 그때까지는 아직 그 업무를 담당하지 않

아서.....

○배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승래 수고하셨습니다.

재추가질의까지 했습니다.

재재추가질의인데요. 이종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종욱 위원 예.

○위원장 조승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종욱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서 박수영 위원님이 하신 거와 유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후보자님, 질문은 아니니까 그냥 쪽 들으세요.

저는 후보자님이 청문회를 만약에 통과하게 되면 경제부총리로서 경제 컨트롤 타워 기능이 가능하겠나 이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이 정권은 그것을 별로 원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청와대 쪽에서 대부분의 정책을 직접 다 조정하고 발표를 하고 있고 경제부는 어떤 역할도 권한도 수단도 의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산 기능도 없지요. 예산처는 정치인 장관이 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형일 부총리가 쉽게 그렇게 업무 협조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세제 하나 가지고 있는데 사실 세제는, 지금 저는 이것은 한마디 꼭 하고 싶은데 세제는 국민 생활의 어떤 등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일거수일투족, 이 발 들어라, 왼손 들어라 이런 식으로 온갖 것을 다 지시하는 것 같아서 저는 이것은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왜 발탁을 했느냐? 똑똑하고 말 잘 듣는 부총리라서 발탁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상 기재부는 해체당했습니다. 예전에 민주당의 어떤 의원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기재부가 정권 바뀌고 추경 채원 50조 원 숨겨 났다 이런 지적과 함께 기재부의 보수적인 재정 운용, 과도한 권한 이것을 비판하면서 예산 기능을 떼 내야 되겠다 이렇게 공공연히 비난했습니다. 그렇게 예산처는 분리됐지요. 그리고 정치인 장관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존경하는 정태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료 권력이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저도 공감하는 바가 크고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게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윤철 부총리를 뒤돌아보면 지금까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받아쓰기 부총리, 지시하면 방법 찾아 주는 부총리 이 정도로 이해가 되고 어떤 전문 관료로서 청와대의 뜻과 달리 이론적이나 현실적으로 바른길을 가도록 하는 그런 역할은 별로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어떤 기준에 알고 있던 경제 상식과도 안 맞고 일반 국민들도 이해 못 하는 그런 정책이, 기본 팩트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정책들이 막 밀어붙여지고 그 과정에서 재정부 목소리는 안 들린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1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승래 예, 1분 더 드리십시오.

○**이종욱 위원**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를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형일 후보자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 재경부가 허물 어지고 있다, 후배들이 다 보고 있고 어떤 말은 안 하지만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정경제부의 전통이 걸려 있고요 국가 경제가 걸려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똑똑하고 말 잘 듣는 그런 관료였는데 이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이제 진짜 주체적으로 본인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자리에 올랐습니다. 본인 색깔을, 지금까지 숨겨 왔던 이형일 부총리후보자의 색깔을 드러내고 본인이 재경부의 앞으로의 존립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후배들한테 어떤 모습을 보여 줘야 될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뼈아픈 지적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잘 새겨서 제가 재경부에 몸담고 30년 동안 계속 다른 부처 없이, 파견은 잠깐 갔다가 재경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전부터 재경부가 어떻게 일을 해 왔는지 꼭 봐 왔습니다. 예산권이 있던 예산권이 없던 그 모든 시절을 같이 봐 왔고 계속 총괄과 조정과 조율 기능을 꼭 살펴봤습니다. 재경부다운 모습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승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김상훈 위원** 1분만.

○**위원장 조승래** 김상훈 위원님.

○**김상훈 위원** 후보자님, 부동산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보세요.

지금 대출 규제하고 있잖아요. 국회 출입하는 언론인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신혼부부들에게 그것 굉장히 혐오스러운 정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 영끌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본인들 형편에 맞는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서 맞벌이 부부라도 대출 한번 얻어 보려고 하는데 그나마 그렇게 해도 DSR 규제 등등으로 해서 주택 구입이 여의치가 않아요. 그 대출 규제 오히려 부동산 난을 심화시키는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세제 재정경제부, 주택 공급 국토교통부, 대출 금융위, 여러 부처가 정말 한번 머리를 맞대 가지고 전세 세입자, 임대인, 주택 매도인·매수인 입장에서 다시 한번 부동산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부처 관계자들끼리 모여 가지고 머리 한번 맞대 보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승래** 안상훈 위원……

○**박수영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승래** 두 분만 하시면 되니까요. 그러면 순서를 정하셔서, 누가 먼저 하시겠어요?

안상훈 위원님 먼저 손 드셨으니까 안상훈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박수영 위원님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3분 드려요?

○**안상훈 위원** 5분 켜 놓으시고 빨리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조승래** 예, 5분 드리세요.

○**안상훈 위원** 제가 교수 직업병이 있어 가지고 세 시간은 돼야 말이 끝나는데 시간 제한 때문에 몹시 늘 난감합니다.

미래세대의 행복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행복,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된다면 뭐 고르시겠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우리 국민의 행복을 고르겠습니다.

○**안상훈 위원** 특히 미래세대 행복 고르신 거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안상훈 위원** 만약 부총리가 되시면 지금 많은 선배·동료 위원님들이 여야 할 것 없이 지적하신 부분이 부총리로서 역할을 든든히 해 줬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는 너무 유하고 능력은 있지만 본인 소신이 없어 보인다는 얘기가 오늘 굉장히 주된 내용들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바뀌시면 될 것 같아요.

미래세대 재정을 헌법에 박아서 챙기는 나라도 있고 미래세대 움부즈만 하는 나라도 있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지극히 현세대 중심으로 재정이 굴러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5년짜리 대통령제가 들어선 이후에 이 문제가 더 고착이 되고 심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선거 자주 있지요. 또 5년짜리 대통령은 그 안에 모든 것을 뜻대로 하고 싶어 하다 보니까 또 인기를 얻기 위해서는 포퓰리즘 쪽으로 경도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네덜란드 댐 막아서 나라 구한 소년 얘기 아시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안상훈 위원** 그 역할을 지금 후보자에게 요청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건 아마 여야 위원 전체가 다 똑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오기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잠깐 이어 가지고 좀 덧붙이겠습니다.

의무지출 폭증, 기초연금 하후상박 그것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혹시 지금 대한민국의 복지 프로그램이 몇 개나 있는지 아시나요? 중앙정부에 몇 개, 지방정부에 몇 개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정확하게 헤아리기는 어려운 상황……

○**안상훈 위원** 대충 한번 짚어 보십시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한 수백 개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안상훈 위원** 제가 수석 할 때 쯤 것만 중앙정부 복지 프로그램이 1000개가 넘습니다. 중앙정부는 많게는 8만 개, 적게 잡아도 2만 개 정도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지금 재정은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데 한정된 예산 가지고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을 정도로 무수한 복지 프로그램이 난무하고 있는 겁니다. 중복 무지 많아요.

우리가 한정된 예산이라고 그러면 기초연금 하후상박도 같은 관념입니다마는 어려운 쪽에, 꼭 필요한 쪽에 먼저 하고 그런 쪽으로 돼야겠지요. 지금까지 복지가 발전하면서 그냥 마구잡이로 된 게 쌓여서 지금 이 모양이거든요. 이것 두지 않고서는요 제가 보기에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복지 구조조정, 그러니까 사회보험료 올린다든지 세금 팍팍 올리는 게 힘든 상황이면

저는 이것 반드시 해야 되고 이것을 사회부처 복지부에 맡겨 뒀서는 안 될 문제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부 재정 문제거든요. 국채 발행하고 미래세대 빚 넘기는 것을 언제까지 할 겁니까? 저는 학자 때부터 이 문제를 계속 지적을 했고, 저는 복지 확대주의자예요. 하지만 예산이 한정됐으면 긴급한 것부터, 우선순위 높은 것부터 해야 되고 지금 누더기 중복 복지를 진짜 효율적인 것으로 바꿔 주는 그런 구조조정부터 해 줘야 됩니다. 이것 복지부, 고용부, 사회부처들 못 해요, 왜냐하면 자기들 예산 깎인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 재정 당국에서 꼭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지금 예산 당국에서 장기재정추계 하고 있지요? 40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연금 재정재계산 제가 아까 70년 왜 하는지 얘기했는데 저도 법안을 낼 생각이요 이제는 복지 국가로 가고 있는 우리나라라면 장기재정추계도 70년 하고 그리고 D4에 포함되는 사회보험 쪽의 미적립 부채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재정 당국에서 관리를 하는 일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명명백백하게 나침판으로 제공돼야지 정치인들 정신 차리고 국민들도 뭘지 위기감 느끼고 미래세대에 빚 넘기는 것 그만둘 거라고 저는 봅니다.

꼭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승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영 위원님, 2분 드릴까요?

○박수영 위원 3분만 주세요.

○위원장 조승래 예, 3분 드리십시오.

○박수영 위원 후보자님, 제가 다시 기회가 안 올 줄 알고 아까 마무리 말씀을 드렸는데 존경하는 윤후덕 위원님 질의를 중요한 것을 하셨는데 답을 안 하셔서 제가 조금 더 팔로우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마이크 잡았습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이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박수영 위원 차관 재임 중에 열 번의 위원회가 있었는데 딱 한 번 참석하셨어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한 번 갔습니다.

○박수영 위원 그날이 몇 월 며칠인지 아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박수영 위원 며칠인지 아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5월 달로 기억합니다.

○박수영 위원 그렇지요. 5월 28일 날 참석하셨습니다.

5월 28일이 왜 중요한 날이나? 5월 27일 날 삼전닉스 단일종목 ETF가 출시가 되었고 그날이 지방선거 6일 전입니다. 삼전닉스 단일종목 ETF와 연금이 국내주식 비중을 올리기로 한 결정 이것이 6월 3일 지선을 겨냥한 거라는 의혹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안 가던 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5월 28일 날 가서 가지고 국내주식 비중을 14.9%에서 20.8% 상향하는 결정을 하셨습니다.

플러스 아까 윤후덕 위원님 질의하셨던 전략적 자산배분(SAA)이라고 아시지요? SAA ±3%였던 것을 올렸는데 아까 질의하시는데 답은 못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여기에 두 가지 질문 드립니다. 하나는 국내주식 비중을 14.9%에서 20.8%로 올리기로 한 결정이 잘된 결정이었나, 밝히지는 못한다고 하셨지만 잘된 결정이었나, 그다음에 SAA $\pm 3\%$ 를 $\pm 7\%$ 로 올렸다고 하는데 그것 잘한 결정이었나, 그래서 주식이 올라 가지고 주식 때문에 피해를 본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그 결정 때문에 주식이 계속 오르는 바람에 국민연금이 기계적 리밸런싱을 못 했습니다. 기계적 리밸런싱 하라고 단서조항 달았다고 한 것은 비밀이라고 하면서 아까 또 얘기하셨지요. 빠져나갈 것만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게다가 4년 동안 정보공개 안 하겠다고 그 자리에서 결정하셨지요? 이것도 위험한 겁니다. 모든 국민들이 지금 지켜보고 6일 뒤에 있는 지선 때문에 이런 무리한 결정을 했다고 보는데 그 결정에 직접 참여해서 결정하셨고 그나마 그것도 비공개 결정을 하신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제가 아까 얘기했던, 전직 부총리들의 전철을 밟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미 저질러진 거지만 이것도 매우 위험한 짓을 하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것은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앞으로 앞으로 다시는 이런 무리한 짓 하지 말고 '노'라고 대답할 때는 '노'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재정경제부의 수장이고 우리의 경제총수지 기재부차관이 가 가지고 이걸 다 동의해 주고 오고 이런 하수인의 역할을 하라고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부총리 임명되시면 정말 제대로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제가 말씀 주신 것에 대한 답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수영 위원 하세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마무리 말씀인데 죄송합니다만 매년 5월 하순에 그다음 5년간의 자산배분계획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게 특별한 거랑 관계된 게 아니고, 아마 찾아보시면 매년 5월 하순쯤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차관이 가는, 중간에는 다른 일정도 많이 있지만 이게 그 한 해의 가장 중요한 회의이기 때문에 주로 5월의 회의는 계속 갔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갔습니다. 그래서 다른 회의는 대참을 시키거나 그렇게 했지만 갔다는 것이지 이것에 관해서 특별하게 어떤 날짜와 연관되는 그런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4년 비공개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도 전략자산배분 할 때는 계속 회의록을 비공개를 쪽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년 뒤에 공개하라는 것은 이 결정이 그 순간에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류한 것이지, 이 건만 한 게 아니고 해마다 해 왔다는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요.

기계적인 리밸런싱은 비밀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날 공개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목표 비중을 올리고 그렇지만 리밸런싱 유예는 이제 안한다, 이게 같이 나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된 내용에는 그 당시 주식시장이나 여러 가지 감안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미 목표 비중에 이것을 올리지 않으면 바로 즉각적인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올려 놓고 이제 리밸런싱을 시작하라 이런 의미로, 왜냐하면 상반기 때 리밸런싱을 아예 유예를 했기 때문에 비중

자체가 의미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이제는 비중을 만들고 그것을 넘어가면 리밸런싱 하라 이런 의미로 해서 좀 돌아가는, 왜냐하면 올해 상반기 때 워낙 주가가 폭등해서 대응을 선불리 하기,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저는 이해하고 이제는 그때부터 한 6개월 봤으니까 의사결정을 내린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어쨌든 위원님 말씀처럼 직무를 만약에 수행하게 된다면 수행할 때 항상 여러 가지를 잘 살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승래 알겠습니다.

윤후덕 위원님, 질의하실 게 있으신가요?

○윤후덕 위원 예, 간단히 할게요.

○김태년 위원 그만해요. 뭘……

○윤후덕 위원 아니, 간단히 할게요.

○위원장 조승래 예.

○윤후덕 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 중에서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손을 들었어요.

이제 가계부채가 2000조를 돌파한 상황이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윤후덕 위원 그런데 금년 7월 16일하고 8월 27일에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인상했어요. 불과 한 달, 두 달 만에 인상을 한 거예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연이어 인상했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러니까 50bp까지 인상이 됐어요.

그런데 한국은행이 1/4분기 말에 금융기관에 대해서 이런 분석을 한 게 있어요. 가계하고 기업대출의 잔액으로 볼 때 25bp 인상할 때 연간 가계가 3.3조 정도 이자 부담이 증가하고 중소기업은 3.0, 그러니까 추가로 3조 원의 이자 부담이 증가한다 이렇게 분석을 했더라고요. 2번의 인상을 했기 때문에 50bp를 하면 이것의 2배예요. 그러니까 가계는 연간 6.6조 그리고 중소기업은 연간 6조 원의 이자 부담이 추가로 부담이 되는 거예요. 서민들의 부담은 피눈물이 나는데 이 돈을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추가적인 이자는? 은행으로 들어가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은행은 조달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것을 올리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거시경제로 번져 나가는……

○윤후덕 위원 단순히 보면 은행한테 추가적인 이자의 이익이 생기는 거지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 추가적으로 이익이 생기는 데에는 경제부총리가 되시는 이런 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사회적 환원을 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봐요. 외국에 다른 사례도 있어요. 추가 이자 이익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회적으로 환원하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은행에 대해서 횡재세를 부과하자 그런 논의도 외국에서는 있었어요. 후보자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은행도 조달금리가 올라가고 대출금리가 같이

올라가면 결국에 스프레드가 같아지면 그게 추가적인 이익은 없겠지만 아마 시차가 생긴 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익이 일부 쌓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행 이익이 쌓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은행은 저희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산업이라서 지속가능한 형태를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속에서도 포용금융이라는 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확대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제가 알기로는 은행이 미소금융이나 또는 중저신용자 대출, 새희망홀씨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포용금융 상품을 하고 있는 게 있고요. 또 감독 당국 입장에서 볼 때는 하여튼 이것과 관련된 제도와 또는 평가체계 구축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함께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수익성에 대해서 산업으로서 존재의 가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용금융도 같이 확대해 나가서 말씀하신 것처럼 취약차주가 갖고 있는 어려움을 함께 보듬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승래 마무리해 주시지요.

○윤후덕 위원 마지막인데 마이크를 안 켜어요. 마이크 넣어 주면 내가 마지막 얘기할게요.

○위원장 조승래 충분히 드렸는데……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윤후덕 위원 예, 마지막 얘기하께.

○위원장 조승래 넣어 주세요.

○윤후덕 위원 내가 얘기하려고 손 들었어요.

이제 경제부총리가 되겠지요. 경제부총리라는 막중한 직책은 한국 경제의 마지막 안전판이고 그리고 최종책임자입니다. 꼭 원칙대로 그리고 자기 소신을 가지고 한국 경제를 관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감사합니다.

유념해서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승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 그래서 배준영 간사님과 오기형 간사님 각각 1분씩 드릴테니까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시지요.

○배준영 위원 후보자님, 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청문회 결과는 저희가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예전에 통계청장일 때 통계 조작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소신 있는 모습을 보여 주셨듯이 앞으로도 옳은 것은 옳은 거고 그른 것은 그른 거다라고 확실히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을 그렇게 대하고.

또 국민의 목소리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국민의 목소리를 잘 듣는다는 것은 저도 야당 간사로서 말씀드리지만 야당의 목소리를 잘 들으셔야 돼요. 지난번에 예를 들어

세계개편 할 때, 개편안 발표할 때 기자들한테는 폴텍스트를 다 배포하시면서 저희한테는 전혀 연락을 안 하셔서 제가 나중에 연락드려서 보고받은 적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야당에게도 또 국민에게도 열린 마음으로 투명하게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각오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오늘 여러 많은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 하나하나 잘 깊이 새겨서 업무를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승래 오기형 간사님.

○오기형 위원 저는 더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야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하는 것들은 실제 많은 고민과 그동안 논쟁의 연장선에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도 당과 상관없이 공감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그 취지에 맞게 앞으로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바로 또 논쟁이 시작되기 때문에 관련된 의제나 법안이나 쟁점에 대해서 미리미리 국회 상임위 위원들과 당과 상관없이 두루 상의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당부드립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승래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후보자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종료하기에 앞서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마무리발언을 해 주시는데 혹시 답변 과정에서 내가 이것은 꼭 해야 되는데 못했다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마무리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존경하는 조승래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긴 시간 청문회 과정에서 많은 조언과 격려, 당부의 말씀을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엄중한 현재 경제 상황에서 재정경제부의 역할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주신 소중한 말씀들을 항상 유념하고, 국회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경청하면서 맡겨진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승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 및 도덕성을 중심으로 공직후보자의 적격성을 검증했습니다.

후보자에 대해서는 통계청장 및 재정경제부차관 등 주요 보직을 거치며 거시경제정책, 금융정책 및 정책 조정에 있어 해당 공직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역량을 갖추었다는 평가가 있었고, 시장경제의 원칙을 존중하면서 민생 안정과 취약계층 보호를 병행하고 첨단 산업 육성, 지역·세대 간 격차 완화, 물가 및 가계부채 관리 등의 과제를 적극 추진하며

주택공급 확대, 공공기관 개혁 등의 현안에 대응하겠다는 입장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반면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과 국민연금 국내 주식 투자 비중 조정 등 주요 정책의 결정 과정에서 후보자의 조정 역할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성장 투자와 재정건전성 간의 균형 원칙, 국가채무를 감안한 미래대응기금의 운용 기준 등에 있어 보다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부동산 세제정책의 경우 거주 중심 정책과 공정과세 방향에는 공감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차등과세의 임대시장에 대한 영향과 후보자의 주택 보유 방식에 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종합하면 후보자는 경제·재정 분야의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갖추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보다 더 경제정책 책임자로서의 소신을 분명히 해야 될 것에 대한 주문도 또한 같이 있었습니다. 이견 후보자의 노력이 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오늘 청문회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지적과 의견을 깊이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별히 위원님들이 이러저러한 조언과 충고를 해 주셨는데 그거는 각각의 경험과 철학에 바탕해서, 각기 다른 주문이긴 합니다만 그런 다양한 주문들이 모여져서 하나의 그림을 만들고 하나의 방향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감안해 주시고, 배준영 간사가 지적하신 것처럼 부총리가 되시고 하면 부총리뿐만 아니라 재정경제부 직원들이 야당 위원들에게도 또 보좌관들에게 적극적으로 정책을 설명하고 의견을 구하는 노력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박수영 위원님, 윤영석 위원님, 이광재 위원님, 김상훈 위원님 등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서면질의 및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간사위원들과 협의한 결과 17일 09시 30분에 전체회의를 열어 교섭단체 간 협의에 따라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이날 국정감사계획서 그리고 대미투자에 대한 비공개 보고까지 같이 진행하는 전체회의가 열린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청문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 검증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이형일 후보자,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39분 산회)

○출석 위원(21인)

강민국 김남준 김상훈 김영환 김태년 문진석 박수영 배준영 안도걸 안상훈
오기형 윤영석 윤후덕 이광재 이종욱 이준석 이춘석 임이자 정성호 정태호
조승래

○청가 위원(1인)

김성환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전문위원 유인규

○출석 공직후보자

이형일

【보고사항】

○의안 회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9. 4. 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0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9. 4. 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0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9. 4. 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09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9. 4. 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1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9. 4. 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1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9. 4. 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115)

이상 6건 9월 7일 회부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9. 7. 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9. 7. 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125)

이상 2건 9월 8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9. 8. 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1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9. 8.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1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9. 8.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180)

이상 3건 9월 9일 회부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9. 9. 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9. 9.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3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9. 9. 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5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9. 9. 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9. 9. 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58)

이상 5건 9월 10일 회부됨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9. 10. 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7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9. 10. 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9. 10. 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9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9. 10. 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3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9. 10. 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317)

이상 5건 9월 11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9. 11.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3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9. 11. 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35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9. 14. 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359)

이상 3건 9월 14일 회부됨

○청원 회부

국민을 잠재적 투기꾼 취급하는 ‘2026년 부동산 세제개편안’의 전면 철회에 관한 청원

(2026. 9. 10. 강경원 외 52,342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344)

9월 11일 회부됨

코인과세 2년 유예에 관한 청원

(2026. 9. 13. 조상혁 외 50,747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347)

9월 14일 회부됨

○행정입법 제출

구분	행정입법명	공포번호	개정형태	소관부처
대통령령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개정	재정경제부
총리령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2151호	일부개정	기획예산처